

“5·18 정신”을 다시 생각한다

새로운 성찰적 시각에서

- 일시 : 2008년 05월 26일(월)
- 시간 : 오전 09:40 ~ 오후 6:00
- 장소 : 한국언론재단 19층 기자회견장

주관 : 성공회대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연구소, 전남대 5·18연구소
주최 : 성공회대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연구소, 전남대 5·18연구소
(재)5·18기념재단, 학술단체협의회
후원 : (재) 5·18 기념재단

5·18 정신을 다시 생각한다

새로운 성찰적 시각에서

05월 26일(월)

실무연락처 : 성공회대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연구소
서울 구로구 항동 1-1 성공회대학교 열림관 3층
전화 : 02-2610-4723 팩스 : 02-2610-4296
이메일 : democracy@skhu.ac.kr
홈페이지 : http://www.democracy.or.kr

“5·18정신”을 다시 생각한다

새로운 성찰적 시각에서

- 일시 : 2008년 05월 26일(월)
- 시간 : 오전 09:40 ~ 오후 6:00
- 장소 : 한국언론재단 19층 기자회견장

주관 : 성공회대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연구소, 전남대 5·18연구소
주최 : 성공회대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연구소, 전남대 5·18연구소
(재)5·18기념재단, 학술단체협의회
후원 : (재) 5·18기념재단

< 인 사 말 >

5·18정신을 다시 생각하는 재성찰하는 기회

해마다 5월이면 광주에서 개최되는 학술행사에서 많은 선생님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 99년을 끝으로 이 곳 서울에서는 선생님들과 함께 한 자리가 없었습니다. 다시 이 곳에서 많은 분들을 뵈게 돼서 반갑습니다.

2000년 이후 5·18기념행사 주간에 광주에서 개최되어온 학술행사는 많은 성과를 거두어 왔으나, 다양한 시각을 담지 못하고 혹 관례화되고 있지는 않는지 하는 우려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의 성과를 더 확대하고, 5·18민중항쟁의 전국화 및 세계화라는 핵심 과제를 수행하고, 참여 공간을 더욱 확장시키기 위해 이 곳 서울에서 학술심포지움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논의되고 연구되어 온 내용을 더 발전시켜 다양한 눈으로 바라보는 이번 학술심포지움은 5·18 30주년을 앞둔 지금,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일이며, 그 내용을 더욱 더 풍부하게 하는 것은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의 역할입니다.

5·18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부족하나마 연구를 지원하고 있는 우리 재단은 5·18연구 지평을 더 넓히기 위해 선생님들의 든든한 지원자와 파트너로 함께 할 것입니다.

이번 학술심포지움의 마당을 깔아주신 성공회대학교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연구소 조희연 소장님과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최석만 소장님,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고생하고 계시는 연구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신 많은 선생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며, 이번 학술심포지움이 5·18정신을 다시 생각하는 재성찰의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08. 5. 26.

윤광장
(재) 5·18기념재단 이사장

‘5·18 정신’을 다시 생각한다 - 새로운 성찰적 시각에서 -

행사 일정

개회식 (09:40 - 10:00)

인 사: (재) 5·18기념재단 이사장, 성공회대 총장, 전남대 5·18연구소장

제1부 (10:00 - 12:00) : ‘다른 지점’에서 본 5·18민주화운동

- 발표 1. 영남에서 본 5·18: '국가권력에 의한 배제'(노진철 경북대 사회학과 교수)
- 2. 전북에서 본 5·18: '문화 예술적 재현 및 수용의 양상'
(유제호 전북대 프랑스어문학과 교수)
- 3. '88만원세대'에게 '5·18광주'는 ... 희미하고 무덤덤한 과거사?!
(김보현 성공회대 민주자료관 교수)
- 사회: 최석만(전남대)
- 토론: 조현연(성공회대), 강내희(중앙대), 최정기(전남대)

오찬과 휴식 (12:00 - 13:00)

제2부 (13:00 - 15:30) : ‘다른 비판의 눈’으로 본 5·18민주화운동 (I)

- 발표 1. 여성주의자가 본 5·18: '후기 국민국가(post-national)의 내전'(정희진 이화여대 강사)
- 2. 광주민중항쟁의 탈혁명화: '지역과 전국의 공간정치학의 관점에서'
(원영수 진보평론 편집위원)
- 3. 동요하는 네셔널리티, 황폐화되는 5.18의 기억
(김진호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연구실장. 목사)
- 4. '신보수정권' 앞에서, '급진민주주의'자가 본 5·18
(조희연 성공회대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연구소 소장)
- 사회: 정해구(성공회대)
- 토론: 안진(전남대), 정호기(성공회대), 박명림(연세대), 김원(한국학중앙연구원)

휴식 (15:30 - 15:50)

제3부 (15:50 - 18:00) : ‘다른 비판의 눈’으로 본 광주 5·18민주화운동 (II)

- 발표 1. 코문주의적 시각에서 본 5·18: 단절의 혁명, 무명의 혁명
(이진경 서울산업대 교수·조원광 '수유+너머' 연구원)
- 2. 자율주의 입장에서 본 5·18: '광주민중항쟁과 제한권력'
(조정환 자율평론 상임강사)
- 3. 아나키스트적 시각에서 본 5·18(김성국 부산대 사회학과 교수)
- 사회: 백원담(성공회대)
- 토론: 신종화(전남대), 이성백(서울시립대), 김정현(서강대 대학원)

자료집 목차

‘5·18 정신’을 다시 생각한다 : 새로운 성찰적 시각에서

제1부 (10:00 - 12:00) : ‘다른 지점’에서 본 5·18민주화운동

- 발표 1. 영남에서 본 5·18: '국가권력에 의한 배제'-----1
(노진철 경북대 사회학과 교수)
- 2. 전북에서 본 5·18: '문화 예술적 재현 및 수용의 양상'-----14
(유제호 전북대 프랑스어문학과 교수)
- 3. '88만원세대'에게 '5·18광주'는 ... 희미하고 무덤덤한 과거사!-----27
(김보현 성공회대 민주자료관 교수)

오찬과 휴식 (12:00 - 13:00)

제2부 (13:00 - 15:30) : ‘다른 비판의 눈’으로 본 5·18민주화운동 (I)

- 발표 1. 여성주의자가 본 5·18: '후기 국민국가(post-national)의 내전'-----42
(정희진 이화여대 강사)
- 2. 광주민중항쟁의 탈혁명화: '지역과 전국의 공간정치학의 관점에서'(자료별첨)-53
(원영수 진보평론 편집위원)
- 3. 동요하는 네셔널리티, 황폐화되는 5.18의 기억-----59
(김진호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연구실장. 목사)
- 4. '신보수정권' 앞에서, '급진민주주의'자가 본 5·18-----72
(조희연 성공회대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연구소 소장)

휴식 (15:30 - 15:50)

제3부 (15:50 - 18:00) : ‘다른 비판의 눈’으로 본 광주 5·18민주화운동 (II)

- 발표 1. 코문주의적 시각에서 본 5·18: 단절의 혁명, 무명의 혁명-----118
(이진경 서울산업대 교수·조원광 '수유+너머' 연구원)
- 2. 자율주의 입장에서 본 5·18: '광주민중항쟁과 제한권력'-----136
(조정환 자율평론 상임강사)
- 3. 아나키스트적 시각에서 본 5·18-----154
(김성국 부산대 사회학과 교수)

(제1부) 오전 10시 00분-12시 00분

‘다른 지점’에서 본 5·18민주화운동

* 발표 :

1. 영남에서 본 5·18: '국가권력에 의한 배제'
(노진철 경북대 사회학과 교수)
2. 전북에서 본 5·18: '문화 예술적 재현 및 수용의 양상'
(유제호 전북대 프랑스어문학과 교수)
3. '88만원세대'에게 '5·18광주'는 ... 회미하고 무덤덤한 과거사?
(김보현 성공회대 민주자료관 교수)

* 토론 :

조현연(성공회대), 강내화(중앙대), 최정기(전남대)

* 사회 :

최석만(전남대)

영남에서 본 5·18: '국가권력에 의한 배제'

노진철
(경북대 사회학과 교수)

1. 서론

국가가 '광주사태'를 '광주민주화운동'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한 일은 우리 사회에 정치적 민주화가 이루어졌음을 알렸던 상징적 사건이다. 5·18 유혈진압으로 권력을 잡은 군사정권인 전두환 정부에서 5·18은 입에 담지도 말아야 할 '비밀부호'였으나(김성, 2000), 6·10민주항쟁의 결과로 실시된 직접선거를 통해 집권한 노태우 정부는 5·18을 처음으로 '민주화운동'으로 호명했다.¹⁾ 김영삼 정부는 민주화운동의 법적 정당성 부여와 국가기념일 제정을 통한 공식적 승인을 했으며, 이로부터 진행된 과거청산과 역사바로세우기는 '국가전복의 폭동'으로 규정되었던 5·18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이었다. '5·18정신'은 국가폭력, 즉 국가강제력에 의한 부당한 압제에 짓밟힌 민주주의와 인권, 정의를 지키기 위해 일어섰던 의로운 시민들의 항거이자 폭압적인 군부독재에 대항한 투쟁으로 추앙되었다.

5·18정신에 내포된 민주주의와 인권, 정의는 모든 인류가 향유해야 할 보편적 가치이다. 이에 상응하게 광주시민과 진보적 지식인들은 전 국민이 5·18정신에 대한 자각과 긍지를 공유하기를 기대한다. 사실 그것을 쟁취하기 위한 수많은 광주시민의 희생은 80년대와 90년대 초까지 전국적으로 전개된 민주화운동의 추동력이었고 같은 시기 대도시를 중심으로 시민사회의 형성에 이바지하였다. 특히 1987년 6월항쟁과 7~9월의 노동자대투쟁, 그리고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은 국가권력에 대한 저항의 정당성을 광주항쟁으로 이어진 민주화운동의 기억에서 찾았다. 그리고 80년대 후반과 90년대 초반 등장한 주민운동, 환경운동, 여성운동, 도시공동체운동, 교통운동, 소비자운동, 통일운동 등 시민운동은 국가로부터 독립된 시민사회의 상을 국가권력에 대항했던 광주항쟁에 연결시켰다.

국가기념일 지정 전 5월 18일은 전국의 모든 대도시에서 항의집회와 시위대가 경찰의 원천봉쇄와 충돌하는 등 군부독재의 억압에 대한 저항의 뜻을 기리는 날이었다. 시민·사회단체들과 대학총학생회는 시내중심가와 대학가에서 5·18정신과 6월항쟁정신을 기리는 기념식, 시민대회 등을 통해 민주화운동, 노동운동, 시민운동 등 사회운동의 활성화 계기로 삼았다. 그러나 1997년 기념일 지정 후 광주지역은 민관이 어우러져 대동한마당, 강연, 학술토론회 등 5·18정신의 계승 열기로 여전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지만, 다른 광역자치단체들은 정부가 자체적인 기념식을 가지도록 권고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기념식을 갖고 있지 않다(동아일보, 1997.05.18). 광주가 '민주화운동의 성지'로서 전국적으로 인정받기

1) 노태우 정부는 1988년 '민주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기념사업을 주관하도록 했다.

를 원하면 원할수록, 다른 지역에서는 '5·18정신'을 기리는 열기가 점점 더 식어가고 있다.²⁾ 오히려 각 지역은 지역의 민주화운동 사례를 찾아내어 '5·18정신'을 대체할 수 있는 지역 민주정신의 역사성을 기리는 방향으로 이행하고 있다. 대구는 1999년부터 '대구정신'을 기리는 2·28민주의거기념식과 기념공원 조성, 인혁당사건 피해자를 기리는 4·9제와 민주동산 조성 등 기념사업을 벌이고 있고, 부산도 1999년부터 '민주화 성지'로 규정하고 10·18부마항쟁정신을 기리는 부산민주공원 조성과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을 벌이고 있다. 마산은 '마산정신'을 기리는 3·15마산의거기념식(2000)과 3·15국립묘지 조성(2003)에 나섰다.

민주화 이후 조성된 망월동 국립묘지는 군부독재와 시민학살의 과거로부터 오는 억압과 탄압, 죽음과 고통의 흔적들이 현존하는 장소이다. 여기서 개최되는 기념식은 영남의 민주화운동 기념식들과는 달리 각 정당의 정치지도자들이 선거철만 되면 호남의 민심잡기와 정치적 입지강화를 기대하며 풀리는 정치적 유예공간이다. 지난 17대 대선에서도 대선후보자들은 이 정치적 유예공간을 이용했으며,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은 '5·18정신의 적자'임을 주장하며 호남표 사냥에 나섰다.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영남 사람들은 5·18을 지역감정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정치적 사건으로 간주한다.³⁾ 나아가 그들은 호남에서는 정치인들이 5·18을 악용하여 당선된다고 간주함으로써 한나라당에 표를 몰아주는 자신들의 투표행위를 정당화한다.

여기서는 광주민주화운동 그 자체의 성격이나 그 영향에 대한 분석을 하지는 않는다. 그보다는 광주항쟁 이후 전두환 정부에서 진행된 국가권력에 의한 배제와 김영삼 정부 이후 국가권력에 의한 과거청산과 역사바로세우기의 형태로 진행된 배제를 다룬다. 피해자로서든 가해자로서든 국가강제력에 의한 시민학살과 인권탄압의 기억은 그 흔적이 그들의 삶 속에 남아있는 한 과거완료형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이다. 그런데 왜 광주에서는 '광주의 아픔'이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반면, 광주를 벗어난 다른 지역에서는 과거완료형으로 된 것일까? 왜 5·18은 국가가 민주화운동으로 승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지성과 지역감정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 왜 다른 지역에서는 5·18특별법 제정과 5·18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적 처리를 호남지역의 한풀이로만 인식하는 것일까? '영남에서 본 8·15'는 호남 밖의 다른 지역에서는 8·15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하나의 이념형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1977년의 한 여론조사는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보는 사람이 광주에서는 66.8%인데 반하여 다른 지역은 평균 46.8%였고, 대구·경북은 36.2%에 불과하여 지역별로 현저한 격차를 보였다(김재균, 2000). 최근 5·18기념재단이 2006년부터 전국 16개 시·도민 만20세 이상의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중 5명은 5·18을 민주화운동, 3명은 민주항쟁으로 인식했으나 2명 정도는 여전히 폭동, 사태로 부정적으로 인식했다(자료출처: 무등일보).

	민주화운동	민주항쟁	폭동	사태	인식규명		
					미흡	대부분규명	완전규명
2006	47.4	24.8	10.2	10.1	60.9	21.8	1.6
2007	41.9	34.2	10.2	6.7	64.0	26.5	-
2008	46.5	29.5	9.0	6.6	66.2	23.7	1.9
평균	45.3	29.5	9.8	7.8	63.7	24.0	1.8

3) 이것은 호남 사람들이 지역감정의 원인으로 지역간 불균등 경제정책을 거론하는 것과는 판이하게 다른 접근시각이다(영남일보, 1998.10.12).

2. 5·18에 대한 국가권력에 의한 배제

프랑스 사회학자 모리스 알바크(Halbwachs, 1991; 50이하)에 따르면 과거는 객관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서 구성원들 간의 소통, 즉 사회적 구성들을 매개로 기억된다. 즉 기억은 과거의 경험이 전승된 것이 아니라 현재에서 과거가 재구성된다. 관찰자는 일상생활의 영역에서 여러 시기를 거쳐 형성되거나 새롭게 변형된 형태로 나타나는 집단기억을 '살아있는 역사'로 재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집단기억은 오직 그 집단의 내부에서만 유효할 뿐이며 타 집단의 집단기억과는 필연적으로 갈등관계에 놓인다.

5·18에 대한 집단기억은 김영삼 정부에서 시작된 과거청산과 역사바로세우기, 그리고 김대중 정부 및 노무현 정부로 이어진 과거사 진상규명 등 국가권력이 주도한 역사의 재구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국가가 신군부세력에 의해 잘못 사용된 물리적 강제력에 대한 재평가를 시도하고 있다. 즉 국가가 과거 국가강제력의 사용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함으로써 집단기억을 불러내고 있는 것이다. 처음 검찰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강압적 권력론을 대변하여 국가권력과 물리적 강제력을 동일시한 데 반하여,⁴⁾ 사법부는 국가권력과 권력의 수단인 물리적 강제력을 구분하여 성공한 쿠데타라 하더라도 실정법을 위반한 국가강제력의 불법적 사용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사법적 판단은 우월한 국가강제력을 권력의 수단으로 인정은 하지만 실정법에 의한 제한을 가할 수 있다고 보았다.

정치의 일반화된 소통 매체인 권력은 국가강제력에 근거하는 부정적 제재를 통해 비로소 정치적 성격을 띠게 된다(Luhmann, 2000: 39이하).⁵⁾ 부정적 제재는 위협을 통해 소통되거나 선택됨으로써 더 이상 적나라한 위협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부정적 제재는 긍정적 제재와 달리 실제 사용되지 않아야만 제재의 효과가 있다. 여기서 권력의 패러독스가 생겨난다. 국가권력은 국가강제력에 근거한 위협을 매개로 작동하지만, 위협의 범주를 벗어나 실제로 국가강제력이 행사되는 순간 권력의 작용력은 사라진다(46). 국가권력은 사용되는 순간 적나라한 물리적 강제력과 물리적 강제력의 충돌, 즉 그에 대한 항거, 투쟁만 남는다. 그러므로 사회가 붕괴 위기에 처하지 않으려면 국가권력은 행사되지 말아야 한다. 권력이 소통 매체이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소통 매체로서의 국가권력은 위협하지 않고도 늘 잠재된 위협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고도로 세련된 소통 기법을 필요로 한다.

국가에 의한 시민학살과 인권탄압, 그에 대한 광주시민의 항거는 행사되지 말았어야 할 직접적인 물리적 강제력이 행사됨으로써 생겨난 결과였다.⁶⁾ 5·18을 일으켰던 신군부세력은 불확실성이 높은 정치 선거를 통제하기 위하여 국민투표를 통해 대통령선거인단 선거를 관철시켰고 단독후보의 득표율 100%라는 변칙으로 권력을 장악하였다. 그러나 전두환 정부는 5·18피해자들의 현존(혹은 그들의 기억)으로 인하여 통치의 전 기간을 통하여 정당성의 위기에 노출되었다. 권력자들이 위협수단의 차원을 넘어서

4) '成即君王 敗即逆賊'이라는 전통적인 권력의 논리는 5·16군사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군부세력에 의해 '충 같은 뛰어난 정권만 잡으면 모든 것이 합법화된다'는 강압적 권력론으로 계승된다.

5) 루만(Luhmann, 2000: 39~44)은 권력을 배버의 정의에 준하여 특정한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와 관련된 영향력으로 이해하지만, 좁은 의미에서의 권력으로는 불확실성의 흡수(인정), 긍정적 제재(친교), 부정적 제재의 3유형을 언급한다.

6) 신군부세력은 12.12 병력동원의 불법성, 5·17전국비상확대계엄선포, 5·18광주민중화운동 진압과 관련된 내란 목적의 살인혐의 등으로 기소되었다.

국가강제력의 투입을 결정하였고, 나아가 저항하는 시민들과의 싸움을 통해 정권을 장악하였다는 사실은 통제되지 않는 저항의 상징적 재생산의 원천이었다. 전두환 정부는 또다시 국가강제력을 행사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국가권력에 의한 언론통제와 집단기억의 원천봉쇄를 통해 정치에서 5·18피해자들을 배제하는 전략을 택하였다. 그들은 현존하는 피해자들을 정치에서 배제하기 위해 군사정권을 오랫동안 지탱시켜온 반공이데올로기에 의지하여 학살·탄압당한 광주시민을 '빨갱이', '좌경세력', '불순분자', '극렬분자', '과격세력', '폭도'로, 광주를 '무법천지', '반역의 도시'로, 민중항쟁을 '폭동', '내란'으로, 김대중씨를 '내란음모수괴' 등으로 지속적으로 상징 조작을 행하였다.⁷⁾ 그렇지만 국가권력에 의해 배제된 자들에 대한 상징성 증가는 오히려 상징에 대한 민감성이 끊임없이 증가함을 의미했다.

신군부세력의 철저한 언론통제로 인하여 영남 지역의 대학가는 1981년 초에 이르러서야 비공식적 통로를 통해 비로소 광주의 시민학살과 인권탄압의 참상을 알게 되었고(채장수, 2006), 신군부세력의 핵심지도부 다수가 지역출신이라는 '원죄의식'에 기반하여 반정부투쟁에 나섰다.⁸⁾ 그러나 대학가를 제외한 영남지역은 전두환 정부의 말기까지도 광주 시민학살과 인권탄압의 정보로부터 차단된 채 있었고, 영남 사람들 대부분은 '광주의 비극'을 알지 못한 채 신군부세력이 지역출신이라는 이유에서 이들의 권력 형성과정이나 정당성을 고려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보수성을 드러냈다. 이것은 5·16 군사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박정희 정부를 영남 사람들이 지역출신이라는 이유에서 맹목적으로 지지한 것과 동일한 연장선상에 있었다.

광주시민들은 전두환 정부의 말기까지 외부 집단들과의 소통이 단절된 속에서 국가권력에 의한 상징조작에 저항하여 배제된 자들과 얽힌 자신들의 집단기억과 긍지를 지키기 위한 상징 투쟁을 내부적으로 전개하였다(정수만, 1998). 그리고 학생운동권과 재야 정치집단, 진보적 지식인들은 '5·18정신'의 추상화를 통해 자신을 부당한 국가강제력에 의해 짓밟힌 피해자들과 동일시함으로써 국가권력을 자신들을 탄압한 가해자로 규정하였다. 국가권력의 위협 속에서도 그들의 저항은 국가권력에 의해 배제된 피해자들의 현존에 기인하여 과거나 현재를 통틀어 크 어느 때보다도 더 활성화되었다. 5·18관련 구속자들과 유가족의 성명, 종교단체의 추모의례와 망월동 위령제, 대학가의 '민주광장' 명명, 항의집회 및 시위, 분신, 광주·부산미문화원 방화와 서울미문화원 점거농성, 문화영역으로의 확산 등을 통해 '5·18정신' 계승한 저항은 간단없이 이어졌다. 전두환 정부의 정당성 결여는 국가권력에 의해 배제된 피해자들의 현존에 근거하여 벗어날 수 없는 굴레로 임기말까지 지속되었다.

6·10항쟁은 신군부세력이 대통령직선제를 받아들여 민주주의의 실현, 즉 여당과 야당의 권력교체 가능성을 열어놓도록 압력을 행사하였다. 역사적으로 권력교체의 가능성은 1987년 제12대 대통령선거부터 열려있었지만, 야당의 분열로 실제 정권교체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지만 집권한 노태우 정부는 5·18 학살과 탄압을 자행했던 신군부세력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민주화운동의 추세 속에서 5·18의 성격을 민주화운동의 일환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었고, 국회의 광주청문회는 이들에 의해 조작된 폭동설 대신에 민주화운동으로 그 정당성을 확인했다.

7) 정치학자 노재봉은 "광주사태가 김대중씨의 외곽을 때리는 노련한 정치기술 때문에 발생했다"고 광주사태의 원인을 김대중씨에게 귀속시킴으로써 신군부세력의 상징조작에 가세했다.

8) 대구지역 학생운동 조직은 1983년 대구미문화원 폭발사고(후에 간첩의 소행으로 밝혀짐) 이후 국가강제력에 의해 강제해산되었으며, 학생운동의 재조직화는 1985년 정부의 유화정책으로 대학총학생회가 부활되던 시기에 비로소 이루어진다(채장수, 2006).

김영삼 정부가 들어선 이후 국가에 의해 허용된 공간 안에서 5·18피해자 등 광주시민과 진보적 지식인들이 펼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과 학살자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고발운동은 국가폭력, 즉 국가강제력에 의한 학살과 탄압을 둘러싼 보수세력과 진보세력 간의 갈등에 대한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1994년 3월 전국 각계의 인사로 '5·18진상규명과 광주항쟁정신계승 국민위원회'가 결성이 되어 국가가 12·12와 5·18에 대한 수사를 벌이도록 압박을 가하였다. 1995년 7월 검찰의 불기소 결정 이후 그들은 전국적으로 전개된 농성, 동맹휴업, 성명, 시국선언, 서명운동, 국민대회 등을 통해 이 갈등을 정치 의제화하였고, 여당·야당의 대립 끝에 12월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1995)이 제정되었다. 이 법에 근거하여 1996년 8월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비롯한 신군부세력은 군사쿠데타와 광주유혈사태 등 국가강제력의 불법적 사용에 대한 사법적 처벌을 받았다.

이 사법적 판단은 그때까지 좌파적·반체제적 사건으로만 인식되었던 '광주사태'가 민주화운동으로 격상되고 '국가전복의 폭동' 관련자들이 민주열사로 추앙되는 반면, '발전국가'를 계승했다던 전두환 정부와 민주화를 단행했다던 노태우 정부의 수반이 국가전복의 반란수괴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는 충격적 사건이었다. 이러한 5·18 의미의 급반전은 공식적인 역사의 호명이 '광주사태'에서 '5·18민주화운동'으로 대체되는 것뿐 아니라, 광주의 이미지가 '민주화의 성역'으로 추앙되는데 대비하여 영남의 이미지는 '반민주의 온상'으로 추락하는 것을 의미했다.

3. 국가권력에 의한 과거청산과 역사바로세우기

민주화 이후 출범한 정부들은 국가권력에 의해 배제되었던 피해자들을 민주주의 국가의 주요한 구성원으로 포용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국가에 의해 주도되는 과거청산과 역사바로세우기는 5·18이 더 이상 '승인투쟁'(한상진, 1998)이나 '기억투쟁'(김영범, 2004)의 대상이 아니라 '망각투쟁'(Ricoeur, 2004)임을 분명히 한다. 국가강제력에 의한 학살과 인권탄압에 대한 재기억(회상)이 가해자보다는 피해자의 입장에 맞추어지는 것은 어두운 것, 불편한 것, 부담스러운 것으로서의 기억을 현실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미래의 집권을 염두에 두고 새롭게 재해석하려는 일종의 합리화 방식이다(전진성, 2006: 470). 따라서 국가권력이 개입하여 역사를 재구성하는 데는 무엇을 기억하는가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잊는가, 그리고 어떻게 잊는가도 중요하다. 과거의 집단적 경험 가운데 어떤 것을 특별히 기억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그 외의 다른 것들을 망각으로 몰아넣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망각된 것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소통의 계기에 따라서는 다시금 활성화될 수도 있음을 5·18의 재기억은 보여준다.

국가권력에 의한 과거청산과 역사바로세우기는 더 이상 과거 국가권력에 의해 왜곡된 소통을 바로 잡는 승인의 노력이나 '대항기억'으로 맞서는 상징투쟁의 결의를 다지는 공간이 아니며, '국가에 저항하는' 민주화운동의 재구성에 국가권력이 개입하여 특정한 세력이나 정파의 기억에 권위를 부여함으로써 역사적 기억을 독점하고 특권화하는 '지금 그리고 여기'의 시간화된 장소가 되고 있다. 이러한 시공간적 제한성에도 불구하고(혹은 바로 그 때문에) 이것은 패러독스하게도 5·18의 새로운 의미부여가 공간적으로는 광주의 국지성을 벗어나 전국, 세계로 확대되고, 그리고 시간적으로는 과거로부터 벗어나 미래로 확대된다는 보편성의 기대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과거청산과 역사바로세우기는 그를 둘러

싸고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정치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촘촘히 짜인 법과 제도의 망에 의해 세련되게 이루어져야 한다.

가해자의 처벌, 피해자의 권리회복 및 보상, 진상규명을 위해 동원된 권력수단은 과거의 정치적 결정을 뒤엎는 새로운 결정에 사람들이 일일이 따지지 않고 복종하는 집단적 구속력을 가져야 한다. 「5·18광주의거희생자의 명예회복과보상등에관한법률」(1990),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헌정질서과 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별법」(1995),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과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1997),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2000),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과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2000),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2002), 「진실·화해를 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2005) 등 법률과 법정위원회는 위협하지 않고도 위협의 잠재력을 보여줄 수 있는 권력수단으로 동원된다.⁹⁾

국가강제력에 의한 학살과 인권탄압을 둘러싸고 보수와 진보가 갈등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과거청산과 역사바로세우기의 결정을 비록 모두 동의하지는 않지만 수용되어야 하는 필요에서 새로운 법률 제정과 이에 근거한 법정위원회 설립을 통해 정치를 하였다. 즉 정치는 집단구속적인 결정을 관철시키기 위해 합의의 결핍을 강제해서 보충하는 기능과 능력을 갖고 있다(Luhmann, 2000: 295). 김영삼 정부에서 시작되었지만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된 국가에 의한 과거청산과 역사바로세우기는 광주시민들로 하여금 국가강제력에 의해 저질러진 학살과 인권탄압을 재기억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이들 법률과 법정위원회의 존재는 과거청산과 역사바로세우기의 기능이 사회통합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결정으로 해결하는 데 있음(Luhmann, 1970: 161)을 분명히 한다. 전두환 정부에서 국가권력에 의해 배제되었던 피해자들을 민주주의 국가의 구성원으로 포용하는 작업은 과거청산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을 집단구속력 있는 결정에 의해 일단락 짓는 일일뿐 사회통합을 가능케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치는 과거의 잘못된 정치적 결정이 야기한 갈등에 대해서도 새로운 결정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려 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갈등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정치가 존재하는 한 갈등은 해소될 수 없다. 5·18과 과거청산을 둘러싸고 강화된 영·호남 지역갈등은 언제든지 정치화될 수 있는 정치적 갈등의 잠재력이다.

이들 법률과 법정위원회는 광주시민들이 과거청산의 목표로 제시했던 '광주 5원칙'인 진실규명, 책임자처벌, 명예회복, 피해보상, 정신계승을 현실화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제도적 장치들이다. 그러나 이들 법률과 법정위원회의 활동 이면에는 국가권력의 억압에 의한 집단망각뿐 아니라 선별적인 기억과 망각의 상대성이 자리하고 있다. '광주시민', '광주', '민중항쟁', '김대중'에 대한 국가권력의 지속적인 상징조작은 집단기억을 인위적으로 조작했으며, 나아가 언론사 통·폐합과 보도관제는 집단망각을 강압적으로 조장했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국가권력이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공식 호명하면서, 오히려

9) 특별법에 의한 과거청산 작업은 이밖에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법(1999), 삼청교육피해자 명예회복및보상법(2003),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법(2004), 노근리사건진상규명및명예회복법(2004), 일제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법(2004), 동학농민혁명군명예회복법(2004), 6·25전쟁전후민간인희생사건진상규명및명예회복법(2005),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법(2005) 등이 있다.

려 진보세력과 급진주의세력은 민족문제와 계급문제를 비롯한 모든 사회문제의 총체적 극복을 지향한 '민중항쟁'으로 호명했다. 그들은 5·18의 집단기억으로부터 한미관계와 남북분단에 대한 재인식을 시도했고 민주화 요구와 노동문제, 통일문제를 연계하여 총체적인 사회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변혁운동을 전개했다.¹⁰⁾ 이에 따라 '5·18정신'의 투쟁대상은 국가권력이 아니라 망각의 위협이 되었다. 이 망각의 위협으로부터 학자들은 진보와 보수의 구분에서 벗어난 자유와 인권, 평화(나간채, 1996), 평등과 형제애(김두식, 1998), 국민주권 승인투쟁(한상진, 1998), 국가에 대항하는 시민사회(김성국, 1998), 폭력과 사랑의 변증법(최정운, 1998) 등 근대 시민사회의 보편적 가치들을 '5·18정신'으로 표출시켰다.

이제 광주시민들은 국가권력에 의해 허용된 공간 안에서 집단기억과 정체성을 생산하고 소비한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불러낸 기억인 재기억은 항상 또 다른 망각의 위협을 동시에 일으킨다. 과거청산을 위한 재기억은 어떤 것은 부각시키지만 나머지는 망각으로 몰아가기 때문에, 이러한 기억의 남용으로 부터 실제로 기억의 망각이 진행된다(Ricoeur, 2004: 684). 예컨대 '지금 여기'에서 진보적 지식인들에 의해 선택된 재기억은 보수적인 집단들의 기억을 침묵시키고 망각하게 만든다. 보수적인 집단들은 이들 법률과 법정위원회의 활동에 의해 자신들이 배제된다고 믿는다.

이런 점에서 국가에 의해 주도되는 과거청산은 또 하나의 권력담론일 뿐이다(임지현, 2002). 권력장악을 위한 보수와 진보 간 진실 공방은 자기성찰의 기회를 허용하지 않기에 선과 악의 이분법으로 빠져들기 쉽다(전진성, 2006: 454). 권력획득에 참여하는 진보적 지식인들은 과거청산을 위해 특정한 인물이나 정파, 계층을 '악마화'하는 한편으로, 과거의 '선한' 희생자들을 담보 삼아 자신들에게 책임추궁할 도덕적 정당성이 주어진 것처럼 우월한 지위를 누리기 쉽다. 그리고 집단기억이 대립과 배제의 정치적 관계로 축소되면서 이데올로기적으로 선택된 집단기억이 그 밖의 다른 기억들을 침묵시키고 망각하게 만든다. 보수와 진보의 구분에 의해 포착되지 않는 보다 주변적인 기억들은 재현되더라도 주목받기 어렵다. 만일 그들이 민주주의를 진보성 혹은 급진주의와 연결시킨다면, 이러한 선택성은 민주주의를 이데올로기적으로 왜곡시킬 뿐이다. 루만에 따르면, 민주화의 원천은 국가권력에 대한 저항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정에 참여하는 소수를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택하고 그 가운데 여당·야당의 권력교체 가능성을 열어두는데 있다(Luhmann, 2000: 97). 김대중 정부는 국가권력에 의해 배제되었던 김대중 씨의 집권으로 그 자체가 민주주의의 실현이었다.

4. 재기억에 대한 신뢰의 불확실성

과거청산은 과거 국가권력의 잘못된 결정에 따른 갈등을 해결하려는 정치적 사안이면서 동시에 재기억의 진실에 대한 신뢰와 관련된 인식론적 사안이다. 5·18의 집단적 동일성이 기득권세력과 재야 민주인사, 자본가와 노동자, 대학생과 민중, 남성과 여성의 차이에 의해 불확실해지면서, 재기억은 이데올로기적으로 왜곡되는 경향이 있다. 이 재기억의 진실에 대한 신뢰 확보의 어려움을 리피르(Ricoeur, 2004: 55)는 무엇을 기억하는가? 누가 기억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기억하는가? 라는 질문을 통해 피력한다.

10) 특히 NL노선과 PD노선이 변혁운동의 이념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하여 5·18을 각각 민족문제, 노동문제와 연계시켰다.

무엇이 기억되고 무엇이 망각되는가는 정치적 소통에서 어떤 기억이 활성화되고 지속적으로 재생산되느냐에 달려있다. 과거의 지평과 현재의 지평을 융합하는 재기억은 과거의 다양한 경험들로부터 현재로 불러들이는 회상이 다른 회상들에 의해 계속 연결됨에 따라 자기준거적인 기억작용이 된다(Ricoeur, 2004: 15). 이렇게 얻어진 자기준거적인 기억은 기억이 남용될 수 있는 여러 위험에도 불구하고 정치체계의 정당한 기억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재기억을 통한 과거의 진실을 추구하는 인식론적 차원과 그 재기억을 정치적 갈등에 이용하려는 실천적 차원이 국가권력에 의한 과거청산에 의해 뒤섞이면서, 재기억은 이데올로기적으로 덧칠된 탓으로 신뢰가 불확실해진다. 이처럼 재기억이 진보와 보수의 갈등에 의해 정치화된다면, 재기억은 과거의 진실 규명이기보다는 '지금 여기'의 정치에 의한 과거의 능동적 재현이 된다. 진보적 지식인과 정치적 논객들은 5·18의 집단기억으로부터 국가강제력에 의한 부당한 악행들과 범죄의 기억들을 '반민주적'인 것으로 재구성함으로써, 과거 군사정부와 연계된 보수세력에 대한 도덕적 우월 의식을 확보한다. 게다가 이렇게 '민주 대 반민주'의 대립구도로 구성된 재기억이 대선, 국회의원 총선 등 정치적 선거에서 '호남 대 영남'의 대립으로 남용되면서, 군부독재에 대한 저항이 호남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남지역과의 지역갈등을 연출하고 있다. 호남에 지역연고를 가진 정당들은 선거 때마다 '박정희 정부 이래 산업화에서의 호남배제와 광주항쟁, 김대중 존재 간의 연계효과'(최장집, 1997: 2)를 이용하여 '5·18정신'의 적자임을 내세워 호남표 사냥에 나선다. 이러한 5·18의 정치화에 대한 반작용으로 영남 사람들도 지역연고를 가진 정당에 몰표를 주는 자신들의 몰규법적인 투표행위를 정당화하고 있고, 그 결과 지역주의가 대선, 국회의원 총선을 거둬하면서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누가 기억하는가의 물음은 당사자인 광주시민의 집단기억과 이를 재현하는 타자들의 이념적 기억 간의 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광주시민은 과거에 대해 새롭게 말하고 듣는 과정을 통해 국가권력에 의해 억압된 과거를 다시 기억할 수 있게 되고, 또한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할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해, 폭도의 반란에서 민주화운동으로의 의미 변화는 광주시민에게는 변화된 현실에 대한 적응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정체성의 문제이기도 하다. 80년대 후반과 90년대 초반 5·18로 제기된 민주화 요구가 광주시민의 재기억을 매개로 하여 대학가와 산업현장의 민주화 요구로 확산되는 과정은 국지적 항거로부터 전국적 민주화라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최장집, 1997: 3). 이에 반하여 대학생과 진보적 지식인을 포괄하는 급진적 운동세력은 광주학살과 인권탄압을 고발하는 평범한 도시중산층과 노동자들의 재기억을 '계급투쟁의 교두보이자 이념적 거점으로'(이성욱, 1999) 삼고자했으며, 사회변혁을 지향하는 현재적 관심에서 5·18의 의미를 민주화운동의 범주를 넘어서 '민중무장봉기', '임시혁명권력의 해방구', '노동자계급의 쏘문' 등으로 재구성하였다.¹¹⁾

타자들이 의도적으로 찾아낸 이데올로기화된 기억은, 비록 도시중산층과 노동자들이 삶에서 스스로 수행하는 기억과는 다를 수도 있지만(김두식, 1998), 과거의 회상에 준거하여 현재의 진단과 미래의 선취를 통한 계급투쟁과 사회변혁운동의 역사를 형성하고 있다. 타자들의 계급론적 선택과 배제의 논리는 반미를 기저로 삼는 반제국주의, 좌파 이데올로기의 대중적 확산, 그리고 사회주의적 지향을 통한 구체적인 변혁사상과 조직화에는 기여했지만, 피해자들의 집단기억은 타자들의 이데올로기화된 기억

11) 5·18에 대한 계급론적 접근은 국내독점자본가 계급의 폭거설, 민중주체 능동설, 민중권력 창출설, 민중권력 미조직설 등으로 나뉘어 5·18에 사회변혁의 역사적 의미를 부여한다(안중철, 1997)

과 뒤섞이면서 기억의 진실에 대한 신뢰가 불확실해진다. 누군가에게는 '정치적, 이념적으로 덧칠된 광주의 5월은 기억하기조차 귀찮은 그 뭔가가 되고' 있다(중앙일보, 2008.05.10).

그리고 어떻게 기억하는가의 물음은 집단기억이 형성·전수·변화되는 메커니즘과 관련이 있다. 알바크(Halbwachs, 1991)는 개인 기억도 오직 사회적 구성들을 매개로 해서만 형성될 수 있다는 기억의 사회적 구성론을 피력한다. 그는 뒤르켐의 집단의식과 연계하여 집단기억이 그 집단의 정체성을 확보하게 하여 다른 집단들로부터의 구별 기능을 한다고 해석한다. 집단기억은 상상적 공간 이미지를 매개로 구성원들에게 사회적 귀속성을 창출하는 동시에 다른 집단과의 경계를 짓는 배타적인 공유 의식이다. 따라서 그들이 귀속되는 집단의 사회적 유대의 변화에 따라 집단기억도 변하게 된다. 리퍼르는 알바크의 견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여 개인이 자신의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재기억 작업을 하기 이전에 이미 집단기억과 연관되어 있음을 강조한다(Ricoeur, 2004: 187).

국가에 의한 과거청산은 이미 진보와 보수의 구분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 국가강제력에 의한 학살과 탄압의 집단기억은 겉보기에는 과거의 객관적 사실을 지시하는 듯 보이지만, 실은 진보와 보수의 구분을 통해 권력을 지속적으로 재생산해내는 정치적 장이다(전진성, 2006: 454). 진보와 보수는 야당이 국가권력을 장악할 의향이 있거나 그럴 상황에 있을 때 연출된다(Luhmann, 2000: 96). 야당지도자로서 선거를 통한 권력장악의 가능성이 높았던 김대중의 존재와 5·18의 연계효과는 모든 진보 및 급진주의세력의 결집을 가능케 했다(최장집, 1996: 5). 이들은 보수세력과의 차이를 연출하기 위해 '민중' 혹은 '인권'세력의 실체를 선형적으로 상정하고 집단기억을 구성하였다.¹²⁾ 이에 따라 5·18피해자들이 자신의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재기억 작업은 5월단체들의 활동 및 정치적 위상 변화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5월단체들은 피해자들의 집합적인 요구를 대변하는 실체로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고,¹³⁾ 광주시민들은 민주화 이후의 선거, 외환위기, 노동정책, 대북정책 등 현실의 정치적 사건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그들은 자신을 이미 호명된 민중 혹은 인권세력에 자신을 귀속시키는 경향이 다. 그 결과 '광주'가 민주화운동의 중심에 있는 기억의 장소로서 호명되면 될수록, 이 재기억의 시·공간에는 호남 밖의 다른 지역 사람들이나 보수세력이 5·18의 소통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점점 더 적어지고 있다.

5. 영·호남의 화해는 가능한가?

국가권력과 시민사회는 더 이상 대립·투쟁관계에 있지도 않으며, 시민사회가 국가권력의 전복을 피하지도 않는다. 시민사회는 국가권력에 대해 저항하지 않는다. 민주화 이후 '시민'은 광주시민이든 영

12) 진보와 보수(혹은 좌파와 우파)의 갈등은 정부(여당)와 야당의 제도화된 조건에서 복수노조 인정, 사회복지의 확장 혹은 축소, 지방분권, 한반도 비핵화, 통일정책 등 각종 정치적 결정과 관련하여 연출되었다.
13) 5·18광주민중항쟁유족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5·18광주의거부상사회, 5·18광주민중혁명부상자회, 5·18광주민중항쟁동지회, 5·18광주민중화운동행방발명자기족회 등 당사자의 개별조직과, 5·18광주민중항쟁청년동지회, 5월운동협의회, 5·18광주민중항쟁연합 등 당사자연합조직, 그리고 구속자협의회, 5·18기념재단, 518학살자재판회부를위한광주전남공동대책위원회 등 당사자와 다른 사회구성원을 포괄한 연합조직들은 운동의 이념과 목적, 정치적 사건과 연계되어 분열하고 통합하는 과정을 밟고 있다(나간채, 1997).

남 사람이든 더 이상 저항적이지 않다. 5·18은 국가가 공식적으로 민주화운동으로 승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남권에서는 아직도 드러내놓고 말하기에는 조심스런 화두이다. 호남 사람들이 과거청산이 피해자의 보상 및 현실 복원에 과도하게 치우쳤다고 보고 미완의 가해자 처벌을 포함하여 추가적인 5·18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것과는 달리, 영남 사람들은 국가에 의한 과거청산이 지나치게 정치화되어 가해자 처벌 등 복수에만 치우쳤다고 보고 기왕의 5·18 진상 규명에 대해 확신을 가지지 못한다. 그들은 과거로부터의 충격에 직면하기를 회피하는 무의식에 기반한 집단망각에서 아직도 5·18을 '광주사태'로 호명하거나 좌경·불순세력의 '폭동'으로 간주하기도 한다.¹⁴⁾ 그들은 그 연장선상에서 민주화운동, 노동운동, 학생운동, 시민운동 등을 이해하기도 한다.¹⁵⁾ 5·18관련자의 사법적 처벌을 심하게는 "김영삼 대통령을 비틀어진 역사관과 오만에서 비롯된 재판" 혹은 "범치국가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나라의 정통성을 혼란케 한 재판"(영남일보, 1996.08.06)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나아가 김영삼 정부 이후 대구·경북이 오히려 정치적 핍박을 받았다는 국가권력에 의한 역배제를 주장한다.¹⁶⁾

그에 반하여 광주시민들은 '5·18정신'이 광주의 국지성을 벗어나 전국화되고 세계화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망월동 묘역을 성역화하고 해마다 정부의 상당한 예산 지원으로 화려한 외양을 갖춘 각종 기념사업들을 성대하게 벌이고 있다. 그들은 '5·18정신'이 없다면 오늘의 민주화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광주의 이런 공로는 역사에 길이 남아야 한다고 믿는다. 광주시민들은 광주만이 신군부세력에 저항하면서 민주화를 위한 외로운 투쟁을 지속해 온 유일한 장소이고 자신들만이 민주화를 논할 수 있는 당사자이며, 다른 지역의 사람들은 방관자 내지는 심하게는 가해자의 일부라고 배제한다(김두식, 1998: 191). 이러한 자기우월 의식에서 그들은 다른 지역 사람들의 5·18에 대한 이해 부족을 언급한다. 그러나 5·18기념행사를 바라보는 영남 사람들은 반성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느낀다.¹⁷⁾

재기억은 현재의 맥락에서 과거를 새롭게 변형시키는 행위이다. 이러한 과거와 현재의 관계는 과거에 대한 선별적인 망각과 기억의 상대성처럼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선택과 배제로 설명될 수 없다. 현재에서 반복되는 과거는 늘 변형의 가능성을 수반한다(Ricoeur, 2004). 우리가 현재에서 가질 수 있는 것은 늘 이 변형된 과거이고, 바로 이 변형 속에서 과거 극복의 길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한다. 광주 시민들은 사법적 측면에서는 정치적 박해와 고통을 극복하는 데 성공했지만, 심리적으로는 여전히 과거 속에 갇혀서 정체성의 토대가 되는 과거를 기억할 수도 망각할 수도 없는 딜레마에 처하여 있다. 과거 5·18의 경험을 망각할 수 없는 이유는 그것이 자신의 역사, 정체성을 부정하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권력에 의한 야만적 학살과 탄압, 죽음과 슬픔, 환호와 박수, 구호와 군중의 열창 등에 대한 재기억의 독점은 이것을 공유하지 못하는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는 '원죄의식'과 민주화 담론으로부터의 배제로 인하여 정체성의 위협이 된다. 적어도 영남 사람들은 자신들이 호명되지 않는 민

14) 높은 진상규명 요구와 폭동, 사태로의 호명에 대해서는 주 2의 지표 참조
15) 영남 사람들은 노태우 정부가 1990년 이후 경색정국에서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에 대해 "민주화 과정에서 민주세력으로 위장해 불순세력들이 학원과 산업현장에 침투하여 폭력과 파괴행위를 일삼아 국민에게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폭력 좌경세력을 엄정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규정했던 시각에 대해 대체로 동의한다.
16) 한나라당 강제집 대표가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의 대구 유세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 때까지 치면 TK(대구·경북)는 15년간 핍박을 받았다"(동아일보 2008.03.29)고 주장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17) 대구 북부경찰서는 목욕탕 탈의실에서 TV의 5·18 프로그램을 보다가 대구 사람의 반성을 두고 말다툼끝에 서로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현모씨와 김모씨를 불구속 입건(영남일보 2005.05.19)

주화 담론과 가해자로서의 '영남정권'의 호명, '영남출신 공수부대원' 등 유언비어에 의해 상처받고 정체성을 위협받은 후유증으로 '5·18정신'의 수용을 거절하고 자기반성을 거부한다. 광주시민들이 '5·18정신'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것처럼 다른 지역에서도 지역의 민주화운동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 한다. 그 결과 광주시민이 '5·18정신'의 수용을 기대하는 것과는 달리, 대다수 영남 사람들은 지역의 민주화운동이었던 '2·28민주의거', '3·15마산의거', '10·18부마항쟁'의 정신을 기념식과 민주공원 조성으로 기림으로써 자신들이 민주화의 '방관자', '가해자'로 간주되어 반성을 강요당하는 분위기를 거부한다.

노무현 정부는 '5·18정신'을 동서회합과 국민통합의 메시지로 규정하고, 동서회합을 주제로 한 각종 세미나와 행사를 수없이 개최했으나 오히려 그런 행사가 역효과를 불러왔다. 금년에도 광주의 지방신문은 5월 한 달 동안을 여전한 5·18관련 특집기사, 문화예술행사·교육행사·시민참여행사 기사 등으로 가득 채우고 있지만, 다른 지역의 지방신문들은 대부분 당일 기념식을 연합통신의 기사를 받아 짧게 보도할 뿐이다. '5·18정신'이 민주주의와 인권, 정의 혹은 근대 시민사회의 보편적 가치들을 실현하는데 있다면, 왜 '5·18정신'이 광주의 국지성을 벗어나 전국화되지 못하는 것일까? '5·18'정신이 현재의 광주에서는 실현되고 있는가? 정권의 교체를 통해 실질적인 민주주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인권과 정의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 테일러는 민주주의가 포용의 동학과 동시에 배제의 동학을 발생시킨다는 패러독스에 대해 언급하면서, 배제가 공감의 결여나 역사적 편견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잘 작동하는 속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문제의 무시나 특정한 집단의 차별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지적한다(Taylor, 1998: 145). 민주화 이후에도 시민에 포용되지 못한 채 침묵 속에 가려져 있는 배제된 타자는 항상 있다. 지역불균형발전, 여성차별, 결혼이주여성 및 이주노동자의 차별, 동성애 차별 등 무수히 많은 배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채로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5·18정신'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도에 매몰된 과거청산과 연결되는 것은 민주주의의 배제 동학을 극복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5·18정신'의 전국화를 가로막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민주주의에도 불구하고(혹은 그 때문에) 극복하지 못하는 이들 배제를 무시하는데 있다. 여성차별, 결혼이주여성 및 이주노동자의 차별, 동성애 차별 등의 배제는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극복되어야 할 문제이다. 그렇다면 '5·18정신'이 과거청산에 발목이 잡힌 데는 그동안 현실적인 판단과는 무관하게 정치적으로 각인된 영·호남의 지역주의 탓이 크다.

권력 장악에만 관심이 있는 일부 정치지도자와 정치권, 언론에서 조장한 지역주의로 인하여 영·호남은 지역발전 면에서 오히려 소외되면서도 그들 중앙 권력층의 욕심을 채워주는 일을 선거 때마다 되풀이하고 있다. 90년대 생겨난 'TK정서', 'PK정서'라는 말이 이들 지역출신 정치인들의 권력의지와 연계되어 영남 사람의 배타성과 정치적 보수성을 지칭했듯이, '5·18정신'도 의도했던 아니든 지역출신 정치인의 권력의지와 연계되어 '호남소외'를 만들어내고 있다. 영남정권의 편파적인 지역차별정책이 호남을 낙후시켰다는 발상은 민주화 이후에도 호남의 낙후된 상태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큰 설득력이 없다(이광일, 2004). 오히려 영남과 호남이 모두 경제적인 낙후상태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40여 년 동안 국가 주도의 '압축적 근대화' 과정에서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인력 등 제반 사회영역에서는 중앙집중화가 가속되었다. 국가권력에 의한 지방의 배제가 오랜 기간을

통해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 비록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었지만 서울과 수도권에 패권주의와 지방의 성장동력 상실로 인하여 중앙과 지방간의 격차는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¹⁸⁾ 이명박 정부는 그나마 노무현 정부에서 시도했던 지역균형발전정책을 백지화하고 경쟁력 강화라는 미명하에 수도권의 규제완화와 공공기관 민영화를 전제로 하는 '5+2광역경제권' 구상을 제시함으로써 국가에 의한 중앙집중화를 계속한다는 정책의지를 분명히 하였다. 이제는 영남과 호남이 정권 창출지라는 미망(迷妄)에서 깨어나서 지역주의의 정치적 성격규정과 낙후된 지방의 위상으로부터 탈각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을 이룩하는 데 힘을 합쳐야 한다.

영·호남의 화해는 과거의 학살과 인권탄압에 대한 기억으로부터 오는 상처와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시민들의 삶의 실천에 있다. 이 상처와 고통의 극복은 국가 강제력에 의해 저질러진 악행과 범죄에 대한 시민들 스스로의 자율적인 성찰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미래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적대적인 대립을 넘어서는 시민사회의 다양한 보편적 가치의 실현을 요청한다. 다행스럽게도 5·18을 체험하지 않은 10대, 20대의 젊은 세대들은 과거청산에는 관심이 없으며 지역주의의 영향으로부터도 아직은 자유롭다. 이들은 일상생활에서 실질적으로 화합할 수 있는 계기와 교류를 통해 상호화해와 용서가 가능한 세대이다. 그러므로 영·호남의 화해를 위해서는 우선 '5·18정신'의 의미를 국가 혹은 민주주의에 의한 배제 문제와 연계하여 재구성하는 작업을 통해, 젊은 세대를 포함한 지역의 모든 사람으로부터 5·18을 국가권력에 대한 대표적인 저항 운동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그리고 영·호남이 내부에서부터 지역주의의 타파에 나서서 중앙 권력층의 권력의지에 내들리는 시민들을 계몽하고 지방정치의 개혁, 지역언론의 개혁을 시작하여야 한다.

<참 고 문 헌>

- 김두식, 1998. "5·18에 관한 의미구성의 변화과정과 지역사회의 변화", 「세계화 시대의 인권과 사회운동: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재조명」, 나남, 165~196쪽.
- 김성, 2000. "5·18 민주항쟁과 왜곡보도에 관한 연구: 언론보도와 각종 홍보물을 중심으로". 5·18기념재단.
- 김성국, 1998. "국가에 대항하는 시민사회: 518의 자유해방주의적 해석", 「세계화 시대의 인권과 사회운동: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재조명」, 나남, 79~135쪽.
- 김영범, 2004. "기억투쟁으로서의 4·3문화운동 서설", 나간채 외, 「기억투쟁과 문화운동의 전개」, 역사비평사.
- 김재균, 2000. "5·18과 한국정치: 광주보상법과 5·18특별법 결정과정 연구", 한울.

18) 1995~2001년까지의 서울과 4대 광역시(부산, 대구, 인천, 광주) 간의 격차는 더 커졌다. 지방분권화의 3영역 중 재정, 기능의 측면에서 격차는 더 커졌고, 오직 인사의 측면에서만 향상되었다. 특히 격차가 심화된 영역은 취업률(인적자본), 사회간접자본, 생활환경(홍준현, 2001), 사회복지 및 사회복지서비스시절(조영훈, 2001) 등 지방경제, 지방문화, 지방교육과 관련된 부문이다.

나간채, 1996. "5월운동의 세계적 발전을 위하여", 5·18정신계승을 위한 토론회.
 나간채, 1997. "5·18이후 5월운동조직의 형성과 발전: 5월당사자조직을 중심으로", 5·18기념재단.
 안종철, 1998. "5·18의 역사적 배경과 의의", 5·18기념재단.
 오재열·민형배, 1998. "5·18기념사업 방향 재정립을 위한 모색", 5·18정신계승을 위한 토론회.
 이광일, 2004. "518민중항쟁, '과거청산'과 재구성의 정치", 『민주주의와 인권』, 4권 2호: 171~195.
 이성욱, 1999. "오래 지속될 미래, 단절되지 않는 '광주'의 꿈: 광주민중항쟁의 문학적 형상화에 대하여", 5·18기념재단.
 임지현, 2002. "식민주의적 죄의식을 넘어서", 『기억과 역사의 투쟁』, 당대비평 특별호: 9~18쪽.
 전진성, 2006. "기억의 정치학을 넘어 기억의 문화사로: '기억'연구의 방법론적 진전을 위한 제안", 『역사비평』 76호, 451~483쪽.
 정수만, 1998. "5·18과 인권침해 사례", 5·18기념재단.
 조영훈, 2001. "지방분권화와 복지수준의 지역간 격차: 지방자치제도 도입이후", 『사회보장연구』 17권 2호, 1-19.
 채장수, 2006. "80년대 대구지역 학생운동에서 '이념'의 전개", 『대한정치학회보』 14집 2호, 201~224쪽.
 최정운, 1998. "폭력과 사랑의 변증법: 5·18민중항쟁과 절대공동체의 등장", 『세계화 시대의 인권과 사회운동: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재조명』, 나남, 197~245쪽.
 한상진, 1998. "광주민주화운동에서 본 국민주권과 승인투쟁", 『세계화 시대의 인권과 사회운동: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재조명』, 나남, 53~78쪽.
 홍준현, 2001. "지방분권화와 지역격차의 상관관계",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3권 1호, 161-178.
 Halbwachs, Maurice, 1991. *Das kollektive Gedächtnis*, Frankfurt a.M.
 Luhmann, Niklas, 2000. *Die Politik der Gesellschaft*, Frankfurt a.M.
 Ricoeur, Paul, 2004. *Gedächtnis, Geschichte, Vergessen*, Wilhelm Fink Verlag, München.
 Taylor, Charles, 1998. "The Dynamics of Democratic Exclusion", *Journal of Democracy*, Vol.9 No.4.

전북에서 본 5·18¹⁾: '문화예술적 재현 및 수용의 양상'

유계호 (전북대학교 프랑스어문학과 교수)

1. 서론

자주 인용되는 아콕슨의 주장-'시는 도처에 있거나 아무 데도 없다'-을 확대 적용하면, '예술은 도처에 있거나 아무 데도 없다'는 명제가 성립된다. 요컨대, 제도화된 해당 장르들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유형의 활동에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망정, 시성(또는 예술성)이 구현되고 있는 것이다. 근래에 '문화예술'이라는 포괄적인 개념과 더불어 그 용어법 자체가 널리 확산되고 있는 것도 아마 이 때문일 것이다. 이 발표의 '문화예술' 개념도 그런 추세에 상응하는 것이다.

5·18 기념재단이 2006년에 시, 소설, 미술, 음악, 영화 등 5·18 관련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여러 전문가들의 분석을 엮어 『5·18 민중항쟁과 문학·예술』이라는 논문집으로 내놓았다. 따라서 5·18 관련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그와 같은 포괄적이고도 체계적인 조망의 연장선상에서, 발표자 나름의 미래지향적인 방향을 제시하려는 것이 이 발표의 주된 목적이다-물론 여기에는 5·18의 접속·확장·공유를 위한 부문별 활동 간의 상보성이 전제된다.

한편 언어과학을 중심으로 확립된 소통 이론과 그것을 확대 적용한 문화예술적 상호작용의 기본 구도가 이 발표의 주된 접근 방법이다. 그런 가운데 문화예술의 잠재적 수용자를 우선시하는 수용미학적 관점 아래 5·18 관련 문화예술의 궁극적인 목표로서 적정선의 대중 친화성 확보 및 우호증립세력 확장의 필요성을 강조하게 될 것이다.²⁾

2. 문화예술적 상호작용의 구도

5·18의 진상 및 정신을 접속·확장·공유하는 데 있어 문화예술 활동이 차지하는 비중을 제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사태 이후 이미 3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현 단계에서는 더욱 더 그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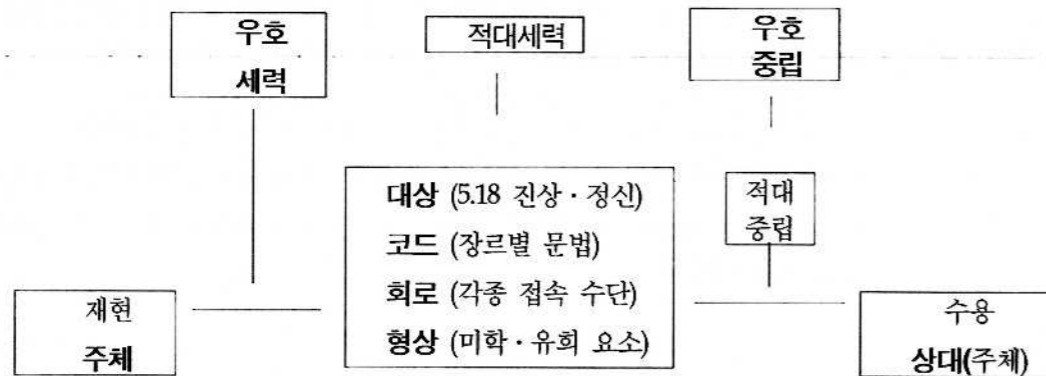
- 1) 발표 제목의 '전북'이라는 시점(視點) 상의 지역성은 발표자가 5·18 이후 30년 가까이 이 지역에 거주하며 민주화운동, 민중운동, 시민사회운동에 관심을 기울이고 일정 역할을 수행해 왔다는 것 이외의 다른 각별한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
- 2) 단 이런 발표 내용에 사회과학적 접근과 거리가 먼 개인사적인 요소와 다분히 감성적인 측면이 일부 포함되어 있음을 미리 밝혀 둔다.

물론 5·18의 진상 및 정신을 객관적으로 구명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사실적으로 기록하는 일은 일차적으로 사회과학의 소관이다. 그렇지만 대미 종속과 남북 분단이라는 거시적인 역학 구조, 여전히 온존하고 있는 책임 당사자들 중심의 적대세력, 근래에 더욱 침체화되고 있는 이데올로기 갈등, 지역정서의 세분화 추세, 그리고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5·18 관련 대기한 주체들의 내부 갈등까지 고려할 때, 5·18에 대한 사회과학적 접근과 특히 그 결과의 대중적 확산에 일정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

한편 위와 같은 대립과 갈등 구조는, 어찌 보면, 시·공을 초월하는 보편적인 현상이기도 하다. 따라서 5·18의 접속·확장·공유를 열망하는 5·18 관련 주체들에게 현 단계에서 가장 시급하게 요청되는 것이, 발표자가 볼 때, 한편으로는 내부적으로 상대친화성에 바탕한 공감대를 구축하는 일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반 대중을 상대로 '우호중립세력'을 확장시켜 나가는 일이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가장 유력하고 가장 유망한 것이 다른 부문들과의 상보성을 전제한 문화예술 활동인 것으로 여겨진다.

사실 문화예술은 그 자체로서 일정한 미학적성과 유희성을 내포한 가운데 대중의 일상과 내밀하게 접촉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으며, 바로 이에 힘입어 대중의 의식은 물론 감수성에까지 침투하여 지배 이데올로기를 희석시키는 가운데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생성시키고 내면화시키는 상대적인 강점을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은 인식 아래, 언어과학에서 확립되어 미시사회·심리학 부문에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는 소통의 기본 구조를 원용하여, 5·18 관련 문화예술적 상호작용의 기본틀을 설정하면 다음과 같다.

<표1> 5·18 관련 문화예술적 상호작용의 구조



우선 5·18을 구심점으로 하는 넓은 의미에서의 이데올로기 지형에 있어 우호세력³⁾ 대 적대세력, 우호중립세력 대 적대중립세력의 대립 구조를 설정해 볼 수 있다. 5·18 관련 문화예술 활동과 관련하여 여섯 가지 구성부에 있어서는, 5·18의 진상 및 정신이 '대상'이 되고, 장르별로 작용하는 넓은 의미에서의 문법이 '코드'에 해당한다. 수용자와의 대기한 접속 수단이 '회로'가 되고, 미학적·유희적 요소를

3) 5·18 관련 우호세력을 다방면으로 중첩될 수 있다는 전제 아래-현장 주체(5·18 가담자, 희생자, 가족 중심의 활동체), 학술 주체(사회과학 중심), 운동 주체(민중운동, 시민사회운동), 정치 주체(제도권 정치인들), 문화예술 주체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내포한 텍스트의 형식 및 내용이 '형상'에 해당한다. '주체'는 대상을 재현하고 형상화하는 창작 주체, 텍스트에 설정된 서술 주체, 그리고 일부 장르상의 연기 주체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상대'는 창작 주체가 창작 과정에서 염두에 두는 잠재적 수용자, 텍스트에 암묵적으로 설정된 서술 상대, 관객 또는 독자와 같은 실제 수용 주체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바로 이 때문에 '주체'와 '상대' 간에 상호주체성의 땅이 형성된다.

한편 위의 여섯 가지 구성부 중에서 어느 한 항목이 과잉되었을 때 예상되는 과급 효과를 5·18 관련 문화활동에 적용하여 제시하면 아래 <표2>와 같다.

<표2> 상호작용 항목별 과잉의 예상 과급효과

과잉 항목	예상 과급 효과		
	재현 양상	수용 양상	기 타
주체	주관, 감정, 보상욕, 전유욕, 상업성의 표면화	설득력 결여, 거부감, 거리감	수용자의 적대중립화
상대	명령, 강제, 강요, 세뇌의 분위기 조장	상호주체성 저해, 방관, 적대감 조장	수용자의 적대중립화
대상	실록 위주, 사회과학적 접근과 중복	접속 회로의 확장 실패, 혐오감 유발	적대세력의 비판 거리
회로 (내부) ⁴⁾	집안잔치, 배타성, 자기만족, 내부갈등 요인	배제감, 박탈감	적대세력의 비난 거리
코드	전위성, 탐미주의	난해성, 참신성	(접속 가능성 약화)
형상	현학성, 추상성, 탐미주의, 상업주의	원만한 소통 저해, 회화적, 유희적 수용	우호세력 이탈 (목적성 희박)

이제 위와 같은 항목별 과잉의 부정적인 과급 효과를 고려하는 가운데, ① 부문별 상보성과 문화예술의 역할, ② 문화예술적 재현과 대상 충실성, ③ 문화예술적 형상화와 대상 과잉성의 순서로, 5·18 관련 기존 문화예술 활동을 조망함과 아울러 발표자 나름의 미래지향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3. 부문별 상보성과 문화예술의 역할

3.1. 5·18 주체세력들의 부문별 상보성

4) '외부 회로'의 과잉은 현실성이 거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얼핏 생각하면 '5·18공화국'과 같은 이상향을 떠올릴 수도 있지만, 만약 그런 단계에 도달한다면 5·18 자체가 이미 '진부함'과 '식상함'으로 받아들여지게 될 것이다.

문화예술이 그 자체로서 이데올로기이거나 전적으로 미적 향유의 대상인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다기한 형상화를 통하여 확보되는 독특한 미적 효과와 더불어, 문화예술은 어떻게든 기존의 이데올로기 망과 그 사회적 과정에 개입하게 되어 있다. 문학에 초점을 두고 보면, 사르트르와 더불어 엄밀한 의미에서의 순수 문학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도, 정치 도구화된 사회주의 문학의 문학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⁵⁾ 5·18 관련 문화예술 활동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인식이 요청된다. 물론 5·18을 소재로 삼아 예술적인 전위성을 추구하는 활동도 있을 수 있고, 나아가서는 5·18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의 문화예술적 접근도 있을 수 있다. 단, 이 발표는 5·18에 대한 우호적인 시각과 그것의 접속·확장·공유라는 목적성을 전제한 문화예술 활동에 초점을 두고 있다.

5·18 관련 주체와 문화예술 활동은 더욱 더 폭넓은 규모의 주체 및 활동의 한 부분이다. 따라서 문화예술적 주체에게 우선적으로 요청되는 것이 다기한 다른 주체들과의 상보성에 대한 인식이다. 쉬운 예를 들어, 5·18 현장 주체들(가담자, 희생자, 가족 등)의 활동은 매우 높은 등급의 절실함과 투쟁성을 띠고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사회과학을 축으로 하는 학술 주체의 경우 객관적인 자료와 냉철한 분석에 입각한 지적인 활동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주체별 특성이 5·18의 접속·확장·공유를 위한 활동에 있어 부문별로 일정 공백과 한계를 갖게 되는데, 그런 공백과 한계를 메꾼다는 상보적인 목적 의식이 문화예술 주체에게 요청되는 것이다.⁶⁾

문화예술 활동을 중심에 놓고 볼 때, 물론 그와 같은 상보성이 시기별로 어느 정도 다르게 설정될 수는 있다. 예를 들어, 5·18 직후와 현재를 비교할 때 부문별 상보성의 전체적인 지형 변화와 더불어 문화예술 활동의 상대적인 위상은 물론 그 역할에 있어서도 일정 변화가 불가피하다. 그렇지만 발표자가 볼 때 문화예술 중심의 '상보성' 인식에 있어 무엇보다 우선시해야 할 것이 문화예술-내지는, 문화예술적 상호작용-의 보편적인 속성, 그리고 그 속성을 기반으로 그것이 수행할 수 있는 독자적인 역할이다.

3.2. 5·18 문화예술 활동의 역할

문화예술의 일차적인 속성은 대상의 우회적인 재현 및 형상화와 거기에 수반되는 미학적 및 유희성에 있고, 그 이차적인 속성은 창조적 텍스트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의 은밀함-내지는, 내밀함-이다. 5·18의 접속·확장·공유를 위한 활동에 있어 문화예술이 수행할 수 있는 독자적인 역할 또한 이와 같은 속성과 직결된다. 5·18 관련 문화예술 활동의 빈곤함이 두고두고 외부적인 지탄과 내부적인 자탄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어찌 보면 그 빈곤함 역시-외부적인 감시와 통제에 못지않게-문화예술의 일차적인 속성과 무관하지 않다.

5) "(...) 모든 문학은 '이데올로기'라고 믿도록 요구된다면 우리는 결국 등을 돌릴 수밖에 없다. (...) 모든 문학은 '미적'이다라고 믿도록 요구된다면, 우리는 약간은 더 오래 머무르지 않는 모르지만 결국엔 등을 돌리게 될 것이다" (Williams: 1981, 191).

6) 물론 이런 류의 '상보성' 인식은 앞서 거론한 '내부적인 상대친화성' 및 '공감대'와 더불어-5·18 관련 주체들 모두에게 요청된다. 그리고 결론에서 다시 거론하겠지만, 특히 5·18 현장 주체들에게 이와 관련한 열린 의식과 선도적인 태도가 더욱 더 절실하게 요청된다.

사실 집권세력이 5·18 현장을 외부로부터 철두철미하게 차단했고 사태 이후에도 부단하게 5.18 관련 각종 활동을 철두철미하게 감시, 통제, 탄압했다는 외부적인 요인 이외에도, 5·18이 그 자체로서 문화예술적 재현 및 형상화를 가로막는 요인을 내포하고 있었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지성과 비판 의식을 갖고 있는 문화예술 주체들을 중심으로 두고 볼 때, 5·18 현장의 고립성 때문에 문화예술적 재현의 외연이 극도로 제한되었고, 5·18 현장의 참혹성 때문에 문화예술 특유의 미학적 및 유희성을 수반한 형상화에 크나큰 제약이 따랐으며,⁷⁾ 5·18 현장을 외면하고 살아남았다는 죄의식과 희생자들에 대한 채무 의식 때문에 창작 의욕이 아예 고갈될 정도였던 것이다.⁸⁾

위와 같은 복합적인 요인들로 말미암아 5·18 이후 상당 기간 동안 5·18 관련 문화예술 활동이 불모 상태나 다름 없었다. 그런 가운데 5.18 현장 주체들 및 일부 양심세력을 중심으로 5·18 현장의 사진, 영상, 유인물 등이 암암리에 유포되었다. 그런데 이런 자료마저도 현장 주체들에게는 분통이 터질 정도로 터무니 없이 미비한 것이었고, 극소수나마 그것을 접한 일반인들에게는 의아심, 혐오, 실망과 같은 매우 미묘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5·18 이후 아주 드물게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문화예술 텍스트들도, 주로 참회, 절규, 동정, 고발, 원망, 호소, 질타와 같은 주체 과잉 또는 상대 과잉의 성격을 띤 채, 방금 언급한 것과 똑같은 이중적인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5·18 현장 안팎의 이런 괴리 현상이 여전히 5·18의 지역적인 고립과 5·18 현장 주체들의 갈증으로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위와 같은 요인들을 두루 고려할 때, 6월 항쟁을 기점으로 그 이후에는 5·18 관련 문화예술 활동이 양과 질 모두에 있어 그 나름의 독자적인-그리고, 상보적인-역할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실명, 익명, 또는 집단 명의로 창작·유포된 적잖은 운동 가요들이 대학과 노동 현장을 중심으로 내부 결속의 강화 기능을 발휘함과 아울러 일반 대중에게도 일정 파급 효과를 가져왔다. 김남주, 문병란의 시들이 문화예술계를 중심으로 상당 정도 확산되었고, 황지우, 박노해 등의 시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대중 수준의 확산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문순태, 임철우 등의 소설도 적어도 문단과 대학을 중심으로는 적잖은 화제 거리였다.⁹⁾ 또 다른 예를 들어, 임진택의 「오월 광주」는 창작판소리를 매개로 당시까지 무풍 지대나 다름 없었던 국악계를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6월 항쟁을 전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한 이애주의 춤사위가 폭넓은 대중의 가슴 속에 스며들었으며, 윤이상의 교향곡 「광주여, 영원히」는 음악가 자신의 대내외적 지명도만으로도 5·18의 대내외적 접속·

7) "광주 체험은 그러나 너무도 압도적이어서 그것을 사회화하는 데 시인들은 큰 고통을 겪는다. 광주를 노래하는 순간, 그 노래는 체험의 절실함을 잃고, 자꾸만 수사가 되려고 한다. 성실한 시인들의 고뇌는 거기에서 나온다." (김현, 「보이는 심연과 안 보이는 역사 전망」, 『전체에 대한 통찰』, 나남, 1990, 416-417).

8) 이를 입증하는 것이 바로 외부적인 감시, 통제, 탄압이 완화되는 과정에서도-사회과학적인 접근 결과물의 급속한 양산과 달리-5·18 관련 문화예술 텍스트가 시기별로 괄목할 만한 양적인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나아가서, 장르별로 서사성이 낮은 판화, 회화, 시, 가요에 비해 서사성이 높은 소설, 영화, 연극 등이 양적으로 더욱 빈곤한 점도 여기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9) 예를 들어, "쫓, 기대했던 것보다는 별 것도 아닌 것" (임철우, <관객들>, 『달빛발기』, 116쪽)

10) 이은경은 정한모가 "일제강점기의 3·1운동과 관련해 제대로 된 민족시 한 편이 남아 있지 않은 것에 대해 크게 통탄한 적이 있다"고 하면서, "(5·18의 경우) 그 당시부터 즉석에서 시가 씌어져 낭송되기도 했지만, 그 이후 지금까지 이미 수천 편의 문학작품이 생산되었는데" 바, "그리고 보면 문학사적 입장에서 살펴볼 때 광주민주화운동은 상당히 행복한 편"이라고 한다 (이은경, <광주민주화운동 시의 현황과 과제>, 『5·18 민주항쟁과 문학·예술』, 85-103, 94쪽).

확장·공유에 크게 기여했던 것이다.

발표자가 볼 때 현장 주체를 비롯하여 5·18 관련 주체들 모두가 위와 같은 인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특히 80년대에 활동했거나 성장한 문화예술 주체들이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5·18 관련 대상 충실성, 죄의식, 채무 의식, 내부적 자탄을 미래지향적으로 극복할 필요가 있다. 5·18 관련 정치적 담론 및 사회과학적 접근의 활성화가 상당 수준에 다다랐다고 전제할 때, 거기에 문화예술적 상호작용의 활성화가 가세함으로써 비로소 5·18의 대중적 확산과 5·18 정신의 내면화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단, 5·18 이후 3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난 현 단계에서는 장르별 우선 순위, 시점(視點) 설정, 서사와 묘사의 배분 등 문화예술적 형상화에 있어 잠재적 수용자-즉, 일반 대중-를 우선 시하는 더욱 더 세심한 배려가 요구된다.

4. 문화예술적 재현과 대상 충실성

5·18의 문화예술적 형상화에 있어 대상 충실성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5·18 자체가 우리 현대사에 큰 획을 그은 역사적 사건이고 그 사건을 둘러싼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대립 구도가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더 그렇다. 대상 충실성이 결여되는 경우 잠재적 수용자를 상대로 하는 설득력이 결여될 뿐만 아니라, 특히 적대세력에게 공격과 반론과 비난의 빌미를 제공하게 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5·18 현장에 없었던 사람은 5·18을 거론하지 말라'는 식의 지나친 대상 충실성 요구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¹¹⁾ 그것이 5·18 관련 문화예술에 불모 상태를 유발함과 아울러 5·18의 접속·확장·공유를 위한 활동 전반에도 심각한 공백과 한계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드라마 「모래시계」에 대한 다음과 같은 평가가 매우 시사적이다.

“비록 이 드라마가 공수부대원들을 광주 시위 현장으로 몰아넣은 배후 세력에 대한 묘사를 등한히 하고 있긴 하지만, 계엄군의 진압 장면을 촬영한 NHK의 기록 화면을 드라마 속에 삽입하여 사실성을 부여하는 등, 시청자들로 하여금 참혹했던 광주를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할 수 있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광주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는 가교를 놓은 것은 분명해 보인다.”¹²⁾

또 다른 예로 근래에 개봉된 영화 「화려한 휴가」의 경우, 5·18을 폭넓게 재현하는 가운데에서도 당시 집권세력이 자행한 교통 및 통신 차단을 부각시키지 않았고 심지어는 제대로 암시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대상 충실성에 준거한 이와 같은 중대한 흠결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문화예술 이외의 다른 부문에서 할 수 없는, 그리고 문화예술 내부에서도 다른 장르가 할 수 없는, 그 나름의 독자적인 역할

11) 이와 관련하여 매우 시사적인, 발표자의 개인사 한 가지를 소개한다. 발표자가 1993년에 5·18을 구심점으로 하는 2인칭 장편소설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발표했다. 그런데 장정일이 그의 「독서일기」에서 ‘근래에 읽은 가장 좋은 소설’이라고 호평한 것 이외에는, 대부분의 문학평론가들과 지인들의 반응이 매우 냉소적이었다. 문학평론가들은 2인칭 창작 기법을 ‘생경함’, ‘어색함’으로 평가 절하했고, 작가와 작품 속의 주인공을 ‘이불속 혁명가’로 폄하했으며, 지인들 중에는 ‘현장에 있지도 않았으면서 어떻게 그런 글을 쓸 수 있느냐’, ‘너에게 그런 글을 쓸 자격이 있느냐’는 식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았다.

12) 왕은철 <5·18항쟁의 예술적 형상화-예술가의 역사의식과 윤리적 책무에 관하여>, 『5·18민중항쟁과 문학·예술』, 5·18기념재단, 2006, 심미안, 427쪽.

을 해냈다는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¹³⁾ 나아가서, 최근에 쇠고기 협상 파문을 계기로 가시화되고 있는 10대 중·고등학생들의 권리 의식과 비판 의식, 참여 의지와 실천 의지 또한 5·18의 접속·확장·공유의 한 단계로서, 시기적으로 볼 때 「화려한 휴가」를 매개로 하는 문화예술적 상호작용이 거기에 상당 정도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5·18의 재현과 문화예술적 형상화에 있어 대상 충실성을 지나치게 약화시키는 추상성이나 탐미주의도 경계해야 마땅하다. 그것이 5·18 관련 ‘접속’에는 어느 정도 기여할 망정 5·18 정신의 ‘확장’과 ‘공유’에 있어서는 오히려 역효과를 유발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발표자가 볼 때, 영화 『꽃잎』의 경우가 그렇다. “5.18이라는 엄청난 사회적 고통에 대한 직무 유기의 자책감”을 투사했달지, “5·18 이후 심리적인 절름발이가 된 우리 모두의 일그러진 자화상”을 제시했다는 전문가 수준의 평가와 달리, 적어도 평균 대중을 놓고 볼 때는 15세의 여자 주인공, 정신 이상의 배경, 노골적인 성폭행 장면 등이 5·18을 대변하기에는 지나치게 추상적이었다. 그리고 그 저변에 일반 대중의 평균적 수용 역량을 넘어서는 일종의 탐미주의가 깔려 있었다.¹⁴⁾

박라연의 아래와 같은 시도 대상 추상성의 한 단면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 시가 지니고 있는 대중 친화력과 잠재적 수용자를 상대로 하는 은밀한 접속 효과는 아주 높이 평가할 만하다. ‘조카’, ‘이모’라는 친족 어휘, ‘지영’이라는 이름, ‘안경’, ‘실눈’ 등 친숙하기 그지 없는 어휘들과 더불어 형성되는 일상성을 바탕으로, 지배 이데올로기를 근거 박약한(6행: “나이먹은 이모라고”) 것으로 희석시키고, 새로운 이데올로기(2행: “알수 없는 책”)를 부각시키는 가운데, 이성과 감성에 두루 걸치는 성찰(9행: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느냐”)의 수용 공간을 조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그렇다.

- 1 잊그제 코 훌리던 조카
- 2 밤새워 알 수 없는 책을 읽고
- 3 이젤을 떨리했다
- 4 지영아 사람답게 살려면
- 5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아라
- 6 나이먹은 이모라고 몇 마디 했더니
- 7 안경 너머 실눈으로
- 8 얼음장 깨는 소리를 한다
- 9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느냐고¹⁵⁾

13) 발표자가 볼 때 이 영화는 「화려한 휴가」라는 제목만으로도 5·18의 접속·확장·공유에 기여하였다. 자국민을 상대로 하는 작전명으로 「화려한 휴가」를 선정한, 정통성 부재의 당시 집권세력의 파렴치함을 폭넓게 알렸다는 점에서 그렇다.

14) 발표자가 직접 목격한 반응도 주로 ‘왜 이런 걸 만들어?’(일부 운동권 학생들) 하는 불만 소리, ‘겨우 이거였어?’(일반 관객들) 하는 푸념, ‘아이들은 보지 말라고 할까 봐’(아내) 하는 우려 등이었다.

단, 이 영화가 만일 5·18의 폭넓은 공유가 실현된 단계에서 개봉된다면, 거기에 깔린 추상성과 탐미주의가 일반 대중에게도 수용 가능한 가운데 감독이 의도한 메시지의 호소력과 더불어 관객들에게 깊은 성찰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15) 박라연, 「잊그제 코 훌리던」, 전문, 『서울에 사는 평강공주』, 1990, 문학과학사, 45쪽.

그런데 그 '새로운 이데올로기'(2행: "알수 없는 책")가 지나치게 추상적이다. 이 시가 발표 시기상(1990년) 다분히 5·18을 형상화하고 있다고 여겨지는데, 텍스트상으로 2행의 '알 수 없는 책' 이외에는 5·18 관련 단서가 너무 희박하다는 점에서 그렇다.¹⁶⁾

5. 문화예술적 형상화와 대상 과잉성

5.1. 현장 대상 과잉성

그런가 하면 대상 충실성을 넘어서는 대상 과잉의 형상화도, 앞서 언급한 '주체' 과잉 또는 '상대' 과잉과 마찬가지로, 5·18의 접속·확장·공유에 일정 한계를 드러낸다. 물론 여기서 대상 과잉이라고 하는 것은 5·18 현장 주체들을 비롯한 우호세력의 시점이 아니라, 잠재적 수용자-즉, 일반 대중-을 염두에 두고 거론하는 것이다. 사실 5·18 관련 문화예술 담론과 텍스트는, 상당 부문에 있어, 특정 창작 주체에 의한 5·18 현장에 대한 서술, 묘사, 형상화의 결과물이다. 그런데 5·18과 관련한 똑같은 형상화가 5·18 현장 주체들에게는 도무지 해소되지 않는 갈증을 남기는 반면에, 그리고 5·18 주체세력 및 적극적인 우호세력에게는 내부 결속을 강화하는 순기능을 할 수 있는 반면에, 적어도 일반 대중에게는 거리감, 거부감, 혐오감, 배제감 등을 유발하는 역기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5·18 관련 문화예술의 잠재적인 수용자로서 일반 대중을 고려할 때, 대상 과잉의 대표적인 사례가 5·18 현장의 사실적인 살해 장면들과 클로즈업되는 참혹한 시체들이다. 그것들을 사실적으로 형상화하는 그림도 대상 과잉의 역효과를 유발할 여지가 많다. 더군다나 이런 류의 대상 과잉은 대중과의 접속 가능성 자체를 현저하게 약화시키게 된다.¹⁷⁾ 그런가 하면 사진, 영상, 그림이 아닌 다기한 언어적 형상화에 있어서도 대상 과잉의 문제가 대두한다. 시, 소설, 영화, 연극, 운동 가요 등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언어적 형상화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¹⁸⁾

한 예를 들어, 5·18을 가장 사실적으로 다룬 유일한 대하소설로 공인받고 있는 임철우의 『봄날』에는, 아래와 같은 류의, "서사적 경제성을 무시한 반복적인 폭력의 장면들이 설새없이 그리고 진저리 치도록 출몰한다."¹⁹⁾ 물론 이것은 5·18에 대한 작가 나름의 소명 의식, 그리고 '사실성'과 '상상력'의 상호보조적 대립 구도에서 '사실성'에 치중하려는 작가의 의지적인 선택의 결과다.

16) 소설로서는 최윤의 『저기 소리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 서술상의 실험 정신과 더불어 높은 등급의 대상 추상성을 드러내고 있다. 그 반면에, 그와 유사한 실험 정신을 발휘하고 있는 구효서의 『더 먼곳에서 돌아오는 여자』는 대단원에서 5·18을 드러내는 극적인 효과를 자아낸다.

17) 이런 사진이나 그림을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에 올리는 경우 '혐오물'로 분류되어 즉각 삭제됨과 아울러 경고 문구가 전달되는 것을 발표자 스스로 체험했다. 요컨대 대상 과잉의 경우 대중과의 '접속' 자체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는 것이다.

18)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5·18 관련 각종 행사 유인물, 사회자의 발언, 주최측 인사들의 단상 발언 등과 관련하여서도 주체 과잉, 상대 과잉, 대상 과잉 등의 문제를 거론할 수 있다.

19) 정명중, <'5월'의 재구성파 의미화 방식에 대한 연구>, 『5·18 민중항쟁과 문학·예술』, 269-311, 298쪽.

피, 그것은 피의 웅덩이었다. 인간의 몸뚱아리에서 그렇게 엄청난 양의 피가 쏟아져나올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그 끔찍한 열 다섯 개의 살덩어리들을 명치네 중대원들은 하나씩 눈바다로 끌어내야 했다. 창자가 쏟아져 나오고 목이 덜렁 끊어져 버린 시체, 붉은 염료에 담긴 듯 긴 머리채가 온통 끈적한 핏물에 젖은 처녀, 무려 수십 발의 총탄에 전신이 걸레쪽처럼 너털너털해진 어린 여학생도 있었다. 넓은 들판 한가운데인데도 코가 막힐 정도로 번지는 비릿한 피내음 때문에 명치는 몇 번이나 헛구역질을 했었다.²⁰⁾

『봄날』의 여러 대목이 이렇게 "문학적(혹은 미적) 형상화라는 이름에 갇히는 것을 의도적으로 포기하거나 유보하고 있다."²¹⁾ 물론 이처럼 5·18의 잔혹성과 참혹성을 가시적으로 형상화하는 것이 전적으로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그로 말미암아 작품의 문학성이 전적으로 훼손되는 것도 아니고, 나아가서는 텍스트 전체적인 맥락에 힘입어 이런 대목이 갖는 미학적인 결합이 상쇄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런 류의 묘사 중심 서술과 관련하여 꼭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잠재적 '수용자'를 중심에 놓고 볼 때 여실히 드러나는 대상 과잉성이다.²²⁾

더욱 쉬운 예로, 6월 항쟁을 전후하여 운동권의 단골 애창가였고 여전히 5·18 주체세력들의 애창가로 남아 있는, 「오월의 노래」에 당장 어휘상의 대상 과잉 요소가 엿보인다. 그리고 이 노래가 내포하고 있는 탁월한 시성, 음악성, 역사성, 압축된 메시지의 기능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어휘상의 대상 과잉 요소가 예나 지금이나 대중 친화력을 현저하게 반감시키는 것으로 여겨진다.

꽃잎처럼 금남로에 뿌려진 너의 붉은 피
두부처럼 잘리워진 어여쁜 너의 젓가슴
(후렴)오월 그날이 다시오면 우리 가슴에 붉은 피սս

왜 쏘았지 왜 찢렸지 트럭에 싣고 어디갔지
망월동에 부릅뜬 눈 수천의 핏발 서려있네 (후렴)

산 자들이 동지들이 모여서 함께 나가자
욕된 역사 투쟁없이 어떻게 헤쳐 나가리 (후렴)

대머리아 쪽바리아 양키놈 솟은 콧대야
물러가라 우리 역사 우리가 보듬고 나간다 (후렴)
붉은 피피피 (중결)²³⁾

20) 임철우, 『봄날』 제5권, 문학과지성사, 1998, 159쪽.

21) 정명중, 같은 책, 299쪽.

22) 돌이켜보면 이런 류의 대상 과잉성도 5·18과 관련한 죄의식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 발표자 자신의 소설에도 다음과 같은 류의 대상 과잉 묘사가 자주 드러난다. "아기의 얼굴이, 우무처럼 호물어지고, 자루처럼 일그러진, 피문은 날갯짓으로 올 때, 아기의 얼굴이 당신의 시신으로 올 때, 아기의 얼굴이, 바가지처럼 으깨지고, 문둥이처럼 문드러진, 당신의 시신으로 올 때, 아기의 얼굴이 당신의 시신으로 올 때..."(『지극히 작은 자 하나』, 1993, 살림, 250쪽)

23) 참고로, 「오월의 노래」의 모태인 프랑스 민중 가요 「누가 할머니를 죽였나」(Qui a tué grand-maman

요컨대 6월 항쟁 당시에도 이 노래가 대중화되지는 못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 당시 시위 참여들마저 적잖게 따라 부르기를 꺼렸던 것처럼, 지금도 5·18 관련 주체세력 및 적극적인 우호세력의 집회 또는 행사 현장 밖에서는 전혀 대중 친화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5.2. 사태·공간·시점 대상 과잉성

발표자가 볼 때, 그리고 여전히 일반 대중의 정서와 수용 양상에 비추어볼 때, 5·18 관련 문화예술 텍스트 및 담론에 세 가지 유형의 또 다른 대상 과잉이 엿보인다. 첫째 사태적 성격의 대상 과잉, 둘째 지역적 성격의 대상 과잉, 셋째 시점(視點)상의 대상 과잉이 그것들이다.

사태적 성격의 대상 과잉성도 크게 세 갈래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역사적인 맥락을 배제한 채 5·18을 정점에 두는 역사적 대상 과잉이고, 둘째는 상황 요인들을 배제한 채 5·18 현장을 부각시키는 상황 대상 과잉이고, 셋째는 5·18 정신의 외연을 극대화하는 해석 대상 과잉이다. 5·18 정신을 민주화, 민족 자주, 민중 생존권, 상생평화, 공생공영과 같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개념들로 확장 해석하거나, 국제화, 세계화의 대상으로 거론하거나, 기독교의 각종 우화 또는 불교의 화엄, 화쟁, 해원상생 등과 비유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지역적인 성격의 대상 과잉성은 전라도, 광주, 금남로, 도청, 무등산, 망월동과 같은 어휘의 높은 빈도와 더불어, 현장 주체들 및 지역민의 민주 의식, 항쟁 의지, 자발성, 헌신성 등이 중점적으로 부각될 때 감지된다. 이런 지역 대상 과잉성을 잘 대변하는 것이 '전라도의 한', '성지', '영웅'과 같은 어휘들이다. 예를 들어, 아래 백무산의 시 「오월은 어디에 있는가」의 경우, "오월을 더 이상/광주에 못박지 말아다오"라는 외연 확대의 열망을 형상화하는 가운데에서도, '광주'라는 지명의 대상 과잉성을 드러내고 있다.

-Michel Polnareff)의 가사를 소개한다. 이 두 노래의 가사를 비교해 보면 「오월의 노래」에 담긴 대상 과잉성이 여실히 드러난다.

Il y avait du temps de grand-maman Des fleurs qui poussaient dans son jardin. Le temps a passé. Seules restent les pensées Et dans tes mains, il ne reste plus rien.	할머니 살아 생전엔 정원에 꽃 피어났건만 세월 흘러 상념뿐 모두가 다 사라졌네
Qui a tué grand-maman Est-ce le temps ou les hommes Qui n'ont plus le temps de passer le temps La la la ...	(후렴)누가 할머니를 죽였나 세월일까 사람들일까 허둥대며 사는 사람들일까 라 라 라 ...
Il y avait, du temps de grand-maman Du silence à écouter Des branches sur les arbres, des feuilles sur les branches 나무엔 가지, 가지엔 잎 Des oiseaux sur les feuilles qui chantaient.	할머니 살아 생전엔 고요함도 벗어났네 있엔 재잘대는 새 소리 (후렴)
Le bulldozer a tué grand-maman Et changé ses fleurs en marteaux-piqueurs Les oiseaux, pour chanter, ne trouvent que des chantiers Est-ce pour cela que l'on te pleure	블도저가 할머니를 죽였네 꽃 대신 굴착기만 돌고 정원은 작업장 되어 새 앉아 노래할 곳도 없네 (후렴)

지도를 펴보자 / 광주는 어디에서 계속되고 있는가 / 광주를 헤쳐보자 / 오월은 어디에서 계속되고 있는가 // 광주는 이제 한반도 동서남북 어디에나 있다 / 파쇼의 폐악성과 제국주의 독소를 / 집중투하한 노동자, 농민의 삶과 // 노동자 동지들 / 오월을 더 이상 / 광주에 못박지 말아다오 / 우리의 자랑스러운 투사들을 / 더 이상 망월동에 묻어두지 말아다오 / 더 이상 상처로만 치유하려거나 / 지난 역사에 맡기지 말아다오 / 오월은 노동자, 농민의 / 영웅적 투쟁의 대열에 / 살아있다 / 계속되고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유형의 대상 과잉성이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그 당연한 결과로서, 5·18 관련 문화예술 텍스트에 시점(視點) 상의 대상 과잉성이 여실히 드러난다. 달리 말하자면, 바깥에서 광주를 향하는 '구심적' 시점에 비해 광주를 기점으로 하여 바깥으로 향하는 '원심적' 시점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발표자가 볼 때, 5·18 관련 문화예술 활동에 두루 나타나는 이같은 대상 과잉성이 일각에서 우려하는 5·18의 '지속적인 고립'과 무관하지 않고, 나아가서 지역 내부의 "5·18에 대한 기피 의식과 나름의 소외감"(지선 스님)과도 직결되어 있는 것 같다. 5·18 현장 주체 및 지역 주체들의 전유욕, 죄의식과 채무 의식에 사고잡힌 문화예술 주체들의 과잉 대상성과 성급한 확장 욕구, 이런 요인들이 일종의 배타성을 낳게 되고, 그것이 밖으로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유발하는 가운데 안으로는 부메랑이 되어 버거운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은 아닐까?...

문화예술의 사회적 개입은 창작 주체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텍스트'를 매개로 하는 수용 주체의 수용 양상에서 일어난다. 그런데 바르트가 주장하듯이, 수용 행위가 결코 '순진무구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창작 주체로서는 텍스트상에 일정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을 뿐, 수용자의 수용 양상을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는 없다. 창작 단계에 이미 잠재적 수용자가 개입하거나, 특히 문화예술 텍스트의 수용은 '수용자' 중심의 '상호주체적' 양상을 띠게 된다. 바로 이 때문에 5·18 관련 문화예술 활동에 있어서도 대중과의 접촉 가능성, 대중 친화력, 대중의 현재적 정서, 대중의 수용 역량, 대중의 일반적인 수용 양상 등을 두루 고려할 필요가 있다.²⁴⁾

5. 결 론

우리의 삶의 환경 자체가 중층적인 이데올로기의 망이다. 그런데 왜곡된 이데올로기들을 희석, 해체, 소멸시키고 건전한 이데올로기들을 생성, 파급, 내면화시키는 데 있어 일시적 혁명과 시한부 운동은 어쩔 수 없는 제약과 한계를 안고 있다. 그 공백을 메꾸는 것이 바로 문화예술 활동이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기호활동의 한 형식 아래, 인간 내면에 깊숙이 침투하여, 미학적·유희적 효과와 더불어, 현실을 보여 주고 또 새로운 세계를 펼쳐 놓으며, 폭넓은 대중과 은밀한 소통을 할 수 있는, 독자적인 성격의 것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24) 앞에서 암시한 것처럼, 넓은 의미에서의 예술성은 예술 장르에만 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유형의 활동에 편재하기도 한다. 따라서 심지어는 5·18 관련 각종 행사 유인물, 사회자의 어법, 주최측 인사들의 단상 발언 등과 관련하여서도 주체 과잉, 상대 과잉, 대상 과잉 등의 문제를 거론할 수 있다.

이 발표에는 5·18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발표자 나름의 기본 인식이 깔려 있다. 첫째 5·18에 여러 시대, 여러 지역에 걸치는 민주화운동의 시·공간적 적층 효과가 내재되어 있다. 둘째 5·18에서 특정 지역 특정 주민들의 자발성에 못지않게 특정 정치세력이 조장한 특정 상황 요인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 셋째 5·18을 이렇게 확대 인식할 때 비로소 5·18 자체의 지역적 고립이 해소되고 5·18 정신의 광범위한 확장이 실현될 수 있다. 넷째 5·18의 문화예술적 재현 및 형상화에 있어서도 이에 상응하는 대상 인식 및 방향 설정이 요청된다.

5·18 관련 문화예술 텍스트와 같이 가시적인 목적성을 띤 경우, 아주 쉽게 말해, 적어도 부모가 자식-특히 딸-에게 권유하는 것을 망설이지 않을 정도의 균형 잡힌 형상화가 요청된다. 아울러, 문화예술 주체들이 공유하고 있는 5·18 관련 죄의식 및 채무 의식과는 전혀 별개로, 문화예술 텍스트의 잠재적인 수용자들-즉 일반 대중-가운데에는 이미 배제감 내지는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이들이 많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문화예술적 상호작용에 있어 이렇게 수용자-즉 일반 대중-중심의 상호 주체성을 인정하는 것이 5·18의 접속·확장·공유를 열망하는 모든 주체들에게 요구되는 '미덕'이자, 향후 우호중립세력의 점진적인 확장을 겨냥하는 가장 유효한 '전략'이기도 하다.

<참고문헌>

김옥동 (1988): 『대화적 상상력: 바흐친의 문학이론』, 문학과지성사.
 김현(1990): <보이는 심연과 안 보이는 역사 전망>, 『전체에 대한 통찰』, 나남.
 박라연(1990): 『서울에 사는 평강공주』, 문학과지성사.
 왕은철(2006): <5·18항쟁의 예술적 형상화 -예술가의 역사의식과 윤리적 책무에 관하여>, 『5·18민중항쟁과 문학·예술』, 5·18기념재단.
 유서로(유제호,1993):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살림.
 이은경(2006): <광주민주화운동 시의 현황과 과제>, 『5·18 민중항쟁과 문학·예술』, 85-103, 5·18기념재단.
 李炳赫(편저)(1986): 『언어사회학 서설: 이데올로기와 언어』, 까치.
 임철우(1998): 『봄날』, 문학과지성사, 1998.
 정명중(2006): <5월의 재구성과 의미화 방식에 대한 연구>, 『5·18 민중항쟁과 문학·예술』, 269-311.
 Anderson C. (1986): 『새로운 사회학, 비판적 현실조망을 위하여』 (Toward a New Sociology, 1974). (김동식, 임영일 역), 돌베개.
 Bachmann C. et al.(1981): *Langage et communications sociales*, Crédif-Hatier.
 Bakhtine M. (1977/1929): *Le Marxisme et la philosophie du langage*, Minuit.
 Goffman E. (1983): 『Microsociologie et histoire』, in *Le sens de l'ordinaire*, CNRS.
 Hudson R.A.(1986: 『社會言語學』 (Sociolinguistics, 1980) (崔鉉郁, 李元國 역), 한신문화사.
 Hymes D. (1984): *Vers la compétence de communication*, Hatier-Crédif.

Jakobson (1970): *Essais de linguistique générale*, Seuil.
 Marc E. et D.Picard (1989): *L'interaction sociale*, P.U.F.
 Reboul O.(1977): *L'Endoctrinement*, P.U.F.
 ——— (1980): *Langage et idéologie*, P.U.F.
 Roderick R. (1992): 『하버마스의 사회사상』 (Habermas and the Foundations of Citical Theory, 1985) (김문조 역), 탐구당.
 Todorov T. (1981): *Mikhail Bakhtine: le principe dialogique*, Seuil.
 Williams R. (1982): 『理念과 文學』 (Marxism and Literature, 1977) (이일환 역), 문학과지성사.

‘88만원세대’에게 ‘5·18광주’는 ... 희미하고 무덤덤한 과거사?!

김보현

(성공회대 민주자료관 연구교수)

“생성이 없는 기억은 사라진다.”

소박한 문제의식

“요즘 20대 대학생 친구들은 ‘5·18광주’에 대해서 어찌 생각하고 있나?” 이처럼 대단히 소박한 궁금증이 필자가 본 원고를 준비한 출발점이었다.

나는 어떤 명시적 가설이나 구체적 논지를 예비해두지 않았다. 각별한 방법론을 염두에 두고 있지도 않았다. 다만 지금 그 과정을 되돌아보면 앞의 소박한 궁금증은 적어도 하나의 규범론과 두 개의 의문들을 암암리에 전제해두고 있었다. 즉 ‘5·18광주’처럼 중요한 역사는 젊은 후배들이 알아야 하고 그 현재적 의미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고민 혹은 정리해둔 바가 있다면 좋겠다는 입장이 깔려 있었다. 그리고 ‘5·18광주’에 대한 침묵의 강요 및 조직적 은폐가 공공연히 행해지던 국면을 종결지은 ‘민주화 이행’이 20대에게 좀 더 세부적으로 인식상의 어떤 효과를 낳았을까 하는 것, 또 지나치게 개인주의적이고 잘 하는 것이라곤 영어밖에 없다는 식으로 ‘진보적(?) 386세대’의 비판 대상이 되기까지 하는 그들의 ‘보수성’을 실제로 알아보고픈 욕구 등이 있었다.

내게 주어진 ‘88만원세대’라는 개념은 이 글의 준비과정에서 당초 그저 ‘20대’, ‘젊은이들’, ‘대학생들’ 등의 다른 칭호에 불과하였다. 나는 ‘88만원세대’의 개념적 적실성 여부, 지금의 20대 대학생들 중이 ‘88만원세대’라 호명하면서 그들의 ‘5·18광주’를 논한다는 것의 취지가 무엇인가 등에 대해 충분히 숙고하지 않은 상태로 일을 시작하였다. 그러니 그들의 목소리들을 청취하던 중 아래와 같은 질문을 받고, 일론 답하지 못한 채 머뭇댈 수밖에 없었다. 또한 연구자로서 나의 기본 자질에 대해 얼마간 반성의 시간을 가져야 했다.

... ‘88만원세대가 기억하는/생각하는 5·18광주’라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88만원세대’의 의미는 무엇이고, ‘88만원세대’와 ‘5·18광주’의 상관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 선생님께서는 저를 ‘88만원세대’로 분류하고 계신 거죠? 제가 『88만원세대』(우석훈·박권일 공저)를 읽어보았을 때, ‘88만원세대’는 ‘386세대’나 ‘유신세대’와는 다르게 그 성격이 경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88만원세대’의 정치적 성격을 무어라고 할 수 있는지는 ‘없다’는 것 외에는 제시

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겐 (선생님의) 이 주제가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 (『88만원세대』의 경제론을 받아들이면서) ‘88만원세대’의 정치의식을 분석해보시려는 것인지요?)

몇몇 다른 친구들에게서도 『88만원세대』에 나오는 ‘88만원세대’ 개념의 문제점들을 듣게 되었는데, 다 일리가 있는 내용들이었다. 그들의 지적들을 내 방식대로 요약하자면 ‘88만원세대’는 서술적 용어(descriptive terminology)로서 상당정도 수궁할 수 있는 개념이나, 분석(analysis)과 대안(alternatives)이란 차원들에서 보면 고개를 가우뚱하게 만드는 말이라는 요지였다. 특히 ‘세대들 간의 착취 및 경쟁’이란 진단에 대해서 회의적이라는 것이었다.²⁾

그러나 나는 이 글에서 계속 ‘88만원세대’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물론 이것이 『88만원세대』의 분석과 대안을 수용한다는 뜻은 아니다. 일단 주어진 그 개념을 서술적 차원에 한정시켜 받아들이고, 내가 이 글의 집필을 위하여 작업한 과정의 결과물들 중 하나로서 ‘5·18광주’와 ‘88만원세대’의 관계에 대해 짧은 길든 언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무의미하다는 판단은 들지 않는다.

이 글이 “‘88만원세대’의 ‘5·18광주’에 대한 기억들은 어떤 것들일까?” 라는 질문에서 출발하였으나, ‘그 기억들만을 그대로’ 써내려가지는 않는다. 이 글은 어디까지나 필자의 목소리이지 ‘88만원세대’의 직접적 발언들이 아니다. 바꾸어 말해서 ‘나의 문제의식’과 ‘그들의 기억들’이 조우하여 생성해낸 원고일 수 있고, 아니면 ‘나의 문제의식’ 속에 투영된 ‘그들의 기억들’로 여겨질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 글이 ‘과학적 조사보고’(이것이 정말 가능한지는 모르겠으나 가능하다 하더라도)를 의도했던 것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 나는 처음부터 그런 목적의식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았다. 자신들의 기억들을 들려주고 보여준 그들이 ‘88만원세대’를 집합적으로 대표할 수 없음은 물론이지만, 또한 ‘88만원세대’의 구성원들임도 틀림없는 사실이다. 나는 그들의 기억들을 경유하여 나의 기억과 문제의식을 반추하고 이 사회에 대해서 재고하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이다.

필자는 원고 집필을 위해 인터뷰, 설문조사, 집담회 등의 방법들에 주로 의존하였다. 그러나 이런저런 사정들로 인하여 아주 최근에 이르러서 서둘러 작업해야 했고, 그랬기 때문에 그리 많은 목소리들을 청취하지는 못하였다.³⁾ 이 점이 본고가 가지는 큰 한계가 될 것이며 필자 스스로 생각하는 아쉬운 지점이다. 앞에서 말하였듯이 예컨대 통계적 접근과 같은 것들이 상정하는 ‘과학성’, ‘객관성’ 등은 필자의 목적의식에서 배제되어 있다. 그러나 좀 더 많은 젊은 후배들과 ‘소통·이해’하는 시간들을 가졌다면 현재의 것보다 더 유의미한 원고를 작성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이, 발표하는 이 순간에도 앞서서 자꾸만 생겨난다.

1) ○○○대학교 설문응답자 답변에 덧붙인 글 중에서(2008년 5월 6일).

2) 『88만원세대』에 대한 한 고등학생의 비평도 유사한 논지를 개진한 바 있다(이선경 2007). 필자가 설문을 하고 난 연후에야 안 일인데, 앞에서 인용한 질문의 주체인 친구는 자신이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학내 독립 저널에 실은 원고를 통하여, 『88만원세대』에 함축된 욕망의 결들이 그 책에 의해 비판되는 사람들의 욕망과 중첩되어 있다는 점을 잘 짚어냈다. 그 학생은 이렇게 묻는다. “‘88만원세대’보다 ‘300만원세대’가 더 희망적일 수 있다고 믿는가?”(날래 2008).

3) 인터뷰 14명, 설문조사 169명, 집담회 1회(5명).

희미한 기억

“5.18광주’를 알고 있나요? 알고 있다면 알게 된 경로들은 어떤 것들이었는지, 알고 있는 그 내용은 무엇인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나는 이렇게 물었다.

아예 “모른다”, “처음 듣는다”는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많은 친구들이 답변을 하는 머리에 혹은 중간에 “잘은 모르는데”, “잘 알지는 못 합니다”, “잘 기억은 안 나지만”이라고 덧붙였다. 그들의 실제 기억들을 하나하나 들어보고 읽어보니 그것이 대부분 사실이었다. 여기에서 ‘사실’이란 판단은 ‘5·18광주’에 대한 많은 지식들을 구비하고 깊이 있는 통찰들을 해온 이들이 아니더라도, 그 친구들의 이야기들을 청취해본 사람들이라면 다들 “아, 정말 그렇구나” 하고 긍정할 수 있을 정도였다는 뜻이다. 즉 그들의 ‘5·18광주’에 대한 기억들은 흐릿하였다. 2008년 5월 1일과 6일, 9일, 나의 설문에 응해준 ○○○ 대학교 학생들 30명에만 한정해서 보더라도 그 기억들의 ‘흐릿함’을 쉽게 알 수 있다.

(고등학교 3년 때) 영화 <화려한 휴가>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또 영화를 보고 난 후 문과반 친구들이 이야기 약간 더 함. 근데 잘 기억이 ... 이과도 근현대사 수업하면 안 되나?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얼핏 듣고 지나쳤다. 후에 영화 <화려한 휴가>를 보고 좀 알게 되었다.

잘 알지는 못 하나 광주시민이 계엄군에게 살해됐다는 것과 광주시민이 김대중을 석방하라고 요구한 것과 무언가를 철회하라고 주장했던 것 정도 ... 무언가가 기억이 안 난다.

전두환 시기 때 민주화운동하는 광주시민 탄압? 자세한 건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자세히는 모르겠다. 거의 모르는 듯하다.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되었다. 정부의 강제진압으로 더 반발을 샀다.

2008년 5월 6일~9일 동안 나의 설문에 답하여준 △△대학교 학생들 115명의 기억들도 비슷하였다. 아래 인용한 것들은 역시 기억의 ‘흐릿함’을 잘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자세히는 모름. ‘강풀’의 만화를 보고 대략적인 내용만 알고 있음. 예) 전두환은 나쁜 새끼다.

고등학교 때 수능선택과목으로 근현대사를 배웠기 때문에 공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전두환 정부의 독재 → 광주시민들의 저항 → 계엄령, 공수부대 투입.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배웠습니다.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투쟁한 일.

학교 역사시간에 배운 것 같다. 정확히는 모르고 국가의 탄압에 저항했다는 것 정도?

알게 된 경위는 확실히 생각나지 않는다. 민주화를 열망하는 사람들이 군부에 대해 일어난 사건.

중학교 사회시간에 배운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화려한 휴가’라는 영화를 보고 ... 조금 알게 되었는데 당시 정권이 자신들을 위해 무고한 시민들을 죽인 것 같다.

광주시민들이 용기 있게(?) 들고 일어났다가, 처참하게 학살 까진 아니고 피(를) 분. 정부의 잘못된 대처. 아, 모르겠다.

수업시간(중고등학교 때) 교과서와 각종 비디오자료를 통해. 내용은 잘 모름.

고등학교 근현대사 시간. 일제시대 식민지경험, 일제로부터 이식된 군사문화 등 여러 요소가 축적되어, 우리나라에도 군사독제가 있었고 5·18은 특히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 때 일어난 민주화운동이라고 알고 있다. 많은 사람이 죽었고, 전라도 지역감정이 있고.

고등학교 국사/근현대사 시간에 배웠다. 4·19 → 5·18 → 6월항쟁 순으로 ... 비슷한 맥락의 운동으로 알고 있다. 5·18은 신군부세력에 항거한 ... 광주시민의 봉기??

중고등학교 때 사회시간에 배우고 열심히 외웠지만 잘 기억이 안 난다.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 군부독재에 반대하는 민주화운동이었다고 알고 있다.

전체 설문 응답자들 169명 가운데는 ‘5·18광주’를 박정희 정권시기의 일로 알고 있는 사람 2명, 일제시기 광주학생의거와 혼동하고 있는 사람 1명, 60년 4·19혁명과 혼동하고 있는 사람 1명, 87년 6월항쟁과 혼동하고 있는 사람 2명, 귀찮음 혹은 냉소의 표현이었는지 질문지를 그냥 백지상태로 돌려준 친구도 6명이 있었다.⁴⁾

인터뷰와 집담회에 임해준 이들은 모두가 한국 현대사나 현 시기 한국사회에 대해 높은 비판의식을 가진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르리라 기대하였고 또 실제로 그랬다. 아무래도 그들이 갖고 있는 관련 지식의 양이 좀 더 많았다. 그러나 그것이 모든 경우들에서 ‘5·18광주’에 대한 이해내용의 큰 차별성과 연동되고 있지는 않았으며, 다른 친구들의 이해와 비슷한 범주 안에서 기억의 상대적 선명함으로 나타나는 데에 머물고도 있었다. ○○○대학교 2년생 S군의 예를 옮겨 보면 아래와 같다.

그니까 전두환, 그 옛날 대통령이랑 양반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또 이건 너무 그냥 대강 아는 것이라서 ... 아 ... 광주사람들이 전두환 독재 플러스 계엄령에 대한 반대시위를 했었는데, 그거를, 광

4) 그들이 정녕 ‘5·18광주’를 몰랐다면 모른다고 썼을 것이다. ‘백지’는 나로서는 정확히 알 수 없는 무언의 메시지로 이해된다.

주를 아예 통째로 차단하고 공수부대를 쏟아 부어서, 아마 21일이었나? 그 때 도청 ... 가서 무력 사용 하여 시위 진압하고 그 과정에서 아예 인제, 음, 음, 차단시킨 채, 빨갱이들 소행이다, 이런 식의 2차적 폭력을 가하고 ... 그렇게만 ... 음 ... (2008년 5월 2일).

학생들이 '5·18광주'를 직접 경험할 수 없었고 어느덧 '5·18광주'가 있는 지 28년이란 세월이 흘렀음을 감안하면, 내가 이 원고를 준비하면서 은연중에 깔아두었던 규범론과는 관계없이, 그들의 '전승된' 기억들이 또렷하지 않다는 사실에 대해 즉자적 과민반응을 보일 필요까지는 없을 듯하다. '386세대'가 정규 학교교육을 받기 이전인 아주 어릴 적부터 각종 권력기관들에 노출·포위되어 성장하면서 '반공산주의적 인간'으로 훈육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6·25사변'이 그 구성원들 다수에게 아른아른한 오래된 옛 이야기에 불과하다는 사실과 비견된다고 보면 너무 지나친 일일까?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5·18광주'는 '민주화' 이전까지 국가와 국가가 직간접적으로 고용한 이데올로그들에 의해서 “논의 자체를 봉쇄”당하였다. 이 “은폐”의 입장은 그들의 의도가 잘 반영된 “국정교과서 서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필자도 공부하였을 1982년 발간 중학교 '국사' 교과서들에는 “그 어디에도 5·18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래서 “광주의 진실을 말하려는 몸부림”이 다양한 사회운동들, 민주화운동들의 중요한 모습들 중 하나가 되었던 시기가 당시였다(이용기 2007[1999]: 615~621).

그러나 이후 '민주화'가 진전되었고 그 효과들 중 하나가 '5·18광주'에 대한 국가적 명예회복이었다. 적어도 '5·18광주'에 대한 논의는 현재 더 이상 금압 대상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검인정 교과서들과 언론매체들을 비롯한 각종 온·오프라인 지면상에서 '민주화운동'으로 서술·명기되고 있다. 기억 내용이나 그것에 대한 의미 부여의 역할을 떠나 많은 학생들이 '5·18광주'에 대해 이미 알고 있고, 또 알게 된 기회들 중 하나가 중학교 교과과정이었다고 밝힌 점은 것처럼 변화한 상황을 잘 예시해준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눈에 띄는 점은 '5·18광주'를 머릿속에 좀 더 분명히 각인시켜준 계기로서 강풀의 인터넷 만화 <26년>과 영화 <화려한 휴가>, TV 특집 다큐멘터리, 드라마 <모래시계> 등을 꺼내는 친구들이 상당수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이는 '민주화'의 효과로 '5·18광주'가 교과서에 실리고 그래서 중학교생들이 배우기도 하지만, 그때 그들에게 주는 임팩트는 몇몇 예외적인 경우 빼고 크지 않았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대학교 2년생 O군은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였다.

고등학교 때 그걸로 봤죠, CD로 만들어진 동영상. 선생님이 좀 좋은 사람이어서 가지고. (...) '근현대사' 과목이었죠. (...) 진도 때는 것보다는 좀 더 열심히 준비하는 사람이어서 교재를 매일 만들어왔죠, 자기가. (...) 그 ... 다른 분들은 교재에 있는 것 때는 정도로만 하기 때문에. (...) 5·18광주가 시험에 ... 스 ...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엄청 비중이 낮죠. 낮을 수밖에 없죠. 그런 저항 얘기는 ... (2008년 4월 28일).

그러니까 “좀 좋은” 한 명의 선생님 말고는 '입시준비'에 도움이 되지 않는 '5·18광주'를 신경 써서 다뤄주는 이가 없었다는 말이다. 필자는 2008년 5월 7일 ○○○대학교 학생 5명과 집담회를 가졌는데, 그 때 나는 대화에 비추어 추정하면 “진도 때는 것”에서조차 '5·18광주'가 배제된 경우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독재'가 해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등교육 과정이 학생들에게 '5·18광주'를 이해하고 성찰할 기회는 여전히 제약되어 있다.)

학생A: 저는 한, 중학교 때쯤에, 그냥 교과서에서, 그런 데서, 뭐 5·18민주화운동, 그런 게 있었다 ... 근데 학교에서 전혀, 아예 그런 걸 가르쳐 주질 않죠.

필자: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도 안 가르쳐줘요?

학생B: 시험에 안 나온다고 누락시켜요.

학생A: 시험에 안 ... 나온다기보다는, 그 전에 그 방학이 시작되죠. (모두 웃음)

필자: 진도를 아예 못 때는구나?

학생A: 예, 끝까지 못 나가는 거죠. 저는 계속 그랬어요, 중학교 때부터.

(...)

학생B: (...) 현대사는 아예 가르치지 않아요. 고등학교 같으면 아무래도 입시에 대해서, 입시에 뭐가 나오느냐에 대해서 그걸 고민을 하게 되고, 선생님이 그걸 고민을 하고 가르치게 되는데, 아무래도 현대사 같으면 거의 나오지를 않으니깐, 수능에. 그걸 외면하게 되고. 솔직히 저한테 국사를 가르쳐준 선생님들이 생각이 있었는지 없었는가에 대해 이거는 잘 모르겠는데,⁵⁾ 일단 생각이 있었어도 솔직히 애들한테 현대사를 가르칠, 관심을 갖게 가르치기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가뜰이나 학교당국이나 학부모들한테 입시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압박을 받는 형편이었고, 다들 ... 그래서 다 학원처럼 가르쳤고, 고3 때는 1년 내내 문제집만 풀었고, 국사시간에도.

- 5) '5·18기념재단'이 '동서리서치'에 의뢰하여 초중고교 교사 1천 명 중 '5·18광주'를 교육한 경험자들(63%)에게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교육시 애로사항”으로 “학생들의 무관심(42.7%)”이 가장 많았다(장덕중 2008). 나는 그 “무관심”을 외양 그대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본다. 그 “무관심”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의 것이기도 하며, ‘정치적 독재’가 사라진 조건에서 ‘입시위주교육’, ‘학벌중심사회’, ‘경쟁적 상품·화폐관계’ 등이 “무관심”을 조장하는 중요한 요인들로 존립한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 6) 얼마나 되는 수가 그럴지는 모르겠으나 아직도 '5·18광주'의 시민들을 '폭도'였다고 믿는 현직 초중고교 교사들이 있을 것이다. '5·18기념재단'의 동아리프로젝트(2004년)에 응모하여 '5·18광주'와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자 하였던 한 학생(대구 K여고 2년 박민아)은 자신의 학교 선생님들이 노골적으로 방해하여 무척이나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토로하였다. 서류심사 합격 후 설명회 참석차 광주행을 떠나려는 학생에게 담임선생님은 이렇게 말하였다고 한다. “5·18이라면 갈 필요 없어!” 그리고 학생들의 다큐멘터리 제작을 도와주는 청소년 문화센터의 선생님에 대해, “내가 그 지도교사가 간첩인 줄 뭘 줄 어떻게 아냐?”라고 하였다는 것이다(대구 우리세상 청소년 영상단 2004).

호남 출신 학생들의 기억

‘민주화’가 진전되기 이전과는 또 다른 제약들 안에서 ‘5·18광주’에 대한 남다른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친구들은 ‘좋은 선생님’을 만난 경우와 스스로 한국사회 및 현대사에 대한 문제의식을 키워온 경우 외에, 자신들의 고향이 호남이거나 부모님들이 호남 출신인 경우였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여러 차례, 생생하게 당시의 일들을 들어오며 자란 이들 같았다.

(...) 중학교 국사책에서 본 내용이 처음이었고, 그 얘기를 집에 와서 어머니께 여쭙 보았는데, 어머니의 고향이 전라남도 강진이었는데, 그 당시 친구들이 광주로 많이 공부하러 떠나셨다고 말씀하셨고, 광주에서 많은 친구들이 죽었고, 전두환이 무자비하게 민간인을 학살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셨다. 너무나 속상해 하셨고, 어머니도 광주로 가실 뻔 하셨는데 서울로 가서서 희생자가 되진 않으셨다고 하셨다. (...)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5·18광주’는 남의 일이 아니라 지금 내 옆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 생각하게 되었다. 큰 의미가 있으며, 우리가 어떤 일이 잘못 되었을 때 정당하게 싸워야 할 목적성을 심어준다고 생각한다(◇◇대학교 설문 응답자, 2008년 5월 12일).

고향이 광주라서 초등학교 때부터 교육을 받음. 5·18공원에서 글짓기대회에 참가. 당시 조선대 학생이었던 아버지는 직접 참가, 총까지 잡으셨다고 함. 간호대 학생이었던 어머니는 의료봉사. 학생이었던 이모도 시위 참여. 초등학생이었던 외삼촌은 스쿨버스를 향한 군인들의 행패를 보고 생명의 위협을 느낌. (...) 같은 고향사람으로서 엄청난 분노를 느낀다. 광주가 아닌 곳에서의 무관심한 태도를 고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진상규명과 전두환의 자백과 사죄를 간절히 소망한다(○○○대학교 설문 응답자, 2008년 5월 8일).

이런 사례들은 여느 친구들의 것들과 달리 진한 톤의 색채로 드리워진 기억들이었다. 기억의 불균등이 지역을 경계로 하여 분명히 느껴졌다. 필자가 최근 접한 ‘5·18광주’에 대한 젊은 친구들의 기억들은 모두가 ‘전승된’ 것들일 수밖에 없었지만 그 ‘전승들’이 다 같은 질의 ‘전승들’은 아니었다.⁷⁾ 이 자리에서 논하기에는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지만, 나는 20대에 불과한 젊은이들의 ‘5·18광주’의 기억에서조차 나타나는 지역적 불균등이 ‘호남’을 둘러싼 지역주의가 재생산되는 중요한 기반들 중 하나로 작용하지는 않을까 생각해본다.

7) ‘5·18민중항쟁서울기념사업회’가 주최한 2007년도 청소년백일장대회에서 운문부문 대상을 수상한 정민경(경기여고 3년의 작품 <그날>은 “‘그날’의 현장을 몸 떨리게 재현해놓은 놀라운 솜씨”(시인 정희상)라고 극찬을 받았다. 누가 봐도 서울에 거주하는 18세 소녀가 썼다고 믿기 어려울 만큼 탁월한 ‘5·18광주’의 한 순간에 대한 묘사였다. 나는 읽으면서 현장감으로 가득 찬 무슨 영화 스크린을 대하는 기분이었다. 수상자 정민경 군은 당선소감을 통해 이렇게 말하였다.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해냈냐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디. 저는 6살 때까지 광주에 살다 서울로 이사를 했습니다. 5·18은 어려서부터 그 시절을 겪었던 주변 어른들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날’에 대한 저의 관심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정민경 2007).

더 이상 특별하지 않은 ‘대학’

‘5·18광주’를 알게 되고 생각하게 되는 계기들로서 중고교 교과과정 외에 인터넷 만화, 영화, TV 다큐멘터리, 드라마 등을 언급하는 데에서 대체로 그친다는 것은 그들이 일상을 보내는 ‘대학’이라는 특수한 시공간이 ‘5·18광주’와 관련하여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점을 말해준다. 이 점은 필자(혹은 ‘386세대’)의 경우와 극히 대조적이다. 87학번이었던 필자에게 ‘대학’에서 만난 사람들, 이들과 함께 한 경험들은 ‘5·18광주’를 인식하고 이해하는 기점으로 결정적이었기 때문이다. 필자가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누는 친구들의 말들에 따르면, 최근 대학교 (총)학생회, 동아리(연합회) 등이 주관하는 ‘5·18광주’ 관련 독자사업은 거의 없다시피 하다. 해마다 5월이 오면 몇몇 소수 학생들이 무리를 이루어 외부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정도가 전부이다. 그렇다고 이른바 ‘세미나’를 통한 자율적 학습·토론이 폭넓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대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5·18광주’와 대면할 수 있는 길은 특별히 관련 정규강좌(예를 들어 ‘한국 현대정치사’)를 학기 중에 이수하는 방법이다. 물론 이 때에도 강좌를 담당한 이가 ‘5·18광주’를 진도일정에 포함시킨 한에서이다. 굳이 하나의 가능성을 추가하자면, 해당 학생 개인이 그야말로 혼자서 스스로 관련 문헌과 자료 등을 찾아 탐독하며 사고하는 경로가 그것이다.⁸⁾

전술한 ‘흐릿한 기억’을 근거로 ‘5·18광주’가 ‘88만원세대’에게서 ‘잊혀져가고 있다’고 판단해도 좋을까?⁹⁾ 그들은 ‘5·18광주’를 직접 체험한 사람들이 아니며, 체험자들과 각별한 시대적 상황들을 공유한 적도 없다. 짧다고만 할 수는 없는 28년의 세월이 사건발생 이후로 흘러갔다. 더더구나 ‘민주화’의 효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전승된’ 기억은 애초부터(!) ‘흐릿하였다.’ 그러므로 적어도 ‘88만원세대’의 ‘망각’을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혹시나 나 같은 부류의 사람들에게 그러한 진단을 내린다면 모를까. 문제시되어야 한다면 ‘흐릿한 기억’의 세대적 주체 자체라기보다, 그 세대적 주체가 일상생활을 지속해나가는 정황들, 특히 ‘정치적 독재’의 해체에도 불구하고 젊은 세대의 친구들에게 ‘5·18광주’를 멀게 느껴지도록 만드는 사회·정치적 조건들이 함께 문제시되고 논의되어야 한다.¹⁰⁾

교과서적 이해

- 8) 앞의 집담회 참여자들 5명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해준 자신들의 학교상황에 따르면, ‘취직경쟁’ 혹은 ‘물질적 이익’에 직간접적 기여를 하지 않는 동아리들 및 자치조직들은 대부분이 의미 있는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기보다는 커녕 생존 그 자체를 위한 노력들에 급급한 실정이라고 한다.
- 9) 『주간조선』(2005년 5월 23일)은 이례적인 ‘5·18 25주년 기획물’을 게재하면서, 한국사회조사연구소의 조사결과를 근거로 ‘5·18광주’가 “벌써” 청소년들에게 “무관심한” 역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정장일 2005).
- 10) 한편에는 “우리사회가 어느 정도 민주화되면서 5·18을 비롯한 민주화운동을 먼 과거의 일로 치부해버리는 경향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 즉 현 시기의 민주화 수준에 안주하려는 대중적 풍토에 대한 “우려”의 맥락에서 젊은이들의 ‘무관심’을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최영태 2008: 19). 그러나 나는 ‘민주화가 되면서’가 아닌 ‘민주화에도 불구하고’라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젊은이들의 ‘흐릿한 기억’과 더 나아가 ‘무관심’은 자발적 외양으로 나타나는 그렇지 않은 간에, 종전의 ‘민주화’(세력)가 손대지 않은 못하는 우리사회의 문제상황들과 연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다.

비중 면에서 많지는 않았으나 설문 답안들을 읽다가 잇을 만하면 발견하고 또 잇을 만하면 발견하게 된 것이 '화살표(→)'였다. 몇몇 친구들이 '5·18광주'에 대한 자신들의 기억들을 단계별로, 단계와 단계 사이에 화살표를 넣어 표현한 것이다. 처음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였는데, 나중에는 예사롭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젊은 친구들의 기억들을 모두 읽고 듣고 난 연후 앞에서 말하였듯이 '흐릿하다'는 생각과 함께, 많은 경우 '교과서적'이다, '표준화'되어 있다는 판단에 이르자, 그 화살표가 바로 '5·18광주'의 균일한 이해방식을 지시해주는 기호처럼 느껴진 것이다.

고등학교 때 수능선택과목으로 근현대사를 배웠기 때문에 공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전두환 정부의 독재 → 광주시민들의 저항 → 계엄령, 공수부대 투입(△△대학교 설문응답자, 2008년 5월 6일~9일).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 과목에서 비교적 자세히 다룸. 전두환 정권의 폭압적 행태에 반발하여 광주 시민들이 저항 → 정부의 무차별적 진압 및 복한의 소행이라고 사건 왜곡 → 많은 광주시민들이 죽음 (사건종결)(△△대학교 설문응답자, 2008년 5월 6일~9일).

'5·18광주'를 다룬 중고교 검인정 교과서들 전부를 확인해볼 여유가 없어, 고교생용 <한국근현대사> 참고서 하나를 급히 구하여 읽었다(강신태 외 2008: 196). 그리고 나서는 나의 생각이 이렇게 약간 바뀌었다. 표준적이고 도식적이던 교과서적임을 넘어 '참고서적'이다. 그들 가운데 적지 않은 수는 수능 혹은 내신 '시험기계'로서 '5·18광주'를 학습한 것이 아닐까.

'5·18광주'에 대한 표준적 이해를 지시하는 기호가 화살표라면 그러한 일면성을 상징하는 단어는 '민주화운동'이다. "'5·18광주'를 어떤 성격의 사건으로 이해하고 있나요?"라는 나의 질문에, 학생들은 너도나도 '민주화운동'으로 답하였다. '민주화운동'이란 단어를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독재/정의'와 '민주/불의' 사이의 대립 및 충돌을 서술하는 식으로 답하였다.¹¹⁾

기본적으로 민주화운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따로 생각해본 것은 어떤 식으로 보면 그 동안 지역적으로 억눌려왔던 광주시민의 불만을 표출한 사례라고 보고, 이에 전두환의 과잉진압으로 일이 커진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대학교 설문응답자, 2008년 5월 5일).

12.12사태이후 전두환의 권력 잡기가 시작되었고 계엄령이 선포 되었죠. 하지만 잘못된 부분에 대한

11) 앞에서 밝힌 것처럼 학생들 중 상당수가 영화 <화려한 휴가>를 인상적으로 보았으며 그것을 통하여 '5·18광주'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필자가 본 바로는 <화려한 휴가>는 '5·18광주'의 '민주화운동'이란 측면을 크게 부각시킨 영화가 아니다. 거기에서 주인공들을 포함한 광주시민들 대다수는 오히려 '독재-민주 전선' 외부에 있고 그것과 관계없이 행복한 일상을 보내다가 느닷없이 쳐들어와 살육행위를 해대는 공수부대와 맞서게 된, 자기공동체의 생존과 안전을 위해 나서는 인간형으로 그려진다. 그리고 이런 그림에 아주 어색하게 '애국가와 태극기'를 덧칠해놓은 것이 <화려한 휴가>이다. 언제 그들을 다시 만나면 <화려한 휴가>가 인상적이었다는 말의 구체적 뜻을 물어보고 싶다.

광주시민들의 항쟁입니다. 참으로 서러운 일입니다. 총을 든 군대에 맞서 싸운 그저 일반 시민들입니다. 지금 나보다 더 어린 학생들이 당당히 민주화를 외치고 많은 일반시민들이 죽고 지옥과도 같은 날들을 보낸 ... 우리 역사의 가장 아픈 날입니다. (...)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화는 그런 뼈아픈 사건 속에서 비로소 태어난 것입니다(▽▽대학교 설문응답자, 2008년 5월 5일).

군사독재의 횡포에 맞서 민주화를 외친 사건이라고 생각한다(◇◇대학교 설문응답자, 2008년 5월 12일).

민주화를 위한 열망에서 시작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독재자의 시각에서 무참히 짓밟아 버린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 5.18이 가지는 의미는, 한국에서 현재의 민주화가 이루어지게 한 토대라는 데에 있다고 본다(◇◇대학교 설문응답자, 2008년 5월 12일).

독재에 억압되어 있던 사람들의 폭발(△△대학교 설문응답자, 2008년 5월 6일~9일).

민주화를 위한 국민들의 노력. but 많은 희생으로 안타까움(△△대학교 설문응답자, 2008년 5월 6일~9일).

군사정권에 반하여 일어난 시민들의 민주항쟁. 우리나라 역사 속, 정부가 무력으로 시민들을 탄압한 부끄러운 과거. 대한민국 민주화의 도화선이 된 뜻 있는 운동(△△대학교 설문응답자, 2008년 5월 6일~9일).

덧붙여서 지역적 소외의식을 언급하는 예들과 광주시민들이 잠시 동안 일구어낸 자치공동체에 관심을 보이는 예들도 있었지만 아주 소수였다. 그리고 "사상·이념적으로 변화가 필요했고, 이를 실천하고자 했던 혁명과 같은 맥락으로 본다"는 응답자가 한 명 있었다. 반면 불온세력이나 특정 정치인(정치집단)의 음모와 선동에 따른 소요, 폭동 등으로 본다는 친구는 한 명도 없었다.

비록 소수였지만

'민주화' 이후 공식 명칭이 '민주화운동'으로 지정되었고, 이를 반영하여 각종 대중매체들이 그리 불러왔으며, 내실이 있든 없든 초등·중등 교과과정들에서 그렇게 가르쳤으니, 많은 학생들이 '5·18광주'를 '민주화운동'으로 부르는 경향은 당연해보이기까지 하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러한 경향의 잘잘못이라기보다 '일면성'을 지적하고 성찰해보는 것은 어떨까? 그 같은 교과서적 이해가 포괄하지 못하는 '5·18광주'의 측면들은 오늘날의 '88만원세대'가 기억해줄 가치가 없는가 라고 자문하여 보자는 것이다. 사실 하나의 객관적 기억, 하나의 중립적 기억이란 없다. 전두환은 아마 사후 무덤 속에서도 '5·18광주'를 '간첩들의 소행'으로 기억할지 모른다. '간첩들의 소행'이란 기억과 대립하는 다른 기억이 '민주화운동', 단 하나일 수 있을까? 비록 극히 소수이기는 하였지만 몇몇 친구들이 그와 관련된 이야기들

을 해주었다.

그들은 왜 도청에 갔을까? 내가 지금까지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한 것은 아닐까? 내가 살아가고 있는 데 갑자기 공수부대가 와서 부시고 죽이고 ... 이 생각하다가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그때 어땠을까? 본능적으로 총을 든 것이었다고 생각해요. (...)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자신들의 의미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대학교 구술자, 2008년 4월 30일).¹²⁾

(...) 국가가 사실상 적으로 상정하고 있는 것은 국민들을 위협하는 외부의 적이 아닌, 국가권력이나 정부를 위협하는 내부의 '적', 즉 또 다른 국민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국가가 어떻게 자신의 국민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대추리의 문제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한다(○○○대학교 설문응답자, 2008년 5월 6일).¹³⁾

사실 시민군들이 피해자였지만 계엄군들도 역시, 그건 물론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은 명령에 따라서 왔던 사람들이고 ... (○○○대학교 구술자, 2008년 5월 12일).

지금의 나와는? 글썽요 ...

그러나 적지 않은 친구들이 '현재의 자신'과 의미 있는 관련을 갖는 '5·18광주'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었다. 다른 친구들은 들쭉 치고 '운동' 경험이 있거나 '운동'을 하고 있는 친구들조차 그랬다. 설문응답자들에 한정해서 보면 "거리가 멀다", "생각해본 적 없다", "그다지 와 닿지 않는다"고 간명하게 답변 이들의 수가 상당수에 이르렀다. 의미를 찾는 친구들은 "그때 그 사건이 있었으니깐 지금 그나마 민주화가 되지 않았을까", "광주민주항쟁이 있기에 지금의 내가 자유를 누리고 사는 것 아닐까" 라고 말하는 정도로 비슷비슷하였다. 이들 가운데는 희생된 분들에 대한 "감사"와 "송구"의 표현들을 덧붙이는 친구들이 있었다. 아래는 한국사회의 현실에 대해 대단히 비판적인 학생들의 예들이다.

솔직하게 이야기하자면 5·18사건 자체가 저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 속의 사

12) 구술자는 <화려한 휴가>를 모티브로 삼아 말하였는데 그 영화를 필자와 비슷하게 본 듯하다.
13) 바로 다음에 인용된 구술자도 비슷한 취지로 해석될만한 말을 하였다. "대추리 집회 가서 느꼈는데, 5·18광주에 대한 기록 중에 '화려한 휴가' 작전이 끝나고 나서 헬기들이 돌아다니면서 애국가를 틀었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근데 (...) 대추리에도 범국민대회가 열려서 집회가, 대오가 모이니까, 헬기를 띄워서 애국가를 틀더라고요. 하 ... (웃음) 저놈의 정부는 20년이 지나도 변한 게 없을까 ..." 물론 학생들 대다수는 '5·18광주'를 '국가국민'에 대한 근본적 회의를 품게끔 만드는 계기로서 사고하기보다 '진정한 국가국민'(민주주의)과 '허구적 국가국민'(독재)의 대립항 속에서 이해하였다. 그들의 지배적 문제설정은 최근 연일 이어졌던 쇠고기 관련 집회에서도 쉽게 확인되었다. 3인조 대중가수 MC the Max의 일인인 제이윤(25세)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하여 '5·18광주'와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집회'를 같은 계열 속에서 이야기한다. "이 미니홈은 광우병 쇠고기 수입에 반대합니다. (...)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이 사회는 광주시민들의 피로 이루어진 것 (...)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여러분으로부터 나옵니다" (<http://blog.naver.com/glffidakqic/130031431415>).

건일 뿐이죠. 그 당시 나는 태어나지도 않았고, 멀다는 느낌 ... / 비슷한 의식 수준의 친구들이랑 지금의 사회, 정치는 이야기해도 과거와 현재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눈 기억은 없어요. 확실히 역사와 현재의 문제는 동떨어뜨려서 사고하는 경향이 강하죠(○○○대학교 구술자, 2008년 4월 25일).

학생A: 어, 그니까, 시기적으로 되게 오래됐잖아요?

필자: 그죠. 오래됐죠.

학생A: 거의 30년이 다 돼가니까. 제가 그 시기에 살았던 거도 아니고. 그 사건에 직접적으로 제고, 어떤 직접적으로, 제 생각에 영향을 준 것도 아니고. 저한테는 좀 ... 기억은 ... 해야 할 ... 사건 ... 역사이기는 한데, 너무 ... 먼 ... 기억이라고 할까요?

필자: '기억을 해야 할'이라고 하는 당위, 그런 표현을 쓰는 이유는 뭐죠?

학생A: ... 그게 ... 현대사에서 ... 한국사회에서 ...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거죠 ... (○○○대학교 학생들 5명과의 집담회, 2008년 5월 7일)

지랑 광주항쟁, 5·18민주화운동과의 관계는, 그 당시에는 이런 걸 깨닫고 나서 소위 독재, 반독재운동으로 나간다가 아니라 더 급진적으로 가는, 그 당시에 들어온 맑스-레닌주의적인 가치관을 받아들이면서, 하나의 사회를 움직일 수 있다는 엘리트적 정체성에다 플러스, 이케 그걸 바꿀 수 있게 만드는 이론들이, 이케 같이 조합이 된 것 같거든요. 그 당시에, 80년대에, 기억을 자양분으로 해서. 지금에 와서는 그런 조건도 없을뿐더러 그런 이론적인 가능성이 전혀 상실된, 없어요. 그런 이론들이 있기는 한데 나의 삶과는 너무나 괴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어떤 의미로서는 전혀, 전혀, 전혀? 전혀?라기 보다 그냥 그 세대의 사건으로 남겨져 있는, 제가 개입할 수 없는, 그런 지점으로 남겨져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기억을 할 때 나한테, 나는 20대 초반, 이 정도가 가장 정체성을 형성하는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시기에 있었던 일이 무엇이었는데, 나의 생애에서 5·18과 같은 성격을 가진 사건이 무엇인가 (...) 저한테 5·18은 음, 음, 저의 삶에서 5·18 같은 (5·18과 비견되는) 사건을 떠올리는 정도의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대학교 학생들 5명과의 집담회 중 학생C, 2008년 5월 7일).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크게 없죠. 내가 사회운동을 한다면 참고자료는 되겠지만 ... (▽▽대학교 구술자, 2008년 4월 30일).

지금의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스 ... 스 ... 스 ... 과거에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 얼굴 생각나고, 난 이렇게 살고 있구나 ... 특별히 그 자체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은 없습니다(○○○대학교 구술자, 2008년 5월 6일).

생성 없는 기억은 사라진다

많은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정신없이' 써나가다 보니 어느덧 이제 맺음말을 써야 할 지점에 이르렀다.

내가 던진 질문들에 답하여준 친구들에 국한하여 볼 때, '88만원세대'는 소수의 일부를 제외하면 '5·18광주'에 대해 큰 관심이 없고 흐릿하게 혹은 무덤덤하게 기억하며, '민주화'에 기여하였다는 식의 교과서적 평가를 하는 선에 머물러 있다.

'88만원세대'의 그 같은 무관심이나 건조한 태도와 관련하여, 우리는 '도덕론'이란 편한 접근법을 택해서는 안 된다. '5·18광주'에 대한 그들의 기억은 '386세대'가 전승하여준 것이고 '386세대'가 주도한 '민주화'의 효과들 안에서 표준화된(만들어진) 것이다. '88만원세대'가 매일매일 지속해가는 구체적 삶에 대한 연구와 토론이 필요하다.

도미야마치로는 '일상'에서 ('5·18광주'와 같은) '전장'을 '기억'한다는 것에 함축된 두 가지 의미를 말한 적이 있다(富山一郎 2006). 먼저 '전장'의 비밀과 기반이 실은 '일상' 속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상'에서 '전장'의 그것과는 다른 '새로운' 사유와 행위의 좌표를 갈구하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것이다. '88만원세대'와 '5·18광주'의 관계는 '88만원세대'의 구성원들을 구속하고 훈육하는, 그리하여 그 세대의 구성원들 스스로가 욕망하는, 그러나 다른 한편에선 탈주하기를 꿈꾸는, 평범하고 진부한 그들만의 일상을 탐구함으로써 비로소 가시화될 수 있다. 그들이 '5·18광주'를 회피하고 무덤덤한 과거사 정도로만 기억한다면, 그것은 그 만큼 그들의 머릿속에 표준화되어 있는 '5·18광주'가 '88만원세대'에게 새로운 삶의 좌표를 생성해주지 못하는 먼 옛 이야기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인터뷰 자료 14건

설문조사 자료 169건

집담회 자료 1건

강신태 외(2008), 『하이라이트 핵심 한국근현대사』, (주)지학사

날 래(2008), 「<88만원세대>를 읽다 보니 저자들의 세대를 되물게 되더라: 당사자인 20대의 목소리는 없는 세대론에 발끈하며」, 『내가 묻는 방식, 여성주의 저널 N』, 제2호

대구 우리세상 청소년 영상단(2004), 「민아의 5·18」, http://www.518.org/_data/vod_movie/518ofmina.wmv

이선경(2007), 「우리 아빠가 내 앞길을 막고 있나?」,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8381>

이용기(2007[1999]), 「'5·18'에 대한 역사서술의 변천」, 5·18기념재단 편, 『5·18민중항쟁과 정치·역사·사회 3: 5·18민중항쟁의 전개과정』, 심미안

장덕중, 「학교 현장서 5·18교육 확대해야, <5·18재단>」,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Print/YIBW_showArticlePrintView.aspx?contents_id=AKR

20080421169100054

정민경(2007), 「수상소감」, <http://www.518seoul.org>

정장열(2005), 「5·18 25주년: 잊혀져가는 '광주」, 『주간조선』, 통권 제1855호

최영태(2008), 「머리말」, 최영태 외, 『5·18 그리고 역사』, 도서출판 길

富山一郎(2006), 『戦場の記憶』, 増補版, 日本経済評論社

후기 국민국가(post-national)의 내전

(이 글은 미완성입니다. 인용이나 복제를 절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진(이화여대 여성학 강사)

(제2부) 오후 1시 00분 - 3시 30분

‘다른 비판의 눈’으로 본 5·18민주화운동(I)

* 발표 :

1. 여성주의자가 본 5·18: '후기 국민국가(post-national)의 내전'
(정희진 이화여대 여성학 강사)
2. 광주민중항쟁의 탈혁명화: '지역과 전국의 공간정치학의 관점에서'
(원영수 진보평론 편집위원)
3. 동요하는 내셔널리티, 황폐화되는 5.18의 기억
(김진호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연구실장. 목사)
4. '신보수정권' 앞에서, '급진민주주의'자가 본 5·18
(조희연 성공회대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연구소 소장)

* 토론 :

안진(전남대), 정호기(성공회대), 박명림(연세대), 김원(한국학중앙연구원)

* 사회 :

정해규(성공회대)

나는 제주의 한 마을에서 태어나 자라다가 4.3사건 때 경찰에 쫓겨 오사카에 있던 숙부의 도움으로 일본에 건너왔다. 나에게 4.3은 (8.15)해방 후에 시작된 전쟁이었다. 나는 단지 학살을 피해온 것인데, 사람들은 '밀항'했다하고 불법적인 존재가 되었다.

- 제주 출신 재일동포와의 인터뷰에서¹⁾

근대적 민족성은 경계 영역의 죽음을 통해서만 성취된다.

- 호미 바바

1. 5.18은 국민국가의 예외상태였을까?

이 글은 우리사회의 5.18에 대한 평가 중에서 “국민의 군대가 민간인 학살에 동원”된 상황과 이에 대한 비판으로서 “군의 제 역할” 주장을 탈식민 여성주의 관점에서 문제화해보려는 시도이다. 한국 현대사에서 군의 정치적 중립이 끊임없는 논란과 사회적 불안이 된 현실은, 정권안보와 국가안보가 구분되는 제대로 된 근대국가(normal state)가 건설되지 못해서 발생한 문제인가? 아니면, 애초부터 군의 정치 개입은 후기 식민국가의 ‘존재 조건’이었을까?

근대 세계는 국내의 성별, 계급 등의 차이를 둘러싼 투쟁을 국민 범주로 통합, 환원시켜 국가 간 경쟁에 의해 해소하려는 국민국가 간 국제 질서를 의미한다. 그리고 군대는 그러한 개별 국가 사이의 경계(警戒)이자 경계(境界)이다. 근대 체제에서 정상국가는 국가가 주권을 갖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

1) 이지치 노리코, “영위되는 일상/서로 엮는 힘”, 『역사 속의 '재일'』 (伊地知紀子, 「營まれる日常・繋りあう力」, 『歴史のなかの「在日」』、藤原書店, 2005)

키는 군대를 보유한 상태를 의미하며, 이러한 국민국가는 19세기 이후 국제사회의 기본 단위가 되었다. 국내/국제적 고정된 경계는 절대화된 주권 개념으로 인해 가능하다. 1648년 유럽에서 웨스트팔리아 조약의 체결과 함께 태동한 주권은 한 국가에게 국제사회를 구성하는 자격을 부여했다. 웨스트팔리아 체제 하의 국가 주권은 자율성, 인구, 영토 그리고 정통성(secular authority) 등의 개념으로 구성된다. 즉, 근대적 국제 체제란 일정한 공간적 범위 내에서 절대적 지배권을 행사하는 영토국가를 의미하고, 이후 주권 개념의 진화는 국민국가의 발달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주지하다시피,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에서 자율적인 주권 국가('국가 이성')는 자유주의 사회의 개인 들처럼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는 합리적 행위자이며 자급적, 독립적, 자기실현적 이고, 또 그래야만 한다고 본다. 그러나 일국의 독립성은, 자기이익을 도모하는 다른 국가들로부터 끊임없는 위협에 놓이게 되므로, 개체화된 국가는 외부 침입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권리 담론과 같은 규칙을 고안하고 방어를 위해 힘을 기르게 된다. 그러므로 힘의 논리를 통한 지배와 종속은 국제 관계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전쟁은 국가의 대표적인 자기실현적 행위로서 현실은 "전쟁 아니면 현상 유지(status quo)", 둘 중 하나이게 된다. 이러한 자율적 주권 국가 개념에서 평화는 전쟁의 결과로 얻어지고 힘으로 지켜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개인과 국가의 자유는 그 자체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투쟁을 통해 달성되어야 한다. 국가의 힘이 테스트되는 것은 전쟁을 통해서이고, 그 테스트를 통해서만 이 개인들이 이기심을 극복하고 전체를 위해 일할 준비와 보다 포괄적인 선(善)을 위해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보일 수 있다. 이처럼 전쟁은 주권을 승인 받는 주요 수단으로서, 국가의 정치적 성년(political manhood)의 결정적 시험대로 간주된다.²⁾

전통적인 국제정치학의 가정은 국가를 실체(a thing), 단일한 자율적 행위자로 본다. 국가는 영토, 국민, 주권으로 이루어진 가시적인 존재이고, 자율적인 정상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능력은 영토, 국민, 주권을 지킬 수 있는 군사력으로 보장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상적이고 튼튼한' 자율적 행위자로서 국가는 건장한 이성애자 남성으로 재현된다.³⁾ 위와 같은 가정에서 그간 국가안보는 가장 남성적인 영역이자 가장 전문가주의가 강한 분야로, '일반인'이나 '민간인'은 안보에 대해 무지할 뿐 아니라 발언권이 없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 왔다. 근대 체제에서 국가안보 논리는 국제사회가 각각 자율성을 갖는 개별적 실체인 국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율적인 주권 국가들은 통치 규범이 없는 무정부 상태

2) 대부분의 근대 민족국가들은 여성적 의미(feminine terms)로 해석된다. 주권(The Sovereign)은 남성화된 얼굴을 가질지 모르나 국가 그 자체는 어머니, 연인, 애인으로 여성화된다. 국제정치학이 만들어내는 국제정치 영역성은 젠더가 만들어지는 방식과 유사한 이원적 대립에 근거한다. 전쟁/평화, 국외/국내, 질서/혼란, 현실/이상과 같은 이분법에서 어느 한편은 젠더화 된다. 군사 영역의 분리 이데올로기와 그 성별화의 경우처럼, 국내정치/국제관계 분할 역시 젠더화 된다. 현실주의 국제정치학 이론에서 국내는 주권에 의해 통치되는 질서의 영역이고, 국제영역은 위협하고 불안한 무정부 상태라고 간주된다.

3) 현재 한국사회에서 병역 이행에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으며 본인조차 인지하기 어려운 무정자증(無精子症)이 면제 사유라는 사실(강승구, 1997; 임진형, 2004)은, 정상적인 남성성 구성에서 생식력과 이성애 제도의 의미를 보여준다. 또한, 국제정치학 용어는 유달리 성별적, 이성애적이다. 이에 대한 연구는 Cohn(1987, 1990), 해러웨이(2005) 등 참조. '황혼이혼(한미동맹의 변화)', '약혼과 미혼의 차이(입대 예정자와 군 미필자의 차이)', '만형 정책(헛별 정책)', '한미동맹의 아랫도리(기지촌 성매매)', '소년(폭발에 성공한 폭탄 이름)', '소녀(불발탄이나 오발탄)', '닭쟁이 게임(chicken game)' 등. 국제정치학에는 '게임 이론'이 많은데, 이 역시 남성성을 반영한다(테보라 테넨, 2001)

에 노출되어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안보론에서 정의(justice)는 국가 단위에서 논해지는 것이고, 국가는 국제사회를 구성하는 유일한 정치적 단위이며 행위자다. 국가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적자생존의 정글에서 원시적 개인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자율성, 무정부성, 주권 개념은 근대 국제 질서의 근본 특성이다. 이러한 가정에서, 전쟁은 각각 평등한 자기 결정권을 가진 국가들 사이에 피할 수 없는 충돌로서 정치의 연장(延長)으로 인식된다. 전통적인 서구 국제정치학에 따르면, 국력은 측정, 계량화할 수 있으며 의인화된 국가는 위협의 실체를 판단할 수 있다. 즉, 국가안보, 국방, 군사화의 기본 논리는 위협이라는 외부의 객체가 있고, 이를 찾아내는 주체인 국가가 있다는 데서 시작한다. 자율성이 행위자에게 있다는 인식에서, 행위자는 타인과 분리된 그러나 내부(국내)는 단일하게 통합된 원자적 존재이다. 이때 국가는 사회 제도나 행위(performance)의 과정이 아니라 영토, 국민, 주권으로 이루어진 가시적인 존재로 여겨지고, 자율적인 정상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능력은 영토, 국민, 주권을 지킬 수 있는 군사력으로 보장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국가 조직은 기원상 전쟁을 위한 군사조직"이고, "인간(남성)은 국가를 통해서만 자신의 도덕적 사명을 완수하며, 국가는 서로 대립(전쟁)할 때 자신의 실체를 구현한다"⁴⁾ 아래 글은 자율적 남성 개인이 자신을 국가와 동일시 할 때 어떠한 논리가 탄생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 정의란 이익이 제대로 분배된 상태를 말한다. 한 나라 안에서 계급투쟁이 차별을 조정해 주듯, 국가 간 전쟁은 현재의 불공평한 차별을 바로 잡을 것이다. 영국은 전 세계에 부를 소유한 백만장자고, 러시아는 지구 북부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대지주이다. 이에 비해 홀어린 섬 쪼가리들의 나라인 일본은 프롤레타리아이기 때문에, 일본은 대독점 세력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할 권리를 갖는다. 서구 사회주의자들은 자국 내 프롤레타리아의 계급투쟁은 인정하면서, 무산 국가가 벌이는 전쟁은 군국주의와 공격성이라고 비난하는 모순에 빠져 있다. 노동자 계급이 단결하여 피 흘려 부정의한 권력을 전복할 수 있다면, 일본이 육해군을 완비하여 불공평한 국경을 바로잡는 것도 무조건 용인해야 한다. 합리적 사회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일본은 호주와 동부 시베리아의 소유를 주장한다(Ikki, 1924, Storry, 1973:38에서 재인용).

서구에서 국민국가 성립 시기, 군사화와 민주화는 동의어였다. 봉건적 통치 형태의 폐지, 의회의 탄생, 권력 분립, 선거로 구성되는 정부 등 근대 민주주의 성취는 19세기에 군 복무가 모든 시민에게 확대되면서 확립된 제도들이다. 남성에게만 한정된 보통 선거권과 '국민(남성)개병(皆兵)제도'는 동시에 태어난 쌍생아였고, 이후 국민국가에서 병역은 성별화된 시민권 개념을 구성하는 핵심적 의제였다. 근대 국가는 처음부터 국가를 위해 죽을 의무와 권리가 있는 남성만을 시민으로 간주했으며, 여성이 국가를 위해 죽을 의무는 전장이라는 공적 영역에서가 아니라 사적 영역에서 충족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이론가들에 의해 주목받지 않아왔다(Pateman, 1992, Young, 2003).

국가는 합법적 폭력을 통해 그리고 그것을 정의하는 것을 통해서 국민을 보호한다고 주장하지만, 그 힘은 남성에게만 사용이 허락되며 남성은 보호자, 여성은 보호받는 자가 된다. 하지만, 보호자는 위협을 창조해 놓고서 그 위협을 통해 보호자로서 자신의 지위를 스스로 격상시키며, 이것이 국가가 국민에 대해서, 남성 가정이 가족 구성원에 대해 권력을 갖는 방식이다(Peterson, 1992). 안보에 대한 군사화

4) Otto Hintze(1975), 함택영(1998:90), 박상섭(1996:173)에서 재인용.

된 관점은 남성적 특성을 중요시 여기며 남성은 안보 제공자라는 역할 때문에 '1등 시민'으로 간주되어 왔다. 이처럼 군대의 존재는 시민권의 위계화와 필연적으로 연결된다. 폭력이 1) 갈등 해결의 효과적인 수단이자 자원으로 인식되고, 2) '외부 위협' 대처, 구성원 통제, 질서 유지 등 사회를 조직하는데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되며, 3) 폭력 사용이 성별, 연령, 계급 등에 따라 특정한 집단에게만 정당성이 부여되는 사회에서는 구성원들은 두 가지 계급으로 나뉘어 지게 된다. '보호자'와 '보호받는 자'가 그것인데, 이 때 보호자는 국가, 가족과 같은 사회단위에서든 연인 사이에서든,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피보호자를 지키기 위해 폭력을 사용할 책임-의무이자 권리를 갖게 되고, 이러한 과정과 원리는 '지키는 자'가 공동체의 대표성을 획득하는 근거가 된다. 이는 집단의 방어를 책임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시민권의 범주와 위계, 한 사회에서 바람직한 인간의 기준(정상성)이 조직되는 주된 방식이다. 왜냐하면, 모든 사회구성원이 동등하게 방어자의 자격을 갖게 되는 것도 아니며, 동시에 모든 시민이 방어자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거의 모든 사회는 지키는 자로서 적합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범주 설정에 대한 사회 문화적 규범이 존재한다.

물론, 이러한 규범은 시대와 지역에 따라 그리고 한 사회 내부의 권력 관계의 변동에 따라 그 경계가 고정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대개 '적', '외부'의 위협이 강조되는 사회일수록, '지키는 자'의 사회적 지위는 높아진다(조혜정, 1988:238). 징병제 시대의 미국 사회에서 다음과 같은 사람들은 병역의 의무에서 제외되었다. 나이 어린 소년(나중에 보호자가 될), 나이 든 사람(보호자였던 사람), 대통령이나 각료 등 특권층(너무 중요한 사람), 남성 동성애자(경멸 받아 마땅한 사람), 공산주의자(믿을 수 없는 사람)과 여성이다. 여성은 경멸 받는 사람이면서 믿을 수 없는 사람이고 동시에 '소중한' 사람이어서 병역에서 배제된다(Stiehm, 1982). 한국사회에서도 군 가산제 논쟁에서처럼, 여성은 '2등 시민'이기 때문에 병역의 의무에서 배제된 것인지, 아니면 '보호받아야 할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면제된 것인지 논란이 분분하다. 그러나, 배제나 면제나 논란은, 권리와 의무를 반대 개념으로 사고하는 남성의 시각이다. 시민인 남성의 입장에서 권리와 의무는 대립되지만("여성들이 의무는 다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한다"), 시민이 아닌 장애인이나 여성의 입장에서 권리와 의무는 "시민들의 이야기"일 뿐이다. 다시 말해, '지키는 일'이 시민권 획득의 주요 구성인 사회 규범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다. 시민권 획득의 기회가 남성에게만 배타적으로 주어진다든 점에서 병역은 남성의 권리이지만 동시에 국가로부터 강제되는 개인이 '선택하지 않은 기회'라는 점에서 피해이기도 하다.

그러나, 문제는 남성이 병역의 피해자나 아니냐가 아니라, 이러한 분류 자체가, 법을 만들고 운용하는 남성에게 의해 정해진다는 점이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다음의 항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병역이 면제된다. 여성, 장애인, '혼혈' 남성, 저학력 남성, 무정자증(無精子症) 남성 등 남성 중심 이성애 사회의 '정상적'인 시민의 개념에서 제외된 사람들이나 스포츠 경기에서 다른 나라와 싸워 크게 승리한 남성처럼 다른 방식으로 '전쟁'에 참가한 남성('태극 전사')이다. 이처럼 남성들은 그들 내부 차이에 의해 다양한 방식으로 병역에 참여하거나 배제되는데 반해, 여성은 하나의 동일한 집단으로 재현되면서 모든 여성은 동일한 이유로 보호자, 방어자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간주되기 때문에 피보호자가 된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여성이 남성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다. 보호자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분류하는 권력을 갖는다.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여성과 그

렇지 않은 여성은 남성 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른 성별 규범(gender norm)에 의해 정해지는데, 이는 대개 가족 제도를 매개로 한 섹슈얼리티와 관련이 있다.⁵⁾

2. 후기 국민국가 체제에서 '국민'과 '주권' 범주의 유동성

위에서 논한 시민권과 군사화에 관한 논의는, 국가 주권이 남성 자아를 투사(transpose)한 것이라는 서구의 논의와 주권의 남성성에 대한 페미니스트의 비판(Stiehm, 1983 ; Reardon, 1985, Elshtain, 1987, 1992 ; 푸코, 1988 ; 티커너, 1992 ; Peterson, 1992 ; Weber, 1998 ; Hooper, 2001 ; Sylvester, 2002 ; Young, 2003 ; Blanchard, 2003)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한편 이러한 방식의 논의는, 이성애 핵가족 제도에서 성별화된 양육과 같은 근대 초기 서구 국민국가 내부의 성별 체제에서 형성된 논의이다.⁶⁾ 다시 말해, 서구 근대성을 반영, 비판하는 기존 여성주의 이론은 주권의 개념과 실체가 모두 외부로부터 부여된 후기식민사회의 주권과 젠더의 관계를 분석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다. 한국현대사에서 나라를 지킨 사람은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었고, 주권적 자아의 성별성은 국내에서 남성과 여성의 관계가 아니라 식민 콤플렉스 극복을 위한 외세와의 관계 설정에 따라 달랐다. 약소국으로서 미국에 대한 피해를 강조할 때 한국의 민족 담론은 자신을 여성화했지만, 강대국 미국과 동일시를 통해 일제로부터 피지배 기억을 청산하고자 할 때는 일본을 여성화했다(Choi, 1997).

한국사회에서 독립된 주권국가에 대한 열망은 국내의 성별 체제로 인한 남성성의 결과라기보다는, 식민과 후기식민화 과정에서 제국주의의 남성성에 대한 저항, 충돌, 모방, 동일시 등의 반작용(reaction)을 통해 구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한국의 주권을 서구에서 형성된 자율성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은 한국사회의 역사성을 삭제하는 것이며, 이는 남성과 여성이 사회적, 역사적 제 관계의 현장에 진입하기 전에 이미 성적, 정치적 주체로 구성되었다고 가정하는 것이다(Mohanty, 1988). 서구 여성학의 주권의 남성성 논의를 한국사회에 적용할 경우, 이때 젠더는 한국의 후기식민 상황을 구성하는 글로벌 제국의 권력과 이에 대한 대응으로서 남성성 형성 맥락을 은폐시키는 기능을 하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자주국방 논쟁에서 주권과 젠더와 관련한 여성주의적 개입은 탈식민주의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5) 아시아의 미군 주둔 지역인 일본의 오키나와, 필리핀의 울롱가포, 한국의 기지촌 등지에서 기지촌 성산업 종사 여성에 대한 미군의 강간과 살해 사건에 대한 국가와 남성 시민사회의 방관과 선택적 개입 역시 국가가 보호하는 자국 여성의 범주를 알려주는 표식이다. 피해여성 인권의 관점이 아니라 남성 중심 민족주의("민족 자존심 훼손")의 이해에서 미군 처벌을 요구하는 경우이다. 가해 남성이 자국 국민일 경우에는 사회 문제화 되기 어렵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정유진(2000), 정희진(2003), 김은실(2002), 하세가와 히로코(2002), 도미야마 이치로(1999), 김연자(2005), 캐서린 문(2002), 김은실·정유진·캐서린 문(2002) 참조. 남성 중심 사회에서 페미니스트, 독신 여성, 사별한 여성, 비혼 여성, 레즈비언 등도 '보호받지 못하는데', 이들은 남성의 보호를 거부하거나 개별 남성의 보호 아래 있지 않은 즉, 남성 연대에 매개되지 않는 여성들이기 때문이다.

6) 물론, 서구 국민국가가 외부의 식민지 건설과 동시적으로 형성되었고 그 과정에서 그들의 성별성은 피식민 국가와의 관계에서 형성된 것이다(난디, 1993).

한국의 주권은 외부로부터 주어진 것으로, 주권을 스스로 구성했다거나 빼앗겼다가 되찾은 경우가 아니다. 때문에 한국과 같은 식민 그리고 후기식민사회에서 국가 자율성은 일제 시기 “친일을 통한 근대성 실현”이나 현재 “미국을 이용한 자주국방” 언설처럼 (서구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는) 모순적이며, 서구에서 형성된 근대 국제 질서에서의 전통적 자율성 개념으로는 분석될 수 없다. ‘비서구’ 사회의 시각에서 보면, 자율성에 기반한 근대적 주권 개념은 짧은 시기 소수 제국주의 국가에서만 가능했다. 순수한 의미의 국민 방어 군대, 즉, 외부의 적을 위한 군대와 내부 치안을 위한 경찰의 분리는 근대 국민 국가의 이상(理想)으로 특정시기 몇몇 강대국 외엔 실현된 적이 없었다. 특히 후기식민국가에서 군대와 경찰의 구분은 무의미한 것으로, 국방력은 국가 간 전쟁(국민을 지키는 군대)보다 내전에 더욱 필요할 것이었다(사카이 나오키, 2003). 대표적인 경우가 한국현대사에서 ‘공권력’의 의미일 것이다.)

냉전 이후 시장질서가 지배하는 지구화는 국민국가(지역)와 세계의 구분이 사라진 것이라기보다는 새로운 국면의 국가 체제, 포스트 내셔널(post-national)을 의미한다. 자본 축적을 통한 교통과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달은 공간적 시간적 거리를 단축시켰고, 세계 거대도시들 사이의 관계는 각국의 국내 간 관계보다 이동 시간, 의식, 문화 등의 면에서 더욱 가까워지고 있는 ‘지리의 종말’을 맞고 있다. 국민 국가적, 민족적, 문화적 귀속을 기초로 한 기존의 경계는 도전받고 있다(김은실, 2004 ; Mary John, 2006 ; Morris Suzuki, 2000 ; Hall, 2000).

하지만 국가는 사라졌거나 거세된 것이라기보다는 시장-안보 국가(market-security state)로 재편되고 있다. 포스트 내셔널 시대의 세계는 자본, 배타적 정체성, 군사주의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작동한다. 특히 9.11 이후 글로벌 군사화(global militarization)는 지구화와 국가주의의 동시 강화를 요구, 실천하고 있다(J. Pettman, 2004:49-63 ; Bunch, 2005).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군사화는 신자유주의를 추구하는 국가주의 단위(unit)를 통해 작동한다. 탈냉전은 대립의 종식이 아니라 위협의 다변화를 가져다주었고, 기존의 전면전 대신 종교, 종족, 지역 갈등으로 인한 대량학살의 성격(genocide)의 국지전이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냉전 이후, 그간 미소 양대 진영에 의해 억제되었던, (분리 독립을 요구하는) 민족 분쟁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자본의 필요에 의해서든, 후기식민사회의 국가건설 차원이든, 종교 등의 배타적인 정체성을 강화하는 차원이든 각 지역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국경과 애국의 상징적 힘을 재확인하는 국민주의 이데올로기가 지구화와 함께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지구화로 인한 부의 집중은 1990년대 초 이라크전을 시작으로 첨단 현대전을 등장시켰다. 현대전에서 필요한 것은 경제력과 기술력이지만 전국민적 동원이나 ‘참여’가 아니게 되면서, 국민국가 체제의 군사(軍事)-국가-성별의 관계는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현대전은 전통적인 성별 구분보다 자본과 학력, 기술 등 개인이 가진 자원에 따라 여성-여성성, 남성-남성성의 연결을 예전 보다 빠른 속도로 분절시키고 있다.⁸⁾ 기술전은 전쟁을 수행하는 국가의 남성과 여성의 사상(死傷) 가능성은 급격히 감소시키는 반

7) 국가를 부정하는 바쿠닌 같은 아나키스트들도 군대와 무장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E. H. 카, 1989)은 군대가 국가 간 분쟁에서 필요한 것이라기보다는 인간 사회의 갈등에 대한 남성적인 대응 방식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8) 기술전에서 ‘섬세함’은 여성적 특징이 아니라 남성적 특징이다. 여성의 전쟁 참전 비율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이라크전의 이부 그레이브 사건처럼 강대국 소속의 여성 군인이, 전쟁 성폭력의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 이 사건은 군대 제도의 피보호자, 수혜자, 보조자, 피해자로서의 기존 여성 이미지를 전복시켰고,

면, 전쟁 피해 지역의 민간인(주로 여성과 어린이)의 피해는 크게 증가시킨다. 이제 전쟁은 공격자의 관점에서 보면, 별로 ‘위험하지 않다’. 1차 대전 당시 사상자의 80%가 군인이었고, 2차 세계 대전에서는 50%였지만, 베트남전에서는 사상자의 80% 민간인이었고 1990년 이후 분쟁 지역에서 피해자의 90%가 민간인이었다(Pettman, 1996:89). 전쟁 가해자와 피해자의 범주는, 성별보다는 계급과 국적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글로벌 자본주의는 점차 군대를 국가 주도의 남성 징병제에서 글로벌 기업의 경제 활동으로 전환시키고 있는데, 다국적 전쟁 대행 산업(privatized military industry)의 등장이 그것이다.⁹⁾ 국가가 군대를 시장에 아웃 소싱하고 있는 것이다.¹⁰⁾ 현재 한국사회에서도 국가안보 개념 확대의 핵심은 “국가경쟁력으로서 국가안보”, 즉, 경제력이다. 국가안전기획부에서 개명한 국가정보원 업무의 대부분은 해외 진출 한국 기업의 경제 활동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다. 이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북한에 대한 우월 의식은 ‘안보 담론’에서 ‘선진·후진성 담론’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사주의를 중심으로 한 구획되었던 국민과 주권의 개념과 범주, 경계 지점은 매우 유동적이 되어가고 있다. 예를 들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검역주권과 군사주권은 기존의 동일한 의미의 주권 개념으로는 설명될 수 없다. 국가안보 개념의 확장 혹은 ‘진정한 안보’, ‘인간 안보’와 같은 안보 개념의 재정의는 이러한 국민국가와 안보의 딜레마를 잘 보여준다. 군사(軍事)를 넘어서는 안보 개념 확대는 각기 다른 차원의 정치적 의미가 있다. ‘환경안보’처럼 국민국가의 틀을 넘어서야만 해결이 가능한 경우 개념 확대가 진보적인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식량안보, 경제안보, 에너지 안보 혹은 최근에는 에이즈, 성매매, 마약, 저출산, 종교 갈등, 경제 양극화(를 문제화하는 것)도 국가안보 위협으로 보는 것(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2)은 문제적이다. 모든 사회문제를 안보화(安保化)하여 “~부터 지킨다”는 것은, 기존 안보 개념의 이론적 헤게모니를 강화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여성도 그녀가 제국의 군인이라면 제3세계 남성에게 성폭력을 가할 수 있다는 인종에 의한 젠더 역전의 상징처럼 보였다. 한편, 미국의 경우 전체 미국 군인 중 15%가 여성이지만, 육체적 강인함보다 기술력이 요구되는 공군의 여성 비율은 20%에 이른다. 2006년 현재 이라크에 배치된 미군의 11%가 여성이며, 간부 중에서는 15%가 여성이다. 이는 미국에서 징병제가 폐지되면서 여성과 흑인의 군 복무율이 높아진 것도 그 원인이지만, 베트남전 당시 참전 여성 7,494명 중에 6,250명이 간호병이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전쟁 스타일 변화로 인한 실제 전투 참전 비율도 높아진 것이다(Solaro, 2006). 1993년 걸프전 당시 미국인들의 64%가 여성의 전투(battle) 참여를 찬성하여 걸프전은 미국 역사상 가장 ‘여성주의적인 전쟁(feminist war)’으로 불린다(Ehrenreich, 1995:286).

9) 이제 전쟁은 점차로 ‘국민’이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지원한 ‘직원’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사실, 국가가 군대를 통제하기 시작한 것은 인류 역사상 100년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현재의 민간 군사 회사는 중세 시대의 용병 -> 국민국가의 군대 -> 자본화된 용병으로 다시 변화한 것이다. 한국에도 2005년 3월 세계 최대 규모의 민간 군사 회사(private military company)의 지사가 설립됐다. 켈로그 브라운 앤드 루트(Kellogg Brown and Root)社로, 회사는 이라크에서 희생된 故 김선일씨가 근무하던 회사의 원청사이며, 덕 체니 전 미국 부통령이 최고 경영자로 일한 세계 최대의 전쟁 대행 주식회사이다.

10) 전쟁을 판매하는 민간 군사 자본의 위험성 때문에, “국가의 전쟁 독점은 지켜야 할 최후 보루”라고 호소하는 평화운동가가 있을 정도이다(유강은, 2005:443). 이제 국방정책은 일국 내 젠더 문제에서, 국민국가의 단위를 벗어나 국적을 초월한 남성들 간의 계급 문제(transnational business masculinity)로 이동하고 있다(Connell, 2000:52). 자본과 학력, 기술 등 개인이 가진 자원에 따라 남성성의 범주가 유연해지면서, 기술전은 전쟁을 수행, 공격하는데 필요한 남성성의 범주를 변화시키면서 여성의 참전 비율을 크게 높이고 있다. 인력이 아니라 자본과 기술력에 의한 군사화로, 진행될수록, 군사화는 비가시화 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사회는 탈군사화 된다.

(Lipschutz, 1995:46-86).

1990년대 이후 한국사회가 글로벌 경제에 깊숙이 편입되면서, 기존의 반공 훈육적 동원 국가의 성격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국민'과 '비국민'의 대립이 아니라, 과연 고정적 의미의 국민이 존재하는가? 자체가 의문시 되는 상황에 있다. 예를 들어, 1945년 미군 주둔부터 '기지촌 여성'에 대한 구타, 강간, 살해는 빈번했지만, 1992년 '미군범죄사의 전태일'로 불리는 '윤금이 사건' 전까지는 단 한 번도 사회 문제가 된 적이 없었다. 당시 한국 정부와 안보 세력, 아니, 일반 국민들도 기지촌 성산업 종사자 여성의 죽음이 한미동맹에 갈등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¹¹⁾ 이후에도 지속된¹²⁾ 한국 여성에 대한 미군의 폭력이 한미 간 정치적 갈등과 사회운동의 의제가 된 것은, 80년 광주 민주화 운동을 계기로 대미관의 변화와 함께 '국가안보를 위한다'는 미군의 존재를 둘러싼 국민적 합의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을 의미한다. '윤금이씨 사건'은, 1) 이 사건을 민족 모순으로 환원하지 말 것을 주장하면서 여성 인권 침해라고 보는 여성주의 2)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여성, '더구나' '성 판매 여성'의 희생은 불가피하다는 보수 세력 3) 자국여성이 외국 남성에게 의해 더럽혀졌다는 수치심에 시달린 민주화, 자주화 세력 간의 갈등을 가져왔다.¹³⁾ 안보 가치가 성별, 이데올로기에 따라 분열하기 시작한 것이다.¹⁴⁾ 이 사건으로 한국 여성운동은 그동안 성별 분업을 기반으로 작동해왔던 국민동원 체제 아래서는 인식하지 못했던, 국민과 여성이 갈등적 범주라는 사실을 점차 지각하게 되었다.¹⁵⁾

1990년대 이후 여성을 대상으로 한 미군 범죄의 지속적인 발생은, 미군과 이들의 주둔을 애원해온 한국정부가 모든 '국민'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각인시켰다. 2002년 '효순이, 미선이 사건'은 '어린 소녀'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는 국민적 차원의 자책과 분노를 가져왔다. 여성과 장애인을 비롯한 '비국민'의 이해와 국가안보의 가치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90년대 후반 군 가산제 논란을 통해 폭발했다. 가산제 논란은 찬반 입장을 떠나, 국가안보가 개인의 노동권(생존권)보다 중요한가? 혹은 그렇게 않은가? 를 모든 사회구성원들에게 취업이라는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둘러싸고 정면으로 문제제

11) 식민 지배와 전쟁을 겪은 지난 세기동안 한국사회에서 국가안보는 모든 사회적 가치를 초월한 생존 차원의 문제로 인식되어 왔다. 한국은 2차 세계 대전 이후 강대국 간의 세력 투쟁의 결과로 독립하게 되었고, 이후 냉전 체제하의 국제 질서에서 자본주의 진영을 이끄는 초강대국으로 등장한 미국의 동아시아 전초 기지가 되었다. 이러한 후기식민 상황과 분단 체제하의 한국사회에서 자주국방은 한미동맹을 통해 서만 가능했다. ('북한으로부터의 자주'와 '국방'의 가치 앞에서 성별이나 계급 같은 국민 내부 차이는 정치적 의미를 가질 수 없었다. 주한 미군을 위하는 일은 곧 '우리나라'를 지키는 일이었고, 정부는 미군을 위해 기지촌 성산업을 육성, 관리했고 여성들을 '애국가', '민간의교관'이라고 불렀다(캐서린 문, 2002).

12) 이 사건 이후에도 공식적으로 보도된 기지촌 여성 살해 사건은 20여건에 이른다.

13) 이 문제를 다룬 논의들은 다음과 같다. 김은실, 2002 ; 이향진, 2002 ; 정유진, 2000 ; 정혜승, 2002 ; 정희진, 1999 ; 최정무, 2002 ; 김현숙, 2002 ; 김연자, 2005.

14) 당시 여성운동은 외국 군대 주둔 하의 후기 식민사회에서 젠더의 작동 구조를 문제시하기보다는, 민족과 여성을 배타적 범주로 보는 이분법적 인식에서 자신을 '국민/민족이 아닌 보편적 여성'으로 정체화하거나 "분단 현실에서 민족 분열은 안 된다"는 남성 민족주의와 입장을 같이 했다.

15) 그렇지만 국민과 여성은 여전히 단일한 범주, 배타적 범주로 남았고 다른 방식의 질문은 제기되지 못했다. 한국사회는 그리고 여성운동은 여전히 '국민', '민족', '여성'의 단일한 정체성에 대해 도전하지 못하고 있다.

기했다.¹⁶⁾ 남성들의 군 가산제 요구는, 1990년대 이후 한국사회가 글로벌 자본주의로 본격 편입되면서 능력 위주의 신자유주의 취업 시장에서는 예전처럼 병역-국민정체성-시민권의 강고한 연결(김현영, 2002)이 점차 작동하고 있지 않음에 대한 불안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했다(S. Moon, 2005 ; 강인화, 2007).

이 같은 사회 경제적 변화와 국방정책의 효율성, 병역의 형평성 때문에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모병제, 징모 혼합제 혹은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공역(公役)과 군역(軍役)에 대한 논란(문장렬, 2007 ; 이상목, 2005)과 국방부의 고민은, 국민국가의 기반이었던 국민개병(皆兵)의 의미와 신자유주의 시대 후기국민국가(post-national) 체제의 갈등을 보여준다. 더구나, 종교인이나 동성애자, 평화주의자 등 종교적, 정치적 차원의 병역 거부 외에도, "그냥 귀찮아서", "집단생활이 싫어서", "어차피 취직을 안 할 것이기 때문에" 등의 이유로 징집에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응하지 않는 젊은 남성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현장 장교들이 호소하는, 북한보다 '주적'이라고 말할 정도의 군대 내 빈발하는 총기 난사 사고와 사병에 대한 이데올로기(政訓) 교육의 어려움은, 젊은 세대 남성들에게 안보 이데올로기의 의미는 이전 세대와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탈냉전 이후 전 지구적 자본주의로 인해 결혼, 노동시장 등을 통한 이주여성과 탈북한 이주민의 급격한 증가(그리고 이들의 남한에서의 출산)하자, 이들의 인권을 위한 사회운동이 활성화되고 있다. '여성', '장애인', '동성애자' 등 기존의 '비국민'과는 다른 차원의 이질적인 성원들이 한국사회에 공존하며 성원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국가 구성원('국민', '시민', '민중'...)의 경계가 고정되어 있지 않은 현실을 살고 있다. 이처럼 한국사회에서 국민 범주의 이질성의 가시화와 심화, 국가에 의한 신체 동원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남성의 등장은 국가안보 이데올로기에 대한 일관된 합의가 깨지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병역 의무를 중심으로 배제된 전통적 의미의 비국민이나 소수자 외에, 더 이상 동원되지 않는 국민들이 비국민의 범주를 넓혀가고 있다. 이들은 국가에 의해 동원되기 보다는 신자유주의적 질서에 의해 동원된다. 전쟁이 병력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 기술, 지식 정보의 결합 장이 되면 최근 한국사회처럼 군인의 사회적 지위는 낮아진다.¹⁷⁾

3. 탈식민화와 탈군사회

한국을 비롯 미국 패권 아래의 동아시아 지역 탈군사회는 탈식민화의 과제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조희연, 2000 ; 陳光興, 2000 ; 김소영, 2003). 탈식민화가 되지 않는다면, 탈군사회는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주장하는 세력마다 각기 내용은 다르지만 건국 후 계속되고 있는 한국사회의 염원인 '자주국방

16) 이 사건은 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잠시 일단락되었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군 가산제를 국가안보 이데올로기와 병역제도의 성별성 문제로 접근하기보다는, '이기적인 여성운동의 승리'와 남성에 대한 역차별로 인식하고 있고, 논란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 여성운동 역시 군 가산제 논쟁을, 남녀를 초월한 공공재(公共財)로 간주되는 국가안보를 문제화하기보다는 남녀평등 문제로 인식했고 따라서 대국민 설득력을 가질 수 없었다.

17) 이는 한국사회가 오랜 시간 군사정권 아래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군인의 사회적 지위 변화에 대해서는 김남국(1995), 국방대학원 안보문제연구소(2003), 국방부(2000).

18) 노무현 정부 이후 자주국방론자들의 다양한 입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논쟁)¹⁸⁾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심화와 함께 내부/외부, 우리/그들, 안전/위협과 같은 이분법이 손 상되기 시작했고, 그러한 이분법에 기초한 국가안보의 전통적 구도가 동요하고 있는 포스트모던 제국, 즉, 후기 웨스트팔렌 체제(네그리와 하트, 2003)에서는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후기국민국가 시대에서 자주국방 담론은 국가안보와 공동체 구성원들의 안전과 시민권의 관계, 본격적으로 가시화된 ‘비국민’ 들의 사회적 안전망을 새로운 차원에서 고민하기보다는, 서구를 기원으로 근대국민국가의 이상을 달성 하려는 후기식민주의적인 시도이다. 이 논쟁은 국방보다는 자주를 강조하며 정상적 근대국가를 열망하 는 세력과 자주보다는 강병을 추구하며 글로벌 군사화에 적극 참여하고자 하는, 각기 다른 국가 건설 (nation building) 세력의 대립이다. 자주국방 논쟁은 한반도에서 미국의 역할에 대한 견해차와 이에 기반 한 상이한 주권 인식을 중심으로(“군사주권을 미국에 스스로 맡김 vs 강제로 빼앗김”) 진행되고 있다. 자주국방론은, 주권의 의미가 혼란을 겪으면서 경계의 갈등과 재설정의 정치가 치열한 시대에, 주권을 되찾고 강화하겠다는 주장이다. 자주국방 언설은 극적인 다양성과 격렬한 대립 구조를 보이고 있지만, 모두 미완의 국가가 도달해야 할 지점으로서 국방의 ‘효과적인’, ‘합리적인’, ‘경제적인’, ‘민주적인’ 실 현 방법에 관한 논의이다.

이러한 상황은 8.15 이후 한국사회에서 근대성에 대한 지향과 그 방식을 둘러싸고 형성된 지배적 담 론장의 지속이자 변형이라고 할 수 있다.¹⁹⁾ 즉, 서구를 근대성의 기원으로 삼고 강대국과의 동일시 욕 망에서, 앞서간 서구의 시간을 압축적으로 달성해야 한다는 목표 아래 그 과제를 주도하는 주체와 그 것을 방해하는 국내외 세력이 누구인가에 대한 서로 다른 정치적 기획인 것이다. 차크라바티(D. Chakrabarty, 2000:3-26)는 후기식민사회에서 식민 지배층과 반식민 세력 간의 역사에 대한 투쟁을 ‘아직 (not yet)’과 ‘지금(now)’의 투쟁으로 설명한다. 식민주의자는 ‘아직 준비가 덜 되었다’(“군 작전권 환수는

	작전권 환수에 대한 입장	군비 증강에 대한 입장	주적 인식	자주국방의 목표
반미 군축 자주국방 (평화운동가)	한국이 진정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제대로 환수	군축, 비핵화, 군 부패 방지, 투명한 국방비, 합리적 국방 예산	위협의 다변화, 주적관 폐기	절차적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평화민주주의 국가 건설
반미 친북 친해 자주국방	즉각 제대로 환수, 미군철수	분단 상황에서는 전략적 군축, 통일 후 부국강병	(주로) 미국	민족 공조에 의한 통일 후 부국강병
당분간 용마하되 독자적 군비 증강을 주장하는 자주국방	충분히 준비 후 환수하여 자율성 범위를 점차 넓혀 나감(“작전권 전환”)	주변국이 한국을 넘보지 못할 정도로 군비 증강, 통일 후에도 증강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북한 등 모든 주변국	주변국에 의한 모든 전쟁 방지
미국의 한국 방기염려하여 더 강화된 한미동맹을 주장하는 자주국방	작전권 환수, 미군철수 모두 불가	자주국방은 비용이 많이 들어 경제에 타격, 계속 미국 보호 아래 있어야	(주로) 북한	전쟁 방지 (주로 북한의 침략 방지)

19) 한국을 포함하여 2차 대전 이후 1945년에서 1968년 사이 66개국이 독립했는데, 성공한 모든 ‘독립혁명’은 국가적 관점(national terms)으로 규정되었고 이들은 새로운 국가주의를 만들어왔다(앤더슨, 1991).

시기상조”)는 논리로 식민 지배를 연장시키려는 반면, 반식민 세력은 ‘지금 당장’(“즉각 환수”)을 강조 하면서, 시간성의 대립이 생겨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립 구도에서 양자는 모두 ‘서구-민주주의-합리성’ 혹은 ‘선진-강대국’을 기원이자 모델로 전제하고 공유한다.²⁰⁾ 즉, 서구를 근대성의 기원으로 삼고 강대국과의 동일시 욕망에서, 앞서간 서구의 시간을 압축적으로 달성해야 한다는 목표 아래 이 과제를 주도하는 주체와 그것을 방해하는 국내외 세력이 누구인가에 대한 서로 다른 정치적 기획인 것이다. 이러한 대립 구도에서 양자는 모두 ‘서구-민주주의-합리성’ 혹은 ‘서구-선진-강대국’을 기원이자 모델로 전제하고 공유하고 있다. 그러므로 “자주나 종속이나”(반미세력의 논쟁구도), “고립이나 편승이 나”(친미세력의 논쟁구도)와 같은 이분법적 논의 양식은, 서구를 달성해야 할 목표로 삼고 한국을 서구 를 따라가기 위한 역사의 대가실로 상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의 논의는 한국사회에서 작동하고 있는 제국의 권력은 물론 한국사회의 후기식민성에 대한 성찰과 비판을 불가능하게 한다.²¹⁾

이러한 후기 식민 주체의 모순은 세계를 문명과 야만, 식민자와 피식민자, 선진과 후진, 중심과 주변, 진짜와 가짜로 양분하는 이분법에서 비롯된다. 서구 중심주의의 극복은 서구/남성의 대립항으로서 ‘우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로 이행하는 것이다. 서구사회를 포함하여 각 사회의 고유의 맥락 에서 형성되는 근대성의 성격은 모두 혼종적(hybrid)이다. 근대성은 특정한 사회(local society)에 순수하게 서구적인 것으로도 존재하지 않고, 순수하게 토착적인 것으로도 존재하지 않는다. 식민주의와 제국주의 시기부터 근대성 개념은 언어적 문화적 경계를 횡단하며 여행해왔고, 근대성을 수용하는 사회의 다양한 사회 집단에 의해 재창조, 전유되어왔다. 근대성이라는 이름으로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동원된 로 컬의 당사자(actors)들을 해석적 행위자들로 인식한다면, 근대성은 그것이 “서구적”인 것만큼이나 지역 적(local)인 것이 된다. 근대성의 도래는 어떤 단일한 원인, 과정, 영역에 귀착되지 않는다. 이미 피식민 국가는 독립 후 국가 건설 과정에서 식민 세력과 공모, 상호 의존해왔다. 식민 세력과의 공모로 인해, 피식민 사회의 남성 지배 세력은 자신이 젠더에 기반한 서구 중심의 근대적 인식론(이원론)과 ‘(이미 존재하지도 않는) 제대로 된 국가 만들기’ 기획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기 힘들다.²²⁾

20) 자주국방론자들이 소환해내는 주체는 신자유주의 시대 부국강병 국가의 ‘국민’, 자강(自強)과 민족공동체 복원을 원하는 ‘민족’, 합리적 시민사회 건설을 원하는 근대적 ‘시민’ 등 다양하다. 경합하고 있는 자주국방론자들은 이들이 열망하는 국가에 대한 각기 다른 상상을 보여준다. 평화운동가들은 시민을 대상으로 말함으로써 미국을 모델로 한 국방 영역에 대한 문민통제(civil control)가 자주국방 실현의 핵심이라고 본다. 우익 NGO들은 국민을 상대로 여론을 형성함으로써 부국강병을 위한 국방부의 ‘제대로 된’(더욱 군국주의적인) 역할을 요구한다. 행정부나 국방부 관계자들은 안보가 국가의 수뇌부들간의 의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밀을 강조하고, 직업 군인들은 자주국방 논쟁이 자신의 생업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 이들 언설의 영향력과 효과는 한국사회 내부에서 발생하면서, 공동체 구성원들을 각기 다른 주체로 호명하고 동원한다. 그러나 이는 모두 ‘국민’과 ‘비국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서로 다른 안전 문제 - 여성에 대한 폭력, 빈곤, 사회적 안전망 부재, 대추리 지역민의 고통과 같은 국가안보로 인한 피해, 만연한 실업, 불량 식품, 환경파괴 등등 - 를 사회적 의제가 되기 어렵게 만들거나 사소한 문제로 위계화 시킨다. 국가 대 국가의 관계만을 모든 안보의 최종 목표로 환원하는 언설 방식이기 때문이다.

21) 자주국방(自主國防, self-reliance defense)이라는 말 자체가 한국과 서구에서의 의미가 다르다. 미국 진보 세력의 입장에서 ‘self-reliance’는 자급자족적인 비동맹을 의미하는 진보적 개념으로 힘의 정치(power politics)의 상대어이다(Tickner, 1986).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자주국방은 진보, 보수 세력을 초월한 국가적 목표이다. 북한에서는 ‘independent defense’로 표기한다.

22) 예를 들어, “탈식민은 항상 폭력적 현상”이라는 프란츠 파농의 주장과 인도 독립 과정에서 간디의 비폭력 주장은 식민 이후 사회의 언어, 문화의 형성, 특히 여성의 신분과 깊은 관계가 있다. 여성문제를 부차적, 분열적으로 보는 성별화된 문화가 거의 모든 탈식민화 과정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광주민중항쟁의 탈혁명화: '지역과 전국의 공간정치학의 관점에서'

원영수

(진보평론 편집위원)

하나의 연구영역/주제로 정착된 광주민중항쟁학(?)에서 원초적 사건으로서 5.18 광주민중항쟁과 그것을 둘러싼 승인투쟁 및 기억투쟁으로서 5월투쟁 또는 5월운동을 구분한다. 광주항쟁과 5월운동은 9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광주의 '제도화'가 완성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광주항쟁은 광주사람들만의 것이 아니다. 하나의 지역으로서 광주는 끊임없이 다른 지역 및 그 총체로서 전국과 소통하려고 하였고, 이런 소통의 시도는 반광주 세력의 탄압과 방해 속에서 항상 적으로 왜곡될 수밖에 없었다. 비록 제도화=합법화를 통해 광주를 말살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여전히 광주는 지역으로 봉쇄되고 있다.

광주의 지역화는 원초적 사건으로서 항쟁 그 자체이든, 그것의 연장으로서의 5월운동이든 모두에게 비극이다. 그러나 이 비극에는 일반적으로 군부파시즘이나 그들의 추종세력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힘든, 5월운동 주체들의 상당한 판단착오와 부분적 공모가 존재한다.

외형상 광주항쟁은 개별보상과 국가유공자 지정, 기념일제정, 국립묘지화 등을 통해 법적-제도적 차원의 처리(?)는 완결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법률적 제도화 과정은 한편에서 5월항쟁의 당사자 주체를 제외한 다른 주체들을 소외시키는 과정에 다름 아니었다.

광주항쟁의 정치적 효과

한마디로 당시의 운동에 광주의 영향은 급진화(radicalization)이었다. 광주의 무장저항과 봉기는 자유주의에서 민주주의로 서서히 진전하던 학생운동 및 학생운동 출신 활동가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고, 이들은 한편에서 광주의 고립과 무자비한 진압에 대한 무기력감과 이에 수반한 죄의식에 사로잡혔고, 다른 한편으로서 운동 자체의 질적 도약을 준비하지 않을 수 없었다.

- 1) 이념적으로, 자유주의로부터 혁명주의로의 선회했다
- 2) 전략적으로, 반제반파쇼 전략이 실천적으로 정립되었다
- 3) 전술적으로, 군부파쇼 국가권력에 맞선 수세적 비폭력투쟁에서 공세적 폭력투쟁으로 전환했다.

이와 같은 급진화를 가능하게 한 것은 의식화는 구체적으로

- 1) 남한에서 혁명이 가능하다는 구체적 결론
- 2) 국가권력, 특히 군사력의 불패신화가 분쇄되었다
- 3) 대중투쟁을 통해 국가권력의 타도와 새로운 체제의 건설이 가능함을 혁명광주 10일의 경험에서 확인했다

그런 의미에서 광주항쟁은 흔히 4.19혁명이나 6.10항쟁에 비교된다. 광주항쟁은 학생 주도의 자유주의의 틀에 제한된 4.19에 비해 광주항쟁은 엄청난 발전이었다. 또한 1987년의 6.10항쟁은 광주항쟁의 경험에 힘입은 성과였다. 그러나 수동혁명의 한계, 정치적 지도력의 한계는 여전히 노정되었고, 이후 5월운동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80년 광주를 경계로 한 운동의 급진화와 그 정치적 효과는 마치 68혁명이 제국주의의 심장부에서도 혁명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한 것이나, 1989년 베네수엘라의 카라카스 봉기가 1992년 우고 차베스의 쿠데타와 현재의 볼리비아의 혁명을 가능하게 했던 사례와 비교할 수 있다.

제도화의 뒷

1990년대를 경과하면서 광주는 제도화의 뒷에 갇혔고,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혁명광주는 거세되었다. 그러나 진상규명없는 개별적 보상과 제도화는 혁명광주를 기념제의의 틀 속에, 제도권의 학술연구의 틀 속에 갇히게 했다.

이와 같은 제도화는 여러 다른 요인들이 있겠지만, 주로 지역운동(광주의 5월운동)과 전국운동의 연결고리와 이완, 그로 인한 지역운동의 원심화와 고립화, 전국운동의 탈급진화 등이 결합되어 나타난 결과이다. 따라서 이른바 사법처리 절차를 통해서도 밝혀지지 않는 정확한 사망자수와 암매장 장소, 발포 책임자, 미국의 구체적 역할 등에 대한 진상규명은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음에도 이를 해결할 주체가 재구성되어야 하는 역설적 현실에 처하게 되었다.

20세기의 역사가 전세계적으로 증명하듯이, 진상규명은 그 사회의 계급적 역관계에 의해 규정될 수밖에 없다. 민주화에 대한 광범한 대중적 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학살세력의 물리적-법적-제도적 저

항을 무력화할 수 있을 만큼 강하지 못하다면, 진실은 역사의 망각 속에 묻히기 마련이다.

광주항쟁과 5월운동: 지역운동과 전국운동의 상호작용

광주항쟁은 전국화에 실패하고 진압되었다. 광주의 결사항전과 무자비한 진압은 이후 전국운동을 급진화를 통해 근본적으로 변화시켰고, 1980년대 이후 전국운동은 광주를 향하게 되었다.

이후 5월운동의 메카니즘은 다음과 같은 세 시기를 구분함으로써 그 작동 메카니즘을 이해할 수 있다.

첫 번째 시기: 5월투쟁의 전국화

두 번째 시기: 전국적 투쟁의 광주집결

세 번째 시기: 제도화와 지역화/고립화

첫 번째 시기 5월투쟁은 전국화되었다. 광주항쟁은 광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 사안이었고, 전체운동의 사안이었다. 전국적 운동이 타격대상으로 설정한 전두환 군부파소정권이 바로 광주학살의 주범이었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러운 동일화였다. 전국적 투쟁과 업호를 통해 광주의 5월운동의 주체가 정립되었다. 비록 광주의 5월운동과 전국운동의 물리적 결합은 봉쇄 또는 차단되었지만, 광주에 대한 연대는 의문의 여지 없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런 연대와 결합의 정점이 바로 87년 6월항쟁이었고, 어떤 의미에서 광주는 87년 6월 전국의 모든 도시에서 재현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두 번째 시기는 6.29협정을 통해 창출적인 합법적 공간 속에서 5월운동이 전개된 시기이다. 이 시기에 5월이면 전국의 운동이 광주로 집결했고, 첫 번째 시기에 봉쇄되었던 광주와 전국운동의 물리적 결합이 실제로 물질화되었다. 더불어, 광주청문회와 5.18 특별법과 사법처리, 국가기념일 제정 등의 제도화 과정이 동시적으로 진행되면서, 이후의 전국과 지역의 분리 또는 이완의 과정은 잠복적 형태로 진행되었다.

세 번째 시기는 제도화 단계의 시기로 제도화의 효과가 실현되면서, 광주의 제도화, 상품화로 변질되는 시기이자, 개별보상 이후 항쟁주체의 해체과정이기도 하다. 물론 법적인 보장을 통해 자료조사 및 연구사업, 단체의 안정화 등 제도화의 이점이 구조적으로 확보된 측면도 존재하지만, 사안의 성격상 15년 이상 격렬하게 진행된 투쟁이 마무리되는 과정으로서는 참담한 절차였다.

특히, 1997년 김대중의 승리는 아마 광주항쟁의 제도화의 정점이다. 자유주의자들의 관점에서는 80년항쟁의 고리가 마침내 김대중의 집권으로 마무리되는 되었다. 절차적 민주주의의 진전과 함께, 광주

와 민주화운동의 제도 외부의 광야가 아니라 제도의 한 영역에서 정당하게 평가받고 대우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정치적 해결절차'는 역으로 항쟁주체의 재구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효과를 가졌다. 전두환과 노태우를 사면함으로써 김대중 자신은 자신이 그토록 소망한 대권과 노벨상,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성공적 인생을 이룩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른바 DJ 팩터는 광주를 역사적 망각협정에 봉인하는 효과를 가졌다.

5월운동과 DJ Factor

주지하는 바와 같이 남한의 운동 역시 DJ 팩터에 의해 주된 영향을 받았다. 운동 내부적으로 DJ로 상징되는 자유주의 부르주아세력에 대한 정치적 독립성 여부가 지난 4반세기의 운동사를 규정하는 쟁점이었다. 특히 최근 민주노동당 분당사태와 진보진당 출범으로 상징되는 운동진영의 정치적 좌우(재)분열/분화는 지난 수십년간 운동사의 반영이기도 하다.

1987년 대선에서 비판적 지지입장으로 세력화한 다수세력은 정치적으로 자유주의 정치세력에 포섭되어 그 일부가 되었고, 비록 운동진영 내에 잔류한 세력 내에서 선배그룹으로서 그들의 영향력은 적지 않았다. 물론 1990년대 민중운동의 발전은 특히 노동자들의 투쟁을 통해 자유주의로부터의 정치적 독립을 일정 정도 진전시켜 냈지만, 아직도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민족주의적 친북세력의 수적 우위는 민주노동당을 자유주의 세력의 2중대로 변질시켰으며, 노동자민중의 정치세력화가 갖는 본래적 의미를 퇴색시켰다. 바로 운동 자체의 좌우분화와 탈급진화 과정은 광주의 지역화, 고립화와 정세적으로 맞물려, 광주의 탈혁명화를 더욱 촉진하는 기제로 작동하였다.

광주와 관련한 한가지 역설은 광주는 좌파의 무덤이라는 점이다. 운동진영 내에서 민족해방계 다수파의 전일적 지배가 보장되는 곳이 광주와 호남지역이라는 사실은 광주의 역설과 무관하지 않다. 좌파의 불모지로서 광주는 사실상 광주가 더 이상 진보운동 또는 한국사회의 진보의 재구성에 별로 기여하지 못하는 현실과도 무관하지 않다.

지역주의와 광주항쟁의 지역화

제도정치 차원에서 광주항쟁을 매개로 촉발된 방어적 지역주의는 정치적 민주화 과정과 병행하여

지역주의의 고착화로 이어지면서, 정치질서의 지역주의적 왜곡은 광주지의 상대적 진보성으로 귀결되기 보다는 후진적 정치질서의 온존에 기여하고, 역으로 광주 자체의 전적 고립화로 이어졌다.

이 지역화 효과를 제도화를 계기로 더욱 고착되었다. 이는 광주항쟁을 해방광주의 변혁성이 아니라, 민주화운동의 제도적 틀로 가두는 것을 전제로 한다. 더불어, 전국적 운동의 탈급진화와 지역운동의 고립주의는 이를 촉진하였고, 혁명광주의 정체성을 유지할 주체는 해체되거나 주변화되었다.

광주항쟁을 민주화운동의 틀 속으로 감히면서, 광주의 생명주기는 제도화 과정의 완성과 더불어 봉인된다. 사법처리 절차는 구조적으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고, 대승적 차원의 화해를 포함한 과정의 종결은 고난의 과정을 겪으면서 정착된 한국 민주주의를 장식하는 데 더 없이 바람직한 장식물이 된다.

마치며

약 10여년 학단협의 토론회는 “광주는 끝났는가?”라는 화두를 던진 바 있다. 그리고 토론의 결론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였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광주가 이미 끝났음을 확인해 준다.

현재적으로 보자면, 광주학살은 가해자 없는 사건이며, 발포 명령권자도 없이 비무장 시민들이 살해 당했던 불행한 과거의 사건이다. 이는 마치 베네수엘라의 2002년 4월 쿠데타에 대한 사법부의 논리와 유사하다. 잠시 국가권력의 공백이 있었을 뿐, 쿠데타가 일어났음을 입증할 수 없다는 궤변과 같다.

따라서 당연히 해방광주, 혁명광주에서 구현된 10일간의 민중자치의 경험이 단지 역사적 유토피아적 신기루가 아니라면, 광주는 끝날 수 없으며, 주체의 재구성을 통한, 광주의 탈지역화를 통한 재급진화를 통해 광주는 언제든지 부활할 수 있다. 그리고 또 부활해야 한다. 단지 아카데미한 담론이 아니라, 현실의 투쟁을 통해서, 현실의 운동과 실천을 통해서 부활해야 한다. 관제행사도 전락한 상품화된 광주가 아니라, 해방의 공간으로서 광주는 전취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South Korean Democracy. Legacy of the Geangju Uprising, ed. Georgy Katsiaticas & Na Kahn-chae, Routledge. 2006. London.

김세균, 광주민중항쟁의 사회적 배경

나간채, 5.18이후 5월운동조직의 형성과 발전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광주민중항쟁 18주년 기념자료집: 5.18과 동아시아 민중항쟁>, 1998.5.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해외에서의 5월운동과 내적 성찰>, 1999.11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광주민중항쟁 2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새로운 천년을 열며 - 세계의 민주주의와 인권>, 2000.5.15-17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광주민중항쟁 21주년 기념 2차 국제학술대회: 동남아시아의 식민주의, 권위주의, 민주주의 및 인권>, 2001.5.15-17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광주민중항쟁 22주년 기념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제3회 국제학술대회: 민주화운동과 여성>, 2002.5.15-17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광주민중항쟁 23주년 기념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제4회 국제학술대회: 역사적 기억과 문화적 재현: 4.3운동과 5.18 문화운동>, 2003.5.15-18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광주민중항쟁 24주년 기념학술대회: 5.18연구: 회고와 전망>, 2004.5.6-7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광주민중항쟁 25주년 기념학술대회: 21세기 민주주의와 한국정치>, 2003.5.6-7

최장집, 광주민중항쟁과 2단계 민주화

동요하는 네셔널리티, 황폐화되는 5.18의 기억

민주화와 선진화 담론의 기억과 망각의 정치에 대하여

김진호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연구실장, 목사)

1

베이징 올림픽 성화가 한국을 거쳐 가는 과정에서 일부 중국 유학생들의 폭력적 공격이 있었다. 그리고 종종 그렇듯이 이튿날부터 한국 네티즌들의 사이버공격이 이어졌다. 올림픽 개최로 중국이 국제적 공공성 영역과의 접촉면이 확대되면서 티벳이라는 약한 고리를 둘러싼 국제전(國際戰)이 벌어지고 수세에 몰린 중국의 민족주의가 미국, 유럽 및 세계 각처에서 분출했는데, 그러한 민족주의의 공격성이 비교적 큰 파열음을 낸 곳이 바로 한국이었던 것이다. 티벳에서의 만행에 대한 인권적 감수성이 더 강했던 것도, 반중(反中) 기조의 국제외교가 활발해질 만한 정치적 이벤트가 열렸던 것도 아니다. 이유가 있다면 중국 유학생의 숫자가 많다는 정도¹⁾ 요컨대 그들이 이렇게 명분 없는 집단행동을 할 만한 이유가 단지 '숫자'였다면, 성찰하기보다는 너무 쉽게 흥분하는 집단심리가 이유였다면, 중국의 분출하는 민족주의와 거기에 즉자적인 공격으로 반응하는 한국의 민족주의는 매우 위협스러워 보인다.

그 누구의 의도도 아니고 사건의 연계성도 없지만, 예상 못한 시간에 중국의 민족주의가 한국을 건드렸고, 한국의 민족주의는 곧바로 못지않은 공격성을 표출했다. 물론 이 사건은 미미한 갈등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민족주의는 때로 대책 없이 공격적이고 차분한 성찰보다는 감정적인 경쟁심과 좀 더 어울리는 생각의 장치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임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배타적이고 공격적인 민족주의가, 조금 더 지평을 확장해서 보면, 최근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삼국의 민족사 구성 문제를 둘러싼 민족국가간 충돌의 배후로 작동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구화가 빠르게 확산되는 1990년대 이후 '언어집단'의 민족적 주체화가 가속화되어 향후 50년 내에 천 개의 독립국가가 등장할 것이라는 미래학자 네이스비트(J. Naisbitt)의 다소 과장된 주장에서 시사되고 있듯이,²⁾ 전 세계적인 갈등의 배후로 이념이나 경제 문제보다 민족주의가 더욱 중요한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그것은 '민족'이라는 집합적 정체성이 특히 지구화 시대로 오면 일종의 갈등의 주요 표출구 같은 성격이 현저히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구화'는 근대적 국경의 견고한 장벽을 제약 없이 넘나드는 다양한 요소들로 인해 전 지구적인 상

1) 지구화 시대 중국인들의 민족주의적 집단 의식이 형성되는 배경에 관한 연구들로 다음을 참조하라. 최연식, 「탈냉전기 중국의 민족주의」, 『한국정치학회보』 14/1(2004.5); 백지운, 「전지구화 시대 중국의 '인터넷 민족주의」, 『중국현대문학』 34(2005.9).
2) 『글로벌 패러독스』 (한림미디어, 1997), 제1장 참조

호 연결망이 확대되는 방향으로의 구조변동을 표상하는 개념인데, 이러한 변화의 파고는 영토성(territorization)이 관계 구성의 핵심인 근대적 민족국가의 특권적 지위를 크게 훼손시켰다. 국경 내부에 대한 배타적인 독점적 통제력이, 국경을 자유자재로 횡단하는 요소들로 인해 크게 교란된 것이다. 그런데 모순적이게도 근대적 민족국가의 사회통합의 장치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민족주의는 지구화로 인한 '국가의 위기'가 구조화 될수록 오히려 더욱 맹렬히 불타오르고 있다. 마뉴엘 카스텔(Manuel Castells)은 정보 네트워크의 지구화(globalization of information-network)로 인한 존재론적 불안을 방어하기 위해 문화공동체(cultural commune)에 대한 귀속 욕구가 강화되는 현상으로 지구화 시대 민족주의의 활성화를 설명한다.³⁾

이렇게 지구화되면서 국지화되는 요소는 지구화 시대 국가의 체제적 속성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카스텔은 이러한 양상을 정보 네트워크가 '수평적'으로 확대되는 현상과 관련시켜 해석하고 있지만,⁴⁾ 피터 드러커(P. Drucker) 등의 미국의 미래학자들 중심의 이른바 기술현실주의(techno-realism)는 탈자본주의 시대 정치체제의 추동세력이 소수의 전문가집단인 '지식경영자'(knowledge officer)임을 주장한다.⁵⁾ 비록 드러커 등은 기술유토피아(techno-utopia)적인 낙관주의적 시각에서 이러한 현상을 바라보고 있지만, 지구화 이후 한국의 기업광고 속에서 민족주의 담론의 특성을 조사한 노승미에 의하면,⁶⁾ 이 광고들은 전 지구적 차원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시장 경쟁 속에 민족을 전투적 경제공동체의 단위로 동원하며, 이에 걸맞는 배타성과 공격성의 경제주의적 요소를 정서와 기억 속에 민족주의 형태로 주입하는 담론 형식을 띠고 있다. 물론 이러한 광고 담론의 한 가운데는 지구화 시대의 민족주의적인 경제적 동원체제의 중심에 바로 지식경영자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필경 이러한 광고 속의 메시지가 이번 '성화봉송 폭력사태'에 대한 한국 네티즌의 신속한 배타적 공격성의 심리적 알리바이가 되었을 것이다. 광고를 통한 담론의 공공성이 무성찰적 공격성을 야기시키는 토대가 된 것이다. 그렇다면 지식경영자들의 체제는 기술유토피아적인 평화롭고 발전적 세계보다는 호전적이고 위협스럽기까지 하는 불길함 속으로 우리를 몰아가고 있을지도 모른다.

바로 이러한 위협스러운 민족주의가 지구화 시대를 맞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격렬하게 부활하고 있다. 하여 국가간 경쟁과 배타주의가 격화되고 있고, 국경 내의 외부자에 대한 배제와 차별이 심화되며, 중국과 티벳의 예에서 보듯이 국가와 소수민족 간의 물러설 수 없는 갈등을 강화시켰다.⁷⁾

그런 점에서 이 글은 MB 시대의 민족주의의 행보, 그 가능성에 주목한다. MB 체제를 낳은 시민사회적 욕구와 '실용' 혹은 '선진화'라는 슬로건으로 표상되는 신정부 간의 상호 얽힘을 민족주의의 행보 가능성과 관련하여 살피고자 하는데, 특히 '5.18의 기억'이 어떻게 정치화될지에 관한 문제의식과 연계시켜 하나의 '불온한' 상상력을 펼치고자 한다.

3) 『정체성 권력-정보시대 경제, 사회 문화2』 (한울, 2008) 참조

4) 김명준, 「카스텔(Castells)의 '네트워크 사회'(Network Society)론에 관한 커뮤니케이션학적 의미의 고찰」, 『한국언론학보』 51/2(2007.4) 참조

5) P. 드러커, 『자본주의 이후 사회의 지식경영자』 (한국경제신문, 2000) 참조

6) 노승미, 「세계화 시대 한국사회에서 기업광고에 나타나는 자본의 민족주의 담론 연구」(중앙대학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2006).

7) 안쏘니 D. 스미스, 『세계화 시대의 민족과 민족주의』 (남지, 1997) 참조

피터 드러커, 다니엘 벨(Daniel Bell) 등의 '지식기반사회'(knowledge-based society)론은 지식기반경제를 위한 동원체제로 사회 각 영역이 제도화되어야 한다는 이론적 주장으로, 한국에서는 '국민의 정부' 이후 불규칙하지만 크게 보면 일관성 있게 지식기반사회적 제도화가 추진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에서 지식기반사회의 제도화 문제는 체제의 성격과 관련해서 내적 모순의 요소를 지닌다. 그것은 이들 민주화 시대의 정부들이, 발전주의 우선으로 전 사회적 동원체제를 구축했던 군부독재 시대의 근대화 양식(군사주의적 근대화)에서 발전과 배분의 동시적 추구를 지향하는 근대화(민주적/시민적 근대화)로의 변화를 갈망하게 된 사회적 욕망 속에 탄생한 정부들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민주화 시대 정치체제는 '군사주의적 근대화'를 청산하고 '시민적 근대화'를 구현하려는 시대정신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자원의 독점에서 배분으로의 제도화가 그러한 시대정신의 지지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배분 욕망은 '평등'이라는 이상화된 개념을 통해 표현됨으로 보편적 합의를 얻을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은 '체험된 평등'이 아니었다. 열망해 마지않던 '상상 속의 평등'(imagined equality)이 갑자기 제도화의 길을 걷게 된 것이다. 누구도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적 보편성을 구현하는 역사의 시험대를 통과해야 하는 어려운 관문을 지나야 했다. 성찰의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실행되는 평등의 제도화는 다분히 도구적인 방식으로 구체화될 우려가 농후하다. 그리고 그 우려는 상당부분 실현되었다.

우리 사회에서 민주적 제도화의 시대가 산업구성에서 내구소비재의 비중이 급속도로 커지는 시기와 맞물려 있다는 점은 평등의 도구주의적 제도화의 문제를 고려할 때 중요한 변수다. 시민의 인정 욕망은 일상으로 침투한 자본의 호명 앞에 급격하게 '시장적'으로 채색되어 갔고('시민의 시장화'),⁸⁾ 이 시장화된 시민은, 송호근의 표현대로 '교양 없는 중산층'을 이루어, 한국 민주화 시대 평등 담론의 성찰 가능성을 잠식했다. 그는, 서구의 특징인 '자유와 코드화된 평등'(equality codified with liberty)이 아니라, 권위주의 시대의 인정 투쟁의 산물인 '권리와 코드화된 평등'(equality codified with right)이 한국의 지배적인 평등 담론을 구성했다고 보는데, 이를 브루스 애커만(Bruce A. Ackerman) 식으로 말하면,⁹⁾ (자유주의적 이든 사회주의적이든) 지배체제에 대항하고 권력을 대체함으로써(정복함으로써) 구성되는 평등 담론인 '지배적 평등'(dominated equality)과 부합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타자에 대한 우월감에 기초하지 않고 대화적인, 그리하여 선형적으로 결정되기보다는 과정적으로 구성되는 '비지배적 평등'(undominated equality)과는 대비되는, 비성찰적인 평등주의인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권위-평등'이 민주화 시대의 지배적 가치를 향유하는 세력인 '교양 없는 중산층'에 의해 전유됨으로써 성찰의 가능성은 더욱 잠식되고, 자기 집단의 지대추구적 행위(rent-seeking behavior)의 도구로 전용되는 왜곡 현상이 일상화되었다는 것이다.¹⁰⁾

그런데 바로 이 시기는, 앞서 말한 것처럼, 지구화의 물결이 거칠게 몰아쳐오던 시기였고, 지난 권위

8) 한국 민주화와 시민의 시장화에 대하여는 나의 글 「민주화 시대의 '미학화된 기독교'와 한국 보수주의의, 『더 작은 민주주의를 상상한다』 (웅진 지식하우스, 2007) 참조

9) Bruce A. Ackerman, *Social Justice in the Liberal State* (New Haven: Yale Univ. Press, 1980), pp. 15~17.

10) 송호근, 『한국의 평등주의, 그 마음의 습관』 (삼성경제연구소, 2006) 참조

주의 시대 고도성장을 이룩한 근력기반사회(brawn-based society)를 지식기반사회로 재구조화하는 급속한 이행의 시기이기도 했다. 여기서 근력기반사회는 생산성이 향상되면 생산요소를 증가시킬 필요가 발생하고 이는 다시 더 높은 생산성으로 이어지는, 하여 생산성의 향상이 더 많은 고용 창출을 낳는 경제적 체제 양식을 말한다. 그러나 지식기반사회는 생산성이 향상되어도 고용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는, 심지어 더 적게 발생하기도 하는 생산 메커니즘을 특징으로 한다.¹¹⁾ 이는 승자 독식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배제 가능성(실질적 배제와 잠재적 배제)의 범위가 더욱 광범위해지는 현상을 낳는다. 그런 점에서 지식기반사회는 자원배분의 위기를 일상화하는 것이다.

하여, 앞서 말했듯이, 탈권위주의 시대의 정부들은 자원배분에 대한 사회적 욕망을 제도화하는 민주적 정부를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자원독점을 더욱 강화하는 지식기반사회적 제도화를 모색했다. 문제는 이 두 요소, 배분 지향성과 독점 지향성이 잘 조정되기보다는 불안정하게, 모순적으로 접합되곤 했는데 있다. 그것은 급박하게 진행되는 외적 현실, 특히 지구화의 위협 속에 이행과 조정을 여유 있게 진행할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이기도 했고, 또한 각각의 사회적 행위자들, 지배를 위한 자원을 충분히 갖지 못한, 그리하여 개혁을 필요로 하는 집권세력이나, 충분한 자원을 갖추었음에도 도전세력의 위치로 추락해 있던 구지배세력, 그리고 그밖의 다양한 민주 지향적 세력들과 반민주 지향적 세력들이 대화적이기보다는 정복주의적인 자세로 상호간에 무한경쟁에 돌입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¹²⁾

아무튼 이러한 잘 준비되고 조정되지 못한 제도화는 광범위한 '배제'를 발생시켰다. 중산층의 몰락/하층민화가 심화되었고, 하층민의 자기 파괴현상 또한 심화되었다. 매우 높은 수준의 몰락 가능성은 중산층과 하층민 사이의 '하향의 회색지대'(going-down gray zone)를 광범위하게 형성했고, 이는 지난 시대 상승 가능성에 충일된 '상향의 회색지대'(going-up gray zone)의 사회와는 다른 의미의 사회심리를 낳았다. 한국의 뉴라이트 진영의 이데올로기인 박세일이 말하는 '항아리형 경제'¹³⁾라는 표현만으로는 충분히 설명될 수 없는, '하향의 회색지대'의 사회심리는 무능력화에 대한 '사회적 공포'와 연결된 규율체제를 야기시킨 것이다. 이러한 규율체제는 일터와 쉽터, 일과 여가 사이의 구분 자체를 해체하고 끊임없는 자기 개발을 추구하게 하는, 노동중독증 걸린 탈근대자본주의적 노동주체의 사회이며,¹⁴⁾ 경제적 실패자의 심리적 상실감 내지는 배제감을 더욱 가중시키는 효과를 낳아, 결국 하층으로 추락한 이들의 무능력화를 심화시키는 '사회적 배제의 체제'이다.¹⁵⁾

이상과 같이 지식기반사회로 급속하게 이행하면서 '하향의 회색지대'가 광범위하게 형성되고, 그 속에서 생존게임에 돌입한 '시장화된 시민'은, 프레드릭 제임슨이 문제제기한 것처럼, 일상 깊숙이 침투한 자본의 영역이 확장되는 만큼, 도구주의적 관계 영역을 확대하면서 주체화되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

11) 이진복, 「지식기반경제의 사회적 배제에 대한 일 고찰」, 『시민사회와 NGO』 2/2(2004), 130쪽 참조

12) 그런 점에서 이 시대를 사회적 합의와 국가 차원의 제도화라는 관점에서 보면 민주화의 시대라고 특성화하기에는 충분치 않고, 다만 지난 시대에 '이름을 갖지 못했던' 다양한 존재들이 주체로 부상하기 위해 자신들 외부의 존재들과 치열하게 경합하면서 자기를 구성해 갔던 '정체성의 정치'가 대단히 활성화되던 시대라는 점에서는 명백한 민주화의 시대였다고 할 수 있다.

13) 박세일, 「한반도 선진화 혁명: 철학과 전략」(<http://parkseil.pe.kr/>) 참조

14) 서동진, 「기업가적 정신 혹은 탈근대자본주의의 이데올로기적 주체」, 『당대비평』 26(2004 여름) 참조

15) 김진호, 「'카인 콤플렉스'와 무능력자 담론」, 『당대비평』 23(2003 가을); 박병현 최선미, 「사회적 배제와 하층계급의 개념 고찰과 이들 개념들의 한국 빈곤정책에의 함의」, 『한국사회복지학』 45(2001.5), 202~205쪽 참조

서 공공성(publicness)은 치명적으로 해체되어 간다. 민중신학자 안병무가 '공(公)의 사유화'에서 인간 존재의 원죄성을 읽어낸 것, 즉 죄성(罪性)의 존재론적 근원을 상상한 것처럼,¹⁶⁾ 공공성의 붕괴는 존재론적 위기의식을 낳았던 것이다. 이러한 전망이 보이지 않는 공공성의 위기는 다양한 사회적 행위들을 규제하는 규범영역의 무력화를 수반하기 때문에, 도구주의적인 지대추구행위는 제약받지 않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는다. 바로 민주화 시대의 한국사회가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들고 있다는 진단¹⁷⁾은 다소 과장되지만 뜬금없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깊고 넓게 자리잡고 있는 사회적 인식의 지점에서 '민족주의'는 공공성의 회복을 위해 다시 소환된다. 하지만 그것은 민주화 시대의 정화의식을 거친 민족주의여야 했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민족주의는 그 시대의 공공성과 분리할 수 없이 얽혀 있었기 때문이다. 그 시대는 '탈빈곤에의 의지'가 지배하던 시대였고, 그것을 위해 사회의 모든 자원이 총동원되던 시대였다. '국가'는 이러한 총동원체제의 축이었고, 가족, 그리고 개체(개인)는 국가 중심의 연대(solidarity)의 견고한 하위요소였다. 그런 점에서 이 시기 가족과 개체는 국가에 전유된 하위주체였고 규정할 수 있다.¹⁸⁾ 요컨대 이 시대의 공공성은 이러한 '권위주의적 연대'가 공유하는 이상화된 가치와 결부된 것이고, 이 시기 민족주의는 이러한 연대를 공고히 하는 중요한 요소의 하나였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민주화 시대에 민족주의 담론에는 '단한 민족주의 대 열린 민족주의' '나쁜 민족주의' 대 '좋은 민족주의' 등의 이항대립적 수사어가 활용된다. 송호근 식의 어법으로 표현하면, 민주화 시대에 이 용어들이 보다 명료한 함의를 얻게 되는데, '단한 민족주의'가 '국수주의와 코드화된 민족주의'라면, '열린 민족주의'는 '세계적 보편성과 코드화된 민족주의'이고, '나쁜 민족주의'가 '권위주의와 코드화된 민족주의'라면 '좋은 민족주의'는 '민주화와 코드화된 민족주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항대립의 인식틀은 지난 시대의 청산의 요소가 무엇인지를 보다 명료하게 드러내는 데는 매우 효과적이다. 한데 문제는 '열린' '좋은' 등의 새롭게 전유하고자 하는 긍정적 민족주의의 함의를 담은 수사어는 성찰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점에 있다. 그것은 임지현이 지적한 대로, 역사적 실체로서 민족주의를 읽어내기보다는, 이상화된 신화적 개념으로서 민족주의가 호출된 탓이다.¹⁹⁾ 과거의 신화를 해체하는 데는 역사적 탈신화화의 예각화된 물음이 적절히 활용되었지만, 현재적 의제와 부합하도록 재신화화하는 과정에서는 비판적 인식이 멈춰버린 것이다.

강상중은 지구화가 야기한 지정학적 교란 상황을 민족주의를 통해 재영역화하여 공공성의 회복을 도모하려는 사회적 욕구 속에 스며 있는 배타주의의 불온함을 전후 일본의 사회역사적 체험과 그것의 보수주의적 담론화 과정에서 읽어낸다.²⁰⁾ 한국에서는 비슷한 상황이 (보수주의 담론이 아니라) 민주적 개혁담론과 결합되어 나타났다. 앞서 말한 것처럼, 민주화 시대 곳곳에서 분출했던 소수자 집단의 인정

16) 안병무, 「하늘도 땅도 공이다」, 『신학사상』 53(1986 여름) 참조

17) 송호근, 「한국,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삼성경제연구소, 2003)의 제2부 「문화 충돌의 구조」 참조

18) 임지현이 주장한 '대중독재' 이해는 이 하위주체에 관한 통념적 해석의 틈새를 드러내준다. 국가는 이 권위주의적 연대를 틀 잡는 완벽한 해석의 체계를 제공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하여 통제와 감시에 의해 규율되는 측면과 함께, 일상 속에 내재된 욕망의 가능성을 국가권력과 함께 자발적으로 향유하는 측면 또한 이 시대의 권위주의적 연대를 이해하는 요소로서 주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임지현 이상록, 「'대중독재'와 '포스트파시즘'—조희연 교수의 비판에 부쳐」, 『역사비평』 68(2004 가을) 참조

19) 임지현, 「다시, 민족주의는 반역이다」, 『창작과비평』 117(2002 가을)

20) 강상중, 「혼성화 사회를 찾아서—내셔널리티의 저편으로」, 『당대비평』 10(2000 봄)

투쟁들, 그 '정체성의 정치'들은 '민주주의와 코드화된 좋은 민족주의' 담론이 은연중 은폐 혹은 배제를 작동시키고 있었음을 삶의 영역 곳곳에서 폭로하였다. 지식기반사회적 배제의 장치들이 민주적 민족주의 담론과 동거하는 기묘한 담론 연계의 상황에서, 민주화 정부들의 '시민' 개념 속엔 민중은 추상적 맥락에서만 포섭되어 있을 뿐, 실제의 제도화 과정에서는 지속적으로 배제되고 있다는 것이다.²¹⁾

무엇보다도 이 시기에 등장한 민족주의 담론 형식의 독특성은 소비자본주의적인 미디어 상황의 변화와 관련된다. 흔히 '카니발적 내셔널리즘'이라고 부르는 새로운 유형의 민족주의는, 국가기구가 아니라 시장이 담론 구성의 중심 역할을 하며, 대중은 적개심보다는 쾌락을 통해서 민족주의를 소비하는 담론 형식을 가리킨다. 이때 민족주의와 더불어 유희하는 대중은 보다 지속적인 연대의 일원이라기보다는 보다 순간적인 연대를 이루며 담론을 소비한다. 마치 시청 앞에서 월드컵 축구를 관람하는 대중의 붉은색 물결과 같은 민족주의의 소통 양식 같은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지할 것은 카니발적 내셔널리즘은 시장의 욕구를, 그 가능성의 영역을 반영한다는 점이다. 그 가능성 가운데서 소비하는 개체가 자기 자신과 접속되는 지점을 찾아 거기에서 쾌락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여기서 자본-국가-개체 간의 연대가 형성된다. 하지만 말했듯이 이 연대는 일시적이다. 하여 시장과 국가는 끊임없이 그러한 카니발적 연대를 위해 스펙터클한 이벤트를 만들어낸다.

여기서 우리가 주지할 것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배제된 대상을 대중은 망각하기 쉽다는 점이다. 국가 권력이 우리의 시선에서 물리적으로 제거하여 망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제거의 정치), 늘 주위에 있음에도, 제거하는 야만적 기제를 활용하지 않아도 시선에 포착되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부드러운 야만'으로서의 '망각의 정치'가 작동한다.²²⁾

이러한 망각 속에서, 주위에 있으면서도 망각된 존재,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교환할 수 없는 고통의 담지자들은 종종 자기 존재 파괴의 상황으로 추락한다. 북미 연구자들에 의해 규정된 '하위계급'(underclass)은, 더 폭력적이고 더 범죄적이며 마약이나 술 등에 더 의존적인, 한마디로 희망 없는 자아 유실 상황의 존재로 끝없이 추락하는 주체 파괴적 존재에 관한 설명을 함축한다.²³⁾

이렇게 공공성이 붕괴된 민주화의 시대에 호출된 민족주의는 과거의 부정적 측면에 대한 청산작업을 거쳐야 했지만, 오늘 우리 시대 자체를 성찰하는 요소를 결여하고 있다. 특히 위에서 보았듯이 배제와 차별의 현장을 망각하게 하는 기제이다. 물론 이렇게 재형성된 민족주의 담론은, 현재를 지양하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게 하는 요소일 수는 없다. 오히려 그 부정적인 작동 가능성을 우려스럽게 한다.

정리하자면, 우리 사회에서 민주화 시대는 '평등의 제도화'라는 차원에서 빈약했고, 반면 그 담론의 대중적 소비는 풍부했던 시대였다. 하여 지배를 위한 자원이 풍부하지 못한 만큼 퍼플리즘의 성격이

21) 박노자, 「고명섭의 '민족주의론'에 질문한다—'민중적 민족주의' 논리로 부르주아 국가를 정말로 넘을 수 있는가?」, 『인물과 사상』 79(2004.11) 참조

22) 권명아, 「연대와 전유의 갈등적 역할—포스트콜로니얼리즘, 탈민족주의, 젠더 이론의 관계를 중심으로」, 『상허학보』 19 (2007 봄), 188~199쪽, 김진호, 「게임 같은 전쟁의 시대, 즐기는 타인의 고통—폭력의 일상화에 대한 민중신학적 고찰」(<http://theology.co.kr/wwwb/CrazyWWWBoard.cgi?db=jharticle&mode=read&num=1515&page=1&ftype=6&fval=&backdepth=1>) 참조

23) 김진호, 「고통과 폭력의 신학적 현상학—민중신학의 지속성과 당대성」(한국조직신학자대회 2006년 상반기)(<http://theology.co.kr/wwwb/CrazyWWWBoard.cgi?db=jharticle&mode=read&num=1620&page=1&ftype=6&fval=&backdepth=1>); 박병현 최선미, 「사회적 배제와 하층계급의 개념 고찰과 이들 개념들의 한국빈곤정책에의 함의」, 『한국사회복지학』 45(2001.5) 참조

강했던 민주적 정부들은 지구화 시대 성장전략으로 지식기반사회적 제도화를 추구하면서 배제는 평등이든 보다 일관성 있는 정책의 방향을 주도하지 못했다.

그런 점에서 이 시기의 민주적 제도화 과정은 정치경제적인 안정도 존재론적인 안정도 가져다주지 못했다. 이러한 '불안'에 대한 대중의 공포가 지속되면서 2007년 대선을 결정적 계기로 하여 '민주주의에 대한 바람의 철회'로 나타났다. 이것이 사회구조적인 변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²⁴⁾ 이른바 '실용정부'의 탄생은 '민주주의에 대한 바람의 철회'라는 대중의 국면적인 선택이 민주화 정부들과는 다른 방향으로 제도화될 가능성을 의미한다.

여기서 민주화 시대 정부들로부터의 '전환'은 어떻게 구체화될 것인가라는 물음이 도출된다. '실용'이니 '선진화'니 하는 전환을 상징하는 기표들은 아직 내용이 모호하다. 다만 지난 대선 때에 바람을 일으킨 '경제대통령 신화'는 모호하나, 현 정부 그리고 민주화에 대한 국면적 철회를 선택한 대중 사이의, 아마도 유일한 연결고리일 것이다.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사납게 몰아치는 지구화로 인한 누적된 피로를 민주적 제도화 과정이 해소시켜주거나 그럴 비전을 주지 못했던 데에 문제의 핵심이 있다는 것이다. 즉 현 정부의 등장은 '부정'의 정서이지 대안에 대한 '긍정'에 의한 것이 아니다. 실제로 정권이 등장하자마자 보여준 우왕좌왕하는 정책적 동요는, 송호근의 민주화 정부들에 대한 평가처럼, 아직은 현 정부 역시 '진보(민주화)의 실패를 뒤집는 요인들의 모자이크로서의 보수'임을 보여준다.²⁵⁾

아무튼 정권 초기에 보여준 MB적 리더십은 대기업 CEO형 리더십으로 비추어졌는데, 문제는 이것이 지식기반사회적인 '지식경영자' 상과는 다른, 제도적 차원에서는 여전히 건재하지만 대중의 감성 차원에서는 이미 민주화 시대를 거치면서 퇴색한 권위주의 시대의 유물이었다는 것이다. 최근 지지율의 급락은 그러한 엇나간 리더십, 반민주적이고 참여 배제적인 독재자 스타일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한국형 근력기반사회의 전형적 CEO 풍의 MB식 행보가 문제로 표출되고 있기는 하지만, 일종의 시대착오적인 시행착오가 점차 교정된다고 가정하면, '실용과 선진화'라는 슬로건이 MB 정부의 아직 부재한 대안을 구체화하는 가장 중요한 단서일 것이다. 이 점에서 MB 정부의 이데올로기로서, 뉴라이트 입장에서 실용과 선진화 담론을 주도한 '박세일'을 주목하는 것은 당연하다.²⁶⁾

'실용'은 박세일뿐 아니라, 최근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며 부상하고 있는 이른바 '중도' 노선²⁷⁾의 이데올로기들 사이에서 널리 활용되는 것으로, 대체로 탈이념적인 유연성을 강조하면서 개념화되고 있는 용어다. 그런데 박세일 류의 실용은 신자유주의적 색채가 보다 강하다. 가령 여기서 실용은 참여정부의

24) 송호근은 1997년과 2003년도에 행한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의 국민의식과 가치관에 관한 조사연구를 통해, 민주화 항목들은 그 기간 사이에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는 반면, 지구화 항목에서는 커다란 변화를 감지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이러한 상황은 2003년과 2007년 사이에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송호근, 『한국,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삼성경제연구소, 2003), 제2부 4장 참조

25) 송호근은 민주화 시대의 정부들의 이념의 동요를 지적하면서, '보수의 실패를 뒤집는 요인들의 모자이크'가 이 정부들의 이념(?)임을 지적한다. 송호근, 『한국, 어떤 미래를 선택할 것인가』(21세기 북스, 2005), 271쪽.

26) 최근 그가 저술한 두 개의 문건을 참조하라. 「한반도 선진화 혁명: 철학과 전략」과 「공동체 주유주의: 이념과 정책」(www.parkseil.pe.kr)

27) 『동아일보』의 2007년 신년기획시리즈인 「대한민국, 21세기 新이념 지형」의 세 번째 주제(2007.1.3)는 이른바 '중도 노선'의 추세를 보여주는 것이었다(http://www.donga.com/fbin/output?rss=1&n=200701040068).

분배정책들이 이념과잉의 산물이라는 비판을 동반한다.²⁸⁾ 즉 경제활동주체들의 활동력을 강화시킴으로써 경제적 활력을 향상시켜 경제성장이 이룩되어야 분배정책이 자연스럽게 진행될 수 있는데, 여기에 국가가 나서서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분배정책을 하게 되는 부자연스럽고 불필요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송호근이 잘 지적한 것처럼, 참여정부의 분배정책은 정책레짐에 의해 구상된 것이라기보다는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 그때그때 임기응변적으로 반응한 '프로그램적 개혁'의 성격이 더 강한 것이라고 보는 게 더 타당하다.²⁹⁾ 즉 그것은 이념과잉의 산물이라기보다는 이념과소의 산물인 것이다.

아무튼 박세일 식 실용론의 탈이념주의는 시장자유주의와 '작은 정부론'이 결합된 이른바 신자유주의적 성향이 대단히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자유주의'의 자율적 행위자는 지식기반사회적 인간일 것이다. 물론 그의 주장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지식기반사회의 인간형으로서의 자율적 행위자 범주에서 '실패한 개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신자유주의적인 제도화에서 행위자 자율성이 늘 간과되는 이들 존재, 비존재들은 자유로운 행위자일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제 그들은 착취의 대상도 아니며, 착취의 자격조차도 박탈된 이들도다. 하여 울리히 벡과 그의 부인 엘리자베스 벡-게른샤임(U. Beck & E. Beck-Gernsheim)이 잘 지적하고 있듯이 이들은 사회의 공동체 범주에 포섭된 내부의 최하층민(the very bottom)이 아니라 '외부'(outsider)인 것이다.³⁰⁾

비록 박세일은 실용과 선진화 담론에 의한 비전적 실체를 '공동체 자유주의'라는, 얼핏 공화주의적 함의를 담은 표현으로 이야기하는 듯이 보이지만, 도덕공동체 외부의 존재, 곧 비존재는 바로 '외부'이기 때문에 공동체적 자유주의를 구성하는 시민적 덕성으로 무장한 지식기반사회적 개인이 인지하는 공동체의 범주에서 제외된 대상, 곧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체 범주의 연장선에서 '민족'이라는 '상상의 범주적 주체'(imagined categorial subject)가 설정된다. 민주화 시대의 정부들을 동요하게 했던 사회적 배제의 문제를 보다 단호하게 간과하는 가운데, 지구화 시대의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 비성찰적이고 즉자적으로 유희하게 하는 민족주의는 저 외부에 대한 망각, 그 야만성에 대한 사회적-감수성을 무력화시킨다. 2004년 칸느 영화제에서 14세 소년에게 남우주연상을 선사한 영화 <아무도 모른다>(Nobody Knows,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 유아 야기라 주연)는 지구화시대의 메트로폴리탄인 도쿄에서 차상위계층의 거의 고아인 네 명의 아이들이 지역의 일상 속에 지속적으로 사람들과 마주침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모르는 존재, 곧 비존재로서 살아가고 있는 현상을 사실적 은유처럼 묘사하고 있는데, 바로 그러한 '비존재인 존재'는 '제거'의 대상이 아니고 일상 속에 우리와 함께 있지만 사회적 관계망에서 다양한 메커니즘을 통해 은폐된 이들을 의미하며, 사회적 배제는 바로 이러한 은폐의 메커니즘을 문제제기하면서 발전한 개념인 것이다.

결국 MB와 박세일을 코드화함으로써 그려지는 MB 정부의 행보에 대한 추측은 지난 민주화 시대의 정부들을 동요하게 했던 사회적 배제에 대한 견제의 장치들을 제거하면서 그려지는 사회상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 자본주의에 의해 상품화된 '달콤한 민족주의'는 즐기면서 배제의 제도를 망각하게 하고, 개체화된 일상에서 유실된 공동체를 가상체험하게 하여 공동체 감수성을

28) 윤창현, 「외환 위기 이후 국내 경제의 문제점과 향후 대응 전략. 위기를 넘어 선진화로」, 『한국경영학회 2007년도 추계학술발표 논문집』(2007) 참조

29) 송호근, 『한국, 어떤 미래를 선택할 것인가』, 279쪽.

30) 이진복, 「지식기반경제의 사회적 배제에 대한 일 고찰」, 129쪽.

강화하면서도 배제된 이들에 대한 시민사회의 부채감을 경감시키는 이중의 부정적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앞에서 길게 논한 바 지식기반사회적으로 재구조화되는 사회 현실에서 일정하게 부정적인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는 더욱 문제적일 수 있는 민족주의는 향유의 대상을 넘어서 성찰의 대상으로 사유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뒤에서 논할 5.18과 같은 국가화/민족화된 기억의 의례에서 민족주의가 작동하는 양식을 비판적으로 조명하고 재구성하는 작업은 지식기반사회로의 제도화가 보다 본격적으로 전개될 가능성 앞에 놓인 우리에게 당면한 주요 과제의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3

지난 5월 18일, 광주민주항쟁 28주년 행사의 대통령 기념사(記念辭)는 “우리 모두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되살려 ‘선진화’의 새 역사를 써 나갑니다”라는 말로 끝을 맺고 있다. 이와 같이 청유형 어미(모두 ‘나갑시다’로 끝난다)의 문장이 연설문 제목을 포함해서 4번 나오는데, 그 모두에서 새 역사의 비전은 ‘선진화’로 수렴되고 있다. ‘선진화’라는 단어는 이 네 번을 포함해서 모두 9번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연설문에서 사용된 명사 가운데 빈도수가 가장 많은 단어의 하나다.³¹⁾ 요컨대 이제 ‘5.18’은 국민통합의 담론으로 자리잡아야 하며, 그것을 도구삼아 ‘선진화’를 이루자는 주장이다.

이 기념사는 네 개의 단락으로 나뉘는데, 첫째 단락은 민주화 시대까지의 5.18의 의의에 관한 ‘과거의 차원’을 이야기하고, 둘째 단락은 선진화를 향한 미래적 전망을, 셋째 단락은 선진화를 위한 ‘현재’의 실천으로서 한·미 FTA의 필요성을, 그리고 마지막 단락은 용어리진 한을 유보하고 화해를 통해 선진화의 길로 나아가자는 내용을 다룬다. 여기서 첫째 단락은 ‘국민’과 ‘광주 시민과 전남 도민’을 향하여 말하고, 둘째와 셋째 단락은 ‘국민’에게, 그리고 넷째 단락은 ‘광주 시민과 전남 도민’을 향하여 말을 건넨다.

<표 1> 광주민주항쟁 제28주년 기념식의 대통령 기념사

	의의의 시점	역사의 주체
첫째 단락	과거	‘국민’과 ‘광주 시민/전남 도민’
둘째 단락	미래	국민
셋째 단락	현재	국민
넷째 단락		광주 시민/전남 도민

이와 같이 선진화를 위한 행위자 범주는 ‘국민’ 일반과 ‘광주 시민/전남 도민’, 이렇게 둘로 나뉜다. 이와 같은 행위자의 범주화는 5.18에 관한 집합기억(collective memory)을 현재화하는 데 유용하다. 이렇게

31) ‘민주’라는 용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는데, 이중 ‘민주화’ 7회, ‘민주주의’가 3회, ‘민주항쟁’과 ‘민주영령’이 각각 1회, 그리하여 총 12회 사용되었다. 다음은 ‘변화’인데, 총 11회 사용되었으며, ‘광주’는 10회 사용되었다. 그리고 ‘국민’도 7회 사용되었다.

범주화함으로써 이들이 살고 있는 현재의 세상은 단순화되어 해석되고, 그런 단순화된 세상 속으로 현재화된 집합기억 또한 단순하고 도식적으로 재현된다. 그리하여 단순 명쾌하게 현재화한 집합기억은 범주화된 행위자들을 주체화하는 데 용이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국민’은 5.18의 기억을 통해 ‘민주화’를 추동한 존재이며, ‘선진화’를 향해 나아갈 미래 역사의 주체로 규정된다. 이때 ‘국민’이 ‘민족’과 교환 가능한 존재임은 말할 것도 없다. 미래적 비전을 ‘선진화’로 해석한 것은 MB식의 각색이지만, 이와 같이 5.18을 통한 사회건설의 주역으로 국민/민족을 묘사하는 것은 상투적이다. 이러한 상투성, 곧 낯설지 않음은, MB식 각색을 대중이 공유하는 것을 손쉽게 해준다.

한편 ‘광주 시민/전남 도민’은 이 연설문에서 역사의 희생자로 재현된다. 원 사건에서도 희생자였고, 이후의 역사 과정에서도 차별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들이 역사 건설의 주역임이 자명한 것은 아니다. 국민과 함께 역사건설의 주역으로 호명하는 네 번째 단락은, 이들의 역사 주체화에 단서를 붙인다. 자신의 ‘뻣뻣한 한과 용어리’를 스스로 봉합해야 하는 것이다. 즉 이 기념사의 논리에 따르면 화해는 해원(解冤)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오로지 피해자의 자기 성찰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한데 이것 역시 5.18에 관한 집합기억의 요소에서 낯설지 않다. 시민사회는 이 불행한 역사의 사건에 대한 비용을 충분히 치루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그것이 봉합되고 해소되기를 바랐던 것이다. MB의 어법은 그러한 시민사회의 욕망을 기억의 요소로 활용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는, ‘국민과 광주 시민’의 이분법을 통해 5.18의 기억을 재현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MB와 다르지 않다. 그러나 여기서 ‘광주 시민’은 자기 초월의 모범을 보여준 존재이며, 국민은 이러한 실천을 범례 삼아야 역사의 올바른 주체가 될 수 있다. 즉 ‘광주 시민이 희생자’라는 범주적 이해에 있어서는 양자가 동일하나, 여기서는 희생자이기 때문에 그들이야말로 역사의 진정한 주체일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따라서 ‘광주 시민’은 역사 건설 행위자의 범례적 주체가 되며, 국민은 그러한 범례를 준거 삼음으로써만 진정한 역사의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것, 그리하여 역사 변혁의 주체가 되는 하위, 조건부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참여정부의 이러한 해석은 5.18이 공식적인 국가의례로 지정된 이후의 기념사에서 제기된 것이지만, 그 이전의 기억, 저항기억으로 유통되던 시기의 기억 양식과, 적어도 이 점에서는 별반 차이가 없다. 저항의 집합기억 속에 ‘고난’은 역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존재론적 특권처럼 신화화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은 기독교적 구원론과 담론상 유사한 구조를 갖는다. 특정한 사건이 성화(聖化)되어 교환 불가능한 ‘단 하나’의 고난 사건이 된다.³²⁾ 여기서 이 고난 사건 자체는 승리의 기억이 아니다. 그럼에도 기억의 정치는 승리로서 의미를 재전유함으로써 구원론적 서사를 갖추게 된다. 즉 ‘집단 학습’을 거치면서 숨겨진 진실을 알게 되고 나아가 저 희생자들의 불의한 죽음에 무지했던 것에 대한 자기 충격, 그리고 자신이 살아있음에 대한 수치심과 죄책고백을 경유해서, 일종의 인식론적 구원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하여 그 교환 불가능한 원초적 고난 사건, 그리고 그로 인한 죽임당함은 산 자들의 내면에 도사린 죽음 같은 현실을 내파하는 구원론적 승리의 요소였다는 것이다.³³⁾ 바로 이러한 구원 체험을 통해,

32) 1980년대의 거의 모든 학생운동 시위에서 ‘광주를 기억하라’는 빠짐없이 등장하는 구호였다. 즉 5.18은 1980년대의 모든 저항의 ‘원초적 사건’이다. 고동현, 「저항의 기억과 의례, 정체성 형성—1980년대 학생운동 연구」, 『상징에서 동원으로—1980년대 민주화운동의 문화적 동학』 (이학사, 2007), 118~119쪽 참조

많은 이들이 독재에 항거하고 제국주의에 저항하는 투쟁의 대열에 나서게 되었다는, 구원담론의 결론 부 같은 형식으로 저항기억이 마무리된다.

이렇게 참여정부의 5.18 서사나 저항기억으로서의 5.18 서사는 '원 사건으로서의 5.18'을 성화된 기억으로 고착화시킴으로써, 기억공동체로서의 국민 내지는 민족의 범주가 5.18의 정신으로 결속되어야 하는 핵심적인 역사적 실체로 규정된다. 이것은 국민/민족으로 범주화된 공동체의 결속이 5.18에 관한 신화적 정체성에 기초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MB는 '광주 시민과 전남 도민'의 고난을 경제적 고통으로 현재화한다. "저는 늘 호남에 두 배 더 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호남이 잘 사는 것이 낡은 시대의 차별과 지역갈등을 근원적으로 없애는 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표현 속에는 지금까지 겪어왔고 현재도 겪고 있는 배제의 체험이 훗날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될 때 다 해결된다는 주장이고, 거기에는 당장은 배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는 점이 전제되어 있다. 그리하여 지금은 경제적 생산성 향상을 위해 지난 역사의 용어리를 풀고 '국민'이 하나 되어 나아가 선진화의 대열에 동참하자는 것이다. 그렇게 될 때 이 하부의 이질적 기억공동체인 광주 시민과 전남 도민은 선진화를 위한 국민의 진정한 일원이 된다는 논리다. 물론 이 선진화를 위한 기억 동맹의 성격은 경제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MB의 기념사에서 11회나 사용하고 있는 '변화'라는 용어는 필경, 산업화 시대의 권위주의적 경제공동체나 민주화 시대의 개혁공동체와는 다른, 선진화 시대의 지식기반사회론적인 경제공동체로 기억동맹이 구성되어야 한다는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셋째 단락에서 그는 국민이 당면한 현재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한·미 FTA 비준동의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전 지구적인 변화의 물결에 적응하는 변화, 곧 신자유주의적 지식기반사회로의 재무장화, 그것이 바로 '변화'라는 용어에 함축된 의미이다.

정리하자면 저항기억으로서의 5.18 담론이나 참여정부의 5.18 담론이 과거의 신화화된 사건에 준거한 '도덕공동체'로서 국민/민족을 호명하고 있다면, MB와 실용정부의 5.18담론은 미래 지향적인 '경제공동체'로서 국민/민족의 결속을 주장한다. 전자는 과거적 차원(도덕적 요소)이, 그리고 후자는 미래적 비전(경제적 요소)이 각각 기억공동체를 형성하는 주된 동력이 되고 있는데, 공히 이 기억공동체의 중심 단위는 국민/민족이라는 범주이다. 그런데 이러한 5.18 기억 동맹의 주요 범주로 국민/민족을 호명하는 일이 민주화를 위해서 매우 큰 기여를 하였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으며, 또 향후 지구화를 대처하는 주된 단위일 수 있다는 점 또한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는 않다. 왜냐하면 국민/민족 내부의 차이를 인식하는 데 이러한 기억공동체는 언제나 장애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그것은 상상중이 말하는 바, 국민/민족과 그 국경이 강조될 때마다 내적 국경, 즉 심상(心像)적 국경들은 더 많이 혹은 더 강력하게 생성되기 때문이다.³³⁾ 차이들에 대한 감각이 둔화되고, 공통성을 강조하는 담론들이 활발해지면, 내부의 이질적인 것들에 대한 규율의 체계가 작동하고, 또한 여기서 배제가 실행되는 것이다. 소수성 가운데 많은 부분이 배제의 대상이 될 것인데, 여기서는 앞에서 길게 논한 것처럼 참여정부나 실용정부 모두 지식기반사회적 변화를 지향하고 있고, 같은 시기에 사회적 배제의 문제가 급격하게 심화되었다는 점에서 내적 국경의 폭력성에 관해 좀 더 논하고자 한다. 하지만 그 얘기를 하기 전에 하나

33) 같은 글, 122~126쪽 참조

34) 강상중, 「내적 국경과 래디컬 테모크라시」, 『오리엔탈리즘을 넘어서』 (이산, 2000) 참조

더 언급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기념행사의 사회적 효과에 관한 평가의 문제이다.

5.18 의례의 국가화가 시작된 1997년 이후 올해까지 대통령은 참석한 것은 7회이고, 총리가 참석한 것은 5회이다. 즉 국가수반이나 그 대행자인 총리가 불참한 5.18행사는 한 차례도 없었다. 그만큼 5.18은 국가의례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또 각 정당대표를 포함한 국회의원 다수, 그리고 정부각료 등 참석자의 면면으로만 보면 국가의례 중 최고의 위상을 갖는 행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국가의례가 시작된 이후 기념식의 TV 생중계가 계속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 행사의 국민적 위상 또한 그러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 우선 국가 의례가 된 이후 참배객의 수는 급속도로 하락하고 있고, 생중계되는 식을 보느라고 TV에 눈길을 주는 이 또한 별로 많지 않다. 대통령의 기념사를 듣거나 읽는 이도 거의 없다. 마치 교황의 성탄 메시지 같다. 즉 5.18 기념행사는 도덕감정을 불러일으키고 거기에서 충일된 민족의식으로 무장하여 새 역사의 일꾼이 되겠노라고 결심하는 장면은 일종의 코미디에서나 일을 범하다. 즉 의전으로서의 5.18 기념행사는 살아있지만, 대중의례로서의 5.18은 거의 죽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5.18은 점점 대중의 주목을 받지 못함에도 왜 계속 '강한 의전성(儀典性)'을 갖는 것일까? 더 이상 국가폭력에 대한 도덕적이고 감정적인 저항자원이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5.18은 어떻게 소비되는 것일까? 또 국가의 공식기억을 통해 생산적 가치로 재구성된다고 해도, 가령 MB 정부가 선진화를 위한 원동력으로 5.18을 해석한다고 해도, 대중이 그것에 영향을 받아 선진화를 위한 국민의식으로 무장한 주체로 변할 만큼의 대중적 호소력도 없다. 그럼에도 왜 강력한 의전으로 계속되는 것일까?

앞서 말했던 것처럼 민족주의가 오늘날 활성화되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카니발적 민족주의' 형식이다. 가령 한·일 축구경기는, 스포츠로서의 축구를 좋아하든 아니든, 양국의 대중으로 하여금 카니발적으로 축구를 소비하게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양국 대중은 국민으로 결속하게 한다. 지난 월드컵 당시 경기마다 붉은색 셔츠를 입은 사람들의 물결이 전국을 덮어버린 것처럼, 사람들은 적어도 그 순간만은 하나로 뭉치고 놀라운 활력을 표출했다. 핏발을 올리고 단식을 하고 삭발을 하며 나아가 혈서를 쓰지 않아도, 다수가 즐겁게 유희를 벌이면서도 민족주의는 열기 넘치는 축제처럼 소비된다. 그러나 문제는 카니발적 민족주의는 경기가 끝나면서 급속도로 냉각되고, 또 그 자체로 경기를 넘어서 의미화되지도 않는다. 단지 즐기면서 결속하는 열정만 불타오를 뿐이다. 그런데 실은 그렇지 않다. 사람들은 경기를 관람하면서 어떤 민족주의를 의식하게 되며 또 실행에 옮기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사람들 내면에 이미 민족주의를 해석하는 의미틀(프레임, frames)이 조직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³⁵⁾ 그리고 5.18은 이러한 의미틀의 핵심에 자리잡고 있다. 그런 점에서 5.18 의례의 국가화는 국민적 통합을 위해 기억의 헤게모니를 점유하려는 권력의 욕망과 분리할 수 없이 얽혀 있다. 그래서 각 정권마다 기념사 등을 통해 5.18의 공식기억의 구성에 개입하려 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바로, 국가의례로서의 5.18은 사건으로서의 5.18을 해석하는 표준적 양식이 함축되어 있는 장이며, 이는 나아가 국민의 정체성과 실천에 관한 해석이 자리잡고 있는 주된 '의미틀의 장'(field of frames)인 것이다.

35) 여기서 '의미틀'이라는 용어는 사람들의 사회적 행위를 조직하는 일종의 의미체계 혹은 해석체계라고 할 수 있다. Snow, D.A. et. al. "Frame Alignment Processes, Micromobilization and Movement Particip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1(1986) 참조

그런데 이러한 민족주의적 의미들의 장으로서의 5.18은 내부의 차이를 간과하게 하는 생각의 장치로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여러 연구들에서 이미 지적된 것처럼, 1980년 5월 광주에서, 대학생이나 시민계층이 아니라, 노동자, 빈민, 무직자, 고등학생 등이 사건의 전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들 후자의 행위자들은 일상적인 질서가 잘 작동하는 공간에서는 공적인 발언권을 박탈당한 사람들이라는 점이다. 그들은 대개 아직 국민이 아니거나, 국민의 자격을 박탈당했거나 혹은 그러한 심각한 위협 아래 놓인 자들이다. 시민이 아니라, 이들이 사건 전개의 추동자적 역할을 하었다고 할 때, 과연 1980년 5월 광주의 상황에서 시민정신의 모범을 찾아내는 식의 방식은 얼마나 타당한가. 국민 일반의 범주 속에 아무런 갈등 없이 그들은 통합될 수 있는가? 실제로 1980년 광주에서 실재했던 저항세력 내부의 갈등 중 적어도 상당부분은 시민적 주체와 비시민적 주체 간의 성향의 차이와 관련되어 있었다.³⁶⁾

그런데 분명한 것은 5.18 담론에서 이 내적인 차등성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필경 그것은 감추어진 이야기로서 5.18 담론의 주변부를 떠돌고 있을 것이다. 기억의 메커니즘은 이들 주변부를 배회하는 기억의 편린들을 공적인 것에서 제거했다. 물론 이때 제거는 색출하여 격리시키는, 권위주의 체제 특유의 '제거의 정치'(politics of elimination)와는 다르다. 대중담론에서 기억의 삭제는 대개 '망각'에서 온다. 망각은 격리시킴으로 기억의 권역에서 사라진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잊어버림의 정치'(politics of forgetting)라고 하는 게 더 타당하다.

'잊어버림의 정치'라는 개념은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관한 연구에서 제기된 '배제의 메커니즘'을 지칭하면서 사용한 일종의 사회학적 레토릭이다.³⁷⁾ 요컨대 이것은 지구화의 공습을 받은 체제가 배제를 작동하는 양식을 설명하는 개념인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배제는 배제된 대상의 언어를 앗아간다. 그들은 생물학적 장애인은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장애가 발생한 존재인 경우가 많다. 일종의 사회적 실어증이다. 언어 장애가 있음으로, 자기를 적절히 표현하는 능력을 상실했다. 자기 PR의 시대에 자기의 부재를 체험하는 존재인 것이다. 잊어버림의 정치가 말하는 사회적 배제는 이렇게 사회적으로 배제되고, 동료집단에서 제거되며, 심지어 때로 범죄적이거나 폭력적으로 자기가 구성된 존재다.

5.18의 삭제된 기억, 그 잊어버림의 정치와, 오늘 우리 시대, 지식기반사회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잊혀진 이들에 관한 배제의 정치는 서로 유사성을 갖는다. 그리고 이들 배제의 대상은 내적국경들 외부로 밀려난 존재들, 결과적으로 국민 혹은 민족의 결속 밖으로 내몰린 존재다. 그러므로 5.18에 관한 대안적인 기억의 정치는 이 정전화된 담론을 해체하고, 그곳에서 다양한 차이를, 특히 은폐되고 배제된 차이의 요소를 복원하는 데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우리 사회의 잊어버림의 존재를 발견하려는, 그들의 유실된 언어를 찾는 작업을 동반해야 할 것이다.

36) 이종범, 「5.18항쟁」 증언에 나타난 '기층민중'의 경험과 생활, 『한국근현대사연구』 29(2004 여름), 210쪽.

37) 박배균 정진화, 「세계화와 '잊어버림'의 정치—안산시 원곡동의 외국인 노동자 거주지역에 대한 연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0/4(2004) 참조.

‘신보수정권’ 앞에서, ‘급진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본 광주 5·18

조희연
(성공회대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연구소 소장)

<목 차>

1. 광주사건, 광주문제, 광주정신—시작하면서
2. 급진민주주의와 ‘민주주의의 사회화’
3. ‘순수폭력’으로서의 국가와 ‘순수정치’로서의 광주교문
4. 지배의 기획과 지식인의 상상을 뛰어넘는 저항적 주체성과 광주사건의 민중
5. 광주문제의 추이와 광주정신—광주문제의 제도적 해결과 제도화의 이중성
 - 1) 광주사건 이후 광주문제의 억압과 ‘혁명적 급진화’의 동력으로서의 광주정신
 - 2) 87년 광주문제의 ‘지역주의적 정치화’와 제도화의 이중성
 - 3) 민주개혁적 정치와 신자유주의적 경제의 결합 속에서의 광주
6. 신자유주의 불평등·신보수정권 시대의 광주 5·18—새로운 급진민주주의적 에토스로서의 광주 5·18
7. 요약과 맺음말

1. 광주사건, 광주문제, 광주정신—시작하면서

80년 광주라는 특정한 역사적 시공간에서 ‘광주사건’은 발생하였다. 광주사건은 5월 18일 신군부쿠데타가 시행한 비상계엄으로부터 시작하여 27일 광주사건의 최후저항자들이 진압됨으로써 종결된 사건이다. 이 광주사건은 광주 5·18문제와 광주 5·18정신을 남겼다. 이후 이 광주 518문제와 광주 518정신은 한국민주주의의 진보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여기서 광주문제는 광주사건의 진상규명이라든지 광주피해자들의 명예보상과 배상 등 광주항쟁 이후 한국사회가 해결해야 할 정치적 의제가 된 것을 의

미하며 이후 한국정치는 이 문제로 씨름하였다. 광주 5·18정신은 광주사건에서 드러난 광주의 주체들이 담지하고 있는 지향과 정신을 의미하며 이는 다양한 타자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되면서 전승되는 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광주사건의 전개과정은, 1980년 '서울의 봄'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되어가고 있었던 학생들의 민주화투쟁과 노동자들의 생존권투쟁을 진압하고 국가권력을 장악하기 위하여 신군부세력은 5월 18일 0시를 기해 전국에 비상계엄을 실시하는 것에서 발단된다. 광주 사건은 10일간의 긴 시간을 거쳐 27일 새벽 종결된다. 이 광주사건은 광주에 계엄군이 투입되고 민중들의 낮은 수준의 저항이 시작되는 초기(18-29일의 시기)와, 신군부세력의 폭력성이 민중의 저항에 대항하여 준전시적인 학살폭력으로 발전되어 갔고 이에 대응하는 민중들의 자위투쟁이 전개되어 계엄군이 광주 외곽으로 퇴각하게 되는 중기(5월 20일부터 21일까지의 시기), 계엄군이 퇴각한 후 일종의 '해방광주'가 실현된 1주일간의 후기(21-27일)로 나눌 수 있겠다¹⁾. 이러한 광주사건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발견하게 된다. 거기에는 독재를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강렬한 지향과 정신이 있었다. 그 강렬한 정신은 국가의 노골적인 폭력에 대면했고, 여기서 자위적 무장투쟁을 했다. 그리고 국가의 폭력적 힘을 극복하고 7일 간의 '해방광주'를 실현했다. 이후 수백명의 광주시민들은 죽었지만 그 정신은 이후 민주화의 근본적인 저항에 토스로서 작용했다.....

광주사건이 종결된 이후, 광주문제는 광주의 피해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광주정신을 따르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과 집단, 조직들에 의해서 담지되고 국가에 대해서 그 해결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제기되었다. 그러나 정치의 장에서는 특정한 정치적 주체들에 의해 담지되고 이를 통해서 진전되고 표현되었다. 한편 광주사건 이후 광주정신은 모두에게 그 해석이 열려진 정신으로서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되고 전유(專有)되었다. 그런데 이 광주 5·18정신은 시기에 따라서 특정한 방식으로 전승되고 표현되었다.

이 글은 '광주사건'의 의미를 급진민주주의적 관점에서 재해석해보고 나아가 '광주문제'가 다루어지는 시기에 따라 '광주정신'이 상이하게 해석되고 전승되는 것을 밝히면서 현단계 광주 5·18정신의 올바른 계승이라는 과제를 다시 생각해보고자 한다.

통상 법적·제도적 측면에서 80년 광주사건은 '광주 민주화운동'이라고 표현되며 주체의 특성에 따라 광주민중항쟁으로 표현된다. 전자는 광주사건이 지향하고 있었던 '민주주의'라는 지향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후자는 광주사건의 주체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광주 민주화운동이라는 표현에서도 드러나듯이 광주항쟁은 말 그대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운동이었다. 87년 6월 민주항쟁에서 정점에 이른 한국의 민주주의운동은 광주 5·18민중항쟁에서 중요한 정신적·도덕적 영감을 받고 있었고, 지난 20년 동안의 한국사회도 민주주의를 향한 고투과정에 놓여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필자는 광주 5·18의 핵심적이 지향으로서의 민주주의, 광주항쟁의 주체로서의 민중이라는 두가지를 출발점으로 하여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민주주의가 하나가 아니고 다양한 관점의 민주주의가 존재한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지난 20년간 미국식의 '자유민주주의'나 선거민주주의, 절차적 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사고했다면 한국사회는 상대적으로 이를 성공적으로 성취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어떤 민주주의냐에 따라 한국민주주의는 달리 해석될 수 있다. 필자는 광주 5·18의 핵심어를 민주주

의라고 할 때 28년이 지난 지금 광주 5·18정신의 현재적 계승은 바로 이 '민주주의론의 심화'에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필자는 필자 나름의 '급진민주주의론'을 설정하고 그에 비추어 광주의 현재적 성찰의 문제에 접근해보고자 한다.

필자의 관점에서 볼 때, 한국사회는 지난 20년 동안 이른바 '자유민주주의적 개혁단계를' 성공적으로 거치면서 새로운 개혁단계로 이행하는 병목지점에 직면했고, 그 병목지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신보수정권의 출현'이라고 하는 우회로도 들어섰다. 이는 79년 박정희의 죽음 이후 한국사회가 곧바로 민주화 이행의 경로로 가지 못하고 신군부정권이라고 하는 우회로도 들어섰던 것과 유사하다. 지난 20여년 동안 광주민중항쟁의 정신은 이러한 민주주의의 진전에 있어서 중요한 정신적 에토스였었다. 이제 새로운 병목지점을 통과하여 한국사회가 한단계 높은 단계로 가기 위해서 그리고 그 과정에서 광주 5·18정신이 지속적인 정신적 에토스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심화되어야 하고 그러한 새로운 인식의 근거들이 광주 5·18항쟁의 정신과 연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997년, 2002년 정권 교체시에도 우리는 민주주의의 의미를 물었던 적이 있다. '과잉민주주의'가 운위되는 시점에 과연 민주주의는 여전히 가슴설레게 하는 급진적 언어일 수 있는가. 우리는 '그렇다'고 말하고 싶다. 단지 '그렇다'는 응답은 우리가 민주주의의 함의를 -지금까지와는 다른 지평으로- 급진적으로 확장될 때 비로서 의미를 갖는다고 우리는 믿는다. 이 글에서 그런 점에서 '민주주의의 급진적 확장' 혹은 '급진민주주의'의 시각에서 광주 5·18항쟁을 검토하고 그 속에서 급진적 민주주의의 지향을 발견하고 그를 통해서 향후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서의 광주정신의 계승의 필요성을 논하고자 한다.

2. 급진민주주의와 '민주주의의 사회화'

급진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잠재적인 '평등의 원리'-1인 1표주의에서 표현되는 바와 같은-를 급진적으로 확장함으로써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차원에서의 배제와 불평등, 차별을 극복하고자 하는 지향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민의 자기통치(self-rule of people)'라는 정신 위에 존립하는 민주주의는 하나의 주어진 정책(policy)의 구성원들이 자신이 속한 사회의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동등한 지위에서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출발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정치적 평등과 평등한 참여의 사상 위에서 있다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가 근대 이후의 '표준적인' 정치체제 원칙으로 정착한 이후, 모든 국가는 민주주의를 불가피하게 수용하였다. 그러나 그 민주주의는 기존의 지배질서와 타협적으로 공존·결합하는 형태로 뿌리내릴 수 있었다. 그 결과 평등과 참여의 원리에 기초한 민주주의가 현실적으로는 다양한 형태와 성격을 갖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인종적 불평등이나 차별과 공존하면서 존재한다.

많은 경우 사회 속에 존재하는 불평등과 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급진적 사상들과 민주주의를 별개의 것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경제적 불평등을 척결하고자 하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와 동일한 것

은 아니지만, 민주주의는 스스로의 급진적 확장을 통해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추구했던 사회경제적 평등을 민주주의의 과정으로 실현하고자 하였다. 민주주의가 구현하는 '1인 1표주의'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시장과 자본주의 '1원 1표주의'와 같등하면서 그것을 인간화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어떤 의미에서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많은 지향들이 실현될 수 있었다²⁾. 또한 민주주의는 사회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에 저항하는 여성주의, 반인종주의 등의 사상과도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민주주의의 급진적 확장 속에서 다양한 사회적 해방사상이 추구했던 '사회 내의 불평등과 차별'을 극복해가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 서구 급진주의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볼 때-제프 일리(2008)가 지적한 것처럼-19세기 서구에서의 급진적 민주주의 혹은 사회적 민주주의(social democracy)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무정부주의, 급진적 공화주의 등과 같은 급진적 사상들을 포함하는 복합적 급진사상으로 존재하였다.

민주주의 자체의 내재적인 논리에서 볼 때에도, 경제적 불평등이 극단화될 경우, 혹은 사회적 차별이 극단화될 경우 정치적인 평등과 참여가 불가능하게 되므로, 민주주의는 그 자체로 경제적·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의 개혁의 동력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급진민주주의적 관점(조희연·김동춘 편, 2008; 조희연 편, 2008)에서 볼 때³⁾, 현실의 민주주의는 특정한 권력관계 속에서 존재한다. 이 권력관계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경제적·사회적 권력을 특정한 집단이 독점하는 식으로 권력의 불평등과 위계가 존재하는 관계를 의미한다. 독재는 물론이고 민주주의 역시 특정한 정치적 독점과 사회적·경제적 독점의 결합체로 존재한다. 정치적 권력을 특정한 집단이나 개인, 세력이 독점하는 데에 정치적 독점이, 경제적 자원이나 권력을 특정한 집단이나 개인, 세력이 독점하는데에 경제적 독점이 존재한다. 나아가 다양한 사회적 권력—위신이나 존경, 네트워크, 정체성, 편견 등—을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이 지배적으로 통제하거나 혹은 사회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사회적 분할선(예컨대 인종적 분할선)을 경계로 하여 지배적 집단이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을 불평등하게 보유할 때 사회적 독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권력의 특정한 독점 복합체로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형식적으로는 민주주의의 외양을 가지고 있지만 모든 현실의 정치체제는 권력독점의 양상에 따라서 그 실질적 구성에서 차이를 갖는다. 그런 점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해가는 과정은 민주주의의 실질적 구성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 때 그 구성은 정치적 독점과 사회적·경제적 독점이 어떻게 결합되어 존재하느냐에 따라 규정된다.

독재에서 민주주의로의 전환, 형식적 민주주의로 이행한 이후 민주주의의 변화과정은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제층위에서 다층적인 탈독점화가 이루어지는 고투(苦鬪)와 갈등의 과정이 된다. 이러한 갈등은 독재에서 민주주의로 이행할 때 격렬하게 드러난다. 독재는 보다 극단적인 형태로 그리고 가시적인 형태로 이러한 독점이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이다. 민주화 과정은 이것의 해체·재편·변형 과정을 겪는 것이다. 민주주의 이행 과정은 독재라는 정치적 형식이 민주주의라는 정치적 형식으로 변화하는 과정이면서 동시에 정치권력의 독점구조의 변형 및 독재하에서 고착화된 사회적·경제적 독점구조의 변형과 재편을 둘러싼 갈등 과정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러한 탈독점화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가하는 데에 차이가 있다.

이런 점에서 독재에서 민주주의로의 이행,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의 변화과정은 이러한 민주주의

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탈독점화의 한계(limit)를 둘러싼 각축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사회의 민주주의는 바로 이러한 한계에서 차이를 보인다. 민주주의 이행 과정에서 민주주의가 확립될 때, 그 민주주의가 어느 지점에서 한계를 갖느냐 하는 것은 각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 정도에 따라 다르다. 내부의 사회적 분할선을 중심으로 하는 경계가 '권리의 경계'가 되는 경우도 있으며, 독재에서 민주주의로 이행했지만 그것이 지배적 인종 내부의 권력이동으로 종결되는 경우도 있다. 미국 민주주의도 1960년대 흑인 인권운동이 촉발되기 전까지는 '안정적인' 백인만의 민주주의였다. 흑인은 미국 민주주의의 '외부'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많은 경우, 민주주의 이행 및 공고화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경제적 독점이나 사회적 독점질서와 충돌하지 않고 존재할 수도 있다.

급진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민주주의는 하나의 정치체도가 아니라 사회적·계급적 각축과정을 통해서 새롭게 구성되는 역사적·현재적 구성물이다"(조희연 편, 2008: 20)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각축은 바로 이러한 탈독점화의 한계를 둘러싼 갈등이라고 할 수 있다. 급진민주주의는 바로 그러한 타협적 공존의 현실민주주의를 그 원리에 비추어 사회적·계급적 투쟁을 통하여⁴⁾ 급진적으로 확장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부단한 재구성을 지향한다.

현실의 민주주의는 언제나 특정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 권력의 독점에 의해서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경계가 확장되지 않을 경우, 민주주의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 현실의 민주주의는 스스로를 급진적으로 자기확장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기존의 독점적 세력에 저항과 응전에 의하여 민주주의는 공동화(空洞化)되게 되며 지배적 질서의 '민주주의적 외피'로 전락하게 된다. 예컨대 민주화의 과정에서 부활한 민주주의적 정치가 새로운 사회경제적 하위주체들(예컨대 빈곤여성)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고 그것을 새로운 시장적 방식으로 주변화시킬 수도 있다. 쉽게 이야기해서 독재가 없어지고 민주주의가 되었지만 실상은 주기적으로 자신을 소외시킬 '대표자'를 선택하는 체제가 들어설 수도 있다. 과거 독재적 독점구조는 해체되었지만 이제 민주주의적 외양을 띤, 시장을 통한 더욱 가혹한 체제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 많은 아시아 나라에서 이러한 비판적 목소리가 들려온다. 일종의 민주주의적 독점 혹은 시장적 독점이 나타나는 것이다. 한국에서도 직선제도 회복되었지만 양극화나 소득분배 양극화, 비정규직화, 대학생들의 더욱 높은 실업률 등으로 상징되는 새로운 현실에 직면하게 되는 것도 이러한 민주주의의 공동화의 예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어떤 의미에서 민주주의는 부단히 스스로를 급진적으로 확장하지 않는다면 부단히 공동화되는 체제라고 말할 수도 있다.

이러한 공동화에 대립하는 지향을 '민주주의의 사회화'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이는 민주주의의 주체인 사회구성원(그들로 이루어지는 사회)들의 요구와 정치의 괴리가 극복되면서-사회경제적 하위주체들이 수용가능한 수준으로-다층적인 탈독점화와 평등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독재의 극복과 새로운 민주주의의 안정화는 바로 이러한 민주주의의 사회화가 얼마나 진전되느냐에 달려 있다. 이런 점에서 '민주주의 사회화 없이 민주주의 공고화 없다'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의 사회화가 진전된다면, 정치적 탈독점화와 다원화가 진행되는 속에서 경제적·사회적 독점이 완화되고 그 과정에서 사회경제적 하위주체들이 독재하에서 보다 더 사회적·경제적 자원을 향유하고 지배적 집단의 독점적 지배로부터 더 적게 소외되는 방향으로 민주주의가 변화하게 될 것이고, 민주주의는 더욱 공고화되고 안정화될 것이다.

이러한 점을 민주주의의 '내부와 외부'라는 표현을 통해서 서술할 수 있다. 즉 급진민주주의의 관점

에서 볼 때, 현실 속의 민주주의는 언제나 그 외부를 가지고 있다. 현실이 내포하는 특정한 관념과 제도, 권력관계는 특정한 의제와 사람, 집단, 목소리, 요구와 이해를 민주주의의 내부에서 실현하는 것을 제약한다. 특별히 정치적·경제적·사회적 권력의 독점여부가 이러한 민주주의의 외부를 존재하게 한다. 급진민주주의는 바로 이러한 민주주의의 내부와 외부의 경계를 부단히 변화시킴으로써 민주주의의 외부를 내부화하는 것을 지향한다.

사실 사회 속에는 구성원들 간의 '적대성'에 기반을 다양한 '정치적인 것(the political)'⁵⁾이 존재한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다양한 정치적인 것들이 모두 민주주의 혹은 민주주의 정치의 내부에 반영되지 않는다. 민주주의의 사회화는 바로 이러한 민주주의의 외부를 내부화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물론 이 내부화과정은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특정한 권력체계, 혹은 권력의 특정한 현실적 독점과의 싸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여기서 우리는 보다 근원적인 차원에서 정치, 특히 제도적인 정치가 포괄하는 '정치적인 것'들과 새로운 민주주의 정치의 관계를 생각해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독재를 대신하는 '민주주의적 정치'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 탈독점화를 둘러싼 갈등에서 얼마나 '적대적 갈등'으로부터 '경쟁적 갈등'으로 전화할 수 있는지를 문제이다. 주지하다시피 독재와 민주주의로의 이행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의 회복과 선거민주주의의 회복이라는 제도적 변화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것은 '정치'의 회복이다. 이러한 변화의 일차적인 출발은 당연히 독재가 제도정치 공간에서 배제하거나 억압했던 '정치적인 것(the political)'의 회복이다. 과거에 비(非)정치 혹은 반(反)정치로 규정되었던 '정치적인 것'들이 민주주의적 정치공간에 회복된다. 민주주의적 정치의 확장과정은 바로 제도정치 공간에 더 많은 정치적인 것들을 '장외(場外)정치'에서 '장내정치'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민주화과정에서 회복되는 민주주의적 정치가 보다 직접적으로 사회경제적 변화와 연관되는 것은 그러한 사회경제적 변화를 구성하는 요구들이 정치의 장에 표현되고 경쟁적 갈등의 주제가 될 수 있는 것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실 정치는 '정치적인 것'들이 갈등하고 타협하는 제도화된 장이다. 민주주의의 재구성과정은 정치의 재구성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민주화과정에서 회복되는 '민주주의적 정치'가 얼마나 다양한 사회경제적 하위주체들의 요구와 이해—독재 하에서 억압되었던 '정치적인 것'들—을 정치의 공간에서 내포화될 수 있는지를 판건이다. 새로운 민주주의적 정치의 사회(다양한 사회경제적 하위주체들의 요구와 이해, 그것들이 표현하는 다양한 정치적인 것들)에 대한 개방성이다(이런 점에서 민주주의의 문제는 정치와 사회의 관계문제이다. 정치는 정치 그 자체가 아니면, 특정한 시공간에 존재하는 정치가 사회의 정치적인 것들의 얼마만큼을 내부화하는가하는 문제이다.

예컨대 민주화과정에서 빈곤의 이슈, 비정규직 이슈, 양극화의 이슈, 외국인노동자의 요구, 여성의 요구가 민주주의적 정치공간에 얼마나 반영되느냐에 따라 사회경제적 변화의 결과가 규정된다⁶⁾. 이것은 사회경제적 하위주체 혹은 사회경제적 소수자들의 '정치', 더 정확하게는 그들이 표현하는 '정치적인 것'들이 비정치나 반정치로 규정되어 배제되는가 아니면 새로운 정치적 요구로서 제도정치 내에 포섭되어 경쟁적 갈등의 주제가 되는가하는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새로운 민주주의적 정치공간이 안정화되는 것—이것이 공고화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공고화의 핵심적인 내용이다—은 민주주의적 정치에 대해서 구 기득권세력이 제약하는 정도와 사회경제적 하위주체들의 기대수준(시민사회의 활성화 수준)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민주주의적 정치의 확장 속도가 작고,

구 독점적 집단에 의해서 제약될 때, 하위주체들은 민주주의적 정치에 기대를 포기하고, '비제도적 수단'에 의한 정치'를 향하게 된다. 사실 우리가 포퓰리즘(populism) 혹은 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하는 독재 이후 출현하는 새로운 민주주의적 정치가 독재 하에서 억압되었던 다양한 사회경제적 하위주체들의 요구와 이해를 반영하지 못하게 되면서 그것이 우파 포퓰리즘이나 좌파 포퓰리즘의 형태로 동원되고 표현된다고 할 수 있다.

사회경제적 하위주체들의 요구가 민주주의적 정치 내에 표현되고 수용되는 정도—여기서 하위주체들의 대의(representation), 경제적 복지 등 보완정책 등—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⁷⁾ 소수자에 대한 정치적 배제는 그들의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차별구조와 연관이 되어 있다. 문제는 새로운 민주주의적 정치공간에서 이들의 요구와 이해가 정치적인 요구로서 다루어지는 것은 경제적·사회적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된다. '민주주의의 사회화'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민주주의적 정치가 바로 이러한 배제와 불평등, 차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내부의제화하느냐하는 것을 의미한다⁸⁾.

여기서 잠깐 급진민주주의론의 이론적 위상에 대해서 언급해보자. 이론적으로 볼 때 급진민주주의는 다양한 흐름이 있을 수 있다. 통상 급진민주주의라고 할 때 라클라우와 무페(Laclau and Mouffe)의 급진민주주의론을 연상한다(Laclau and Mouffe, 1990, 무페, 2006). 이들의 급진민주주의는 그들의 '포스트-맑스주의적 논의'와 결합되면서 계급적 적대로 환원되지 않는 다양한 사회적 적대들, 생산관계적 차원으로 확장되지 정치적·이데올로기적 차원의 자율성, 프롤레타리아 이외의 다양한 사회적 주체들의 독자적 지위 등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였다. 라클라우, 무페 식의 급진민주주의는 사회주의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어떻게 대면할 것인가하는 점, 현대 자본주의에서의 다양한 적대들과 다양한 주체들과 노동자계급적 주체들의 관계 등에 대한 중요한 문제제기를 동반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논의는 '경제적 사회구성체'를 이데올로기적 사회구성체로 전치해버리는 문제, 경제주의와 환원주의에 대한 성찰적 반성에서 더 나아가 또다른 '담화 환원주의'적 경향, 총체화에 대한 비판에서 탈총체화의 경향을 드러내는 것, 다양한 사회적 주체의 인정에서 주체성의 구조적 근거를 방기한 점, 필연성에 대한 비판에서 우연성의 논리로의 환원하는 등의 새로운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된다(엘런 메익신즈 우드, 1993: 제 5장, 1985: 4장 11절). 우리들은 굳이 이야기하자면 라클라우·무페의 급진민주주의를 '자유주의적 급진민주주의'로 규정한다면 일종의 '좌파 급진민주주의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급진민주주의론은 한국적이면서 일반성을 갖는 것을 지향한다. 이 말은 우리가 직면하는 한국민주주의의 현실을 기초로 일반적 이론화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불완전하지만, 여기서 시도하는 바와 같이 '독점'이라고 하는 개념과 '민주주의의 사회화'라고 하는 지향을 중심으로 서구적 논의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논의를 시도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론적 측면에서 볼 때, 이 한국적 급진민주주의론은 기존의 맑스주의나 사회주의론의 입장에서 보면, 자유주의론의 합리적 핵심을 급진적으로 전유하는 것이며, '구조주의적' 맑스주의적 입장에서는 '포스트-구조주의적' 논의들을 급진적으로 전유하는 것이 지적 시도라고 할 수 있다. 통상적인 맑스주의적 프레임이 중시하는 계급적 적대의 프레임을 다양한 사회적 적대들을 어떻게 '내부화'해낼 수 있을 것인가, 나아가 계급적 주체들로 환원되지 않는 다양한 사회적 저항주체들을 어떻게 기존의 프레임을 급진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다룰 수 있을 것인가하는 점에 급진민주주의론적 문제의식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독재, 더 나아가 사회를 '다층적인 독점복합체'로 파악하는 기초 위에서 논의를 전개한다. 탈근대주의를 포함해서 다양한 포스트-구조주의가 맑스주의를

포함해서 구조주의적 시각에 던지는 도전의 핵심에는 ‘차이’의 인식론과 차이의 정치학이 존재한다. 급진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무한대로(limit) 급진적으로 확장된 민주주의’는 모든 사회적 차별들이 그 자체로 존중되는 ‘차이’가 되는 것이 될 것이다. 그것은 아마도 ‘단일한 중심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이 복수화되고 다수화되며’ “중심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이 과잉이 되는”(고병권·이진경 외, 2008: 177-8) 어떤 상태일 것이며, 모든 차이에 차별의 흔적이 제거되고 차이 그 자체가 되는 어떤 상태일 것이다. 또한 급진‘민주주의’는 민주주의론인 한에서 사회주의와 구별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내포한 잠재적인 평등주의적 원리(1인 1표주의, 민의 자기통치)를 급진적으로 확장하게 되면 사회주의론이 대결하는 경제적·계급적 불평등을--사적 소유 자체를 폐지하지는 못하지만--최대주의적으로 공적·정치적으로 규율한 어떤 상태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본다. 아니 그렇게 지향한다. 왜냐하면 “소유, 분배, 통제가 계급에 따라 근본적으로 불평등하게 구조화된 사회에서... 진정한 민주주의를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에는 “사적 이익의 정당성에 대한 공격을 민주적 원칙과 양립하게 만들 수 있는가”(일리, 2008: 59)라는 문제가 존재한다. 그 극대의 지점(민주주의를 급진적으로 확장하는 지점)은, ‘생산수단의 사회화’로 표현되는 사회주의의 지점과 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급진민주주의의 차원은 경제적 의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사회적 차원에서 권력관계의 평등화를 포함한다. 급진민주주의는 물론 중앙정치적 차원을 넘어서서, 미시정치적 생활세계영역으로, 풀뿌리 수준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지구화 시대 급진민주주의는 국민국가적 차원을 넘는 글로벌한 차원으로 확장되어야 한다(조희연, 2006d). 결국 필자는 급진민주주의의 이론적 구성이 “탈자유주의적(post-liberal) 민주주의의 시각에서 마르크스주의와 포스트-구조주의의 합리적 핵심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구성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조희연·김동춘 편, 2008:30).

3. ‘순수폭력’으로서의 국가와 ‘순수정치’로서의 광주교문⁹⁾

여기서는 급진민주주의적 시각에서 광주사건의 민주주의론적 재규정을 시도해보고자 한다¹⁰⁾.

먼저 정치는 사회 구성원들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적인 의제들의 공적 결정을 둘러싼 집단 및 개인들의 상호관계와 활동이다. 그런데 현실의 정치는 언제나 정치의 출발점이 되는 사회(혹은 사회구성원)들과 괴리되어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성격을 갖는 정치는 근대사회에서는 대의민주주의라는 형태로 구체화되었다. 이러한 근대대의민주주의에서 정치와 사회의 관계는 사회의 구성원인 민(民)이 정치의 주체로서의 상징적 위치를 부여받은 반면에, 반대로 정치는 사회구성원들의 ‘협약적 위임’을 통하여 대의자들의 정치로 협애화되었다.

이러한 정치와 사회의 관계에 대해서는 통상 제도정치중심주의적 시각과 정치와 사회(사회 내의 정치적 활동) 간의 경계에 대한 고정화된 시각이 존재한다. 전자에 따를 때, 근대대의민주주의에서 정치는 제도화된 정치를 의미하고 이것의 외부에 있는 것은 비(非)정치로 규정된다. 근대대의민주주의는 한편에서는 소수의 상층집단에 한정되어 있던 정치를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자들의 정치로 재정립하여

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정치를 제도정치로 한정하는 한계를 가지는 이중성을 드러낸다.

정치는 기본적으로 사회 내에 존재하는 정치적인 사회적 활동 중의 일부를 제도정치로 개념화하고 나머지는 사회적 활동으로 개념화한 것에 다름아니다. 이런 점에서 모든 정치는 정치와 비정치 사이의 특정하게 구조화된 ‘경계(boundary)’를 갖는다. 정치와 비정치의 경계의 가변성과 구성성은 경계 자체가 부단히 재구성되고 주체적으로 허물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근대민주주의 하에서 특정하게 경계지워진 정치가 존재하고 그 정치는 특정한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할 때, 그러한 경계를 허물고 상대화하기 위한 활동들이 존재한다. 나아가 제도정치와 그 ‘경계 외부의 정치’ 간의 ‘경계(境界)정치’도 존재한다.

다음으로 정치와 사회의 경계는 결코 고정화된 것이 아니며, 정치와 사회의 역동적 상호관계에 의해서 구조화된 어떤 것이라고 파악되어야 한다. 무엇이 정치인가하는 정치의 ‘경계’와 정치에서 무엇이 의제화되고 무엇이 정책화되어야 하는가하는 정치의 ‘내용’과 관련해서, 민주주의가 결코 고정물이 아니다.

그렇다면 근대민주주의 하에서의 정치의 경계, 정치의 내용을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여기서 필자는 민주주의를 단순히 선거절차나 제도정치의 규칙이 아니라 계급적·사회적 투쟁과정이자 그러한 투쟁에 의해서 정치의 경계와 내용이 규정되는 공간이라고 규정한다. 이러한 전제 위에서 볼 때, 근대민주주의 하의 정치(이것을 민주주의 정치라고 표현하자)에서는 (민주주의적) ‘정치’의 국가화’와 ‘정치’의 사회화’를 지향하는 두가지 흐름이 존재한다. 정치의 국가화라고 하는 것은 정치라고 하는 장이 국가화된 지배에 대한 동기가 창출되는 장으로 기능하도록 하려는 시도를 의미한다. 반대로 정치의 사회화라고 했을 때 국가에 의해서 정치의 특정한 구조화--그 한계와 내용, 사회적 이슈에 대한 정치의 반영 등--에 대응하여 민중들이 자신들의 요구와 지향에 부응하는 형태로 정치를 변화시키고 확장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의미한다. 특정한 방식으로 구조화된 제도정치로 정치를 한정하고자 하는 정치의 국가화에 대항하여 정치를 사회화하고자 하는 시도가 제기되는 것이다. 정치의 국가화는 기존하는 정치적 질서--특히 근대 이후에는 근대대의민주주의--가 지배와 충돌하지 않으면서 유지되도록 하는 노력인 반면에 사회의 정치화는 기존정치의 변화를 추구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변화의 동력은 바로 사회 내에서 아래로부터 이루어지는 ‘사회’의 정치화’를 위한 노력과 활동이 된다. 이러한 ‘정치’의 사회화’를 추구하는 운동이 바로 ‘사회적 정치’이며, 그러한 사회적 정치의 조직화된 형태가 바로 운동정치(사회운동)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제들을 통하여 작동하는 ‘정치’의 국가화’에 대응하여 정치를 사회의 요구와 일치시켜 변화시키고자 하는 ‘정치’의 사회화’ 시도들이 다양하게 전개되게 된다. 정치의 사회화를 지향하는 행위들은 그 정치적 지향성에 따라서 보면 온건한 타협적 흐름과 급진적 흐름이 존재할 수 있다. 타협적 흐름은 기성 정치의 경계를 넘으면서도 그것이 기성의 정치를 근원적으로 부정하지 않으면서 기성의 정치를 ‘개혁’하고자 하는 흐름이라고 한다면, 급진적 흐름은 기성의 정치에 대한 단절과 변혁을 지향하는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근대대의민주주의의 맥락에서 온건한 흐름은 근대대의민주주의의 존재론적 긍정속에서 이를 민주주의의 이상에 맞추어 보완하고 개혁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표현된다고 할 수 있다.

‘정치’의 사회화’의 흐름은 과정적 측면에서 정치를 사회구성원의 직접적인 자기결정의 과정으로 만들고자 하는 흐름과, 내용적 측면에서 사회구성원의 요구와 정치를 일체화시키고자 하는 흐름이 존재